

# 인천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

2025.12.



---

# 인천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

---

2025. 12.





# 제 출 문

인천광역시 귀하

본 보고서를 인천광역시 『인천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 〈일러두기〉

---

- ▶ 이 보고서는 「인천광역시(시민소통담당관실)」이 주관하고 「키데아랩」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록한 자료입니다.
  - ▶ 이 보고서를 외부에 대여, 열람 및 복사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시에는 「인천광역시(시민소통담당관실)」의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합니다.
  - ▶ 보고서의 통계 수치는 반올림상의 차이로 인해 각 항목의 합과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소수점의 차이 또는 복수응답 항목의 구성비 합계가 100.0%를 초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

# 【차 례】

##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1. 조사 추진 배경 .....	1
1.2. 연구 목적과 의의 .....	1
2. 조사의 범위 및 설계 .....	2
2.1. 조사 범위 및 내용 .....	2
2.2. 조사 방법 및 표본 설계 .....	3
2.3. 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 .....	4
3.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성과 향후 기대효과 .....	4

## II. 인천광역시 인권실태 조사 결과

1. 인권 인식에 관한 질문 .....	7
1.1. 기본적 인권 보호 관련 인지도 .....	7
1.2.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인지도 .....	10
2. 인권 실태에 관한 질문 .....	13
2.1.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 .....	13
2.2. 인천광역시에서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	16
2.3. 인천광역시에서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 .....	23
2.4. 시민을 위해 역점을 두고 보완해야 하는 분야 .....	32
2.5. 인권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 .....	39
3. 인권 침해·차별에 관한 질문 .....	44

3.1. 인권 침해·차별 경험 .....	44
3.2. 영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	48
3.3. 인권 침해·차별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인식 .....	52
3.4.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처 방안 인지 수준 .....	55
3.5.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대처 유형 .....	58
3.6. 인권 침해·차별 관련 인천광역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	65
3.7. 5년 전 대비 인천광역시 인권 상황 개선 여부 .....	70
4. 인권교육 관련 질문 .....	73
4.1. 본인 업무의 인권보장 관련성 .....	73
4.2. 인권교육 경험 여부 .....	76
4.3. 인권교육 경험 장소 .....	79
4.4. 인권교육 필요도 .....	82
4.5. 인권교육 실시 시 중요 내용 .....	85

### III. 결론 및 시사점

1. 인천광역시의 인권 기본계획 .....	91
2. 주요 조사 결과의 의미 .....	92
3. 정책적 시사점 .....	93

## 【표 차례】

〈표 1〉 주요 조사 항목 .....	3
〈표 2〉 응답자 특성 .....	4
〈표 3〉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기본적 인권보호 관련 인지도 .....	8
〈표 4〉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기본적 인권보호 관련 인지도 .....	9
〈표 5〉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조례 관련 인지도 .....	11
〈표 6〉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조례 관련 인지도 .....	12
〈표 7〉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천광역시 인권 존중 여부 .....	14
〈표 8〉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천광역시 인권 존중 여부 .....	15
〈표 9〉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1순위, 1/2) .....	17
〈표 10〉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1순위, 2/2) .....	18
〈표 11〉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1순위, 1/2) .....	19
〈표 12〉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1순위, 2/2) .....	19
〈표 13〉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중복, 1/2) .....	20
〈표 14〉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중복, 2/2) .....	21
〈표 15〉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중복, 1/2) .....	22
〈표 16〉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중복, 2/2) .....	22
〈표 17〉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1순위, 1/3) .....	24
〈표 18〉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1순위, 2/3) .....	25
〈표 19〉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1순위, 3/3) .....	25
〈표 20〉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1순위, 1/3) .....	26
〈표 21〉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1순위, 2/3) .....	27
〈표 22〉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1순위, 3/3) .....	27
〈표 23〉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중복, 1/3) .....	28
〈표 24〉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중복, 2/3) .....	29
〈표 25〉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중복, 3/3) .....	29
〈표 26〉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중복, 1/3) .....	30
〈표 27〉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중복, 2/3) .....	31
〈표 28〉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중복, 3/3) .....	31
〈표 29〉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보완해야 할 인권 정책 분야 (1순위, 1/2) .....	33
〈표 30〉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보완해야 할 인권 정책 분야 (1순위, 2/2) .....	34
〈표 31〉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보완해야 할 인권 정책 분야 (1순위, 1/2) .....	35

〈표 32〉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보완해야 할 인권 정책 분야 (1순위, 2/2) ……	35
〈표 33〉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보완해야 할 인권 정책 분야 (중복, 1/2) ……	36
〈표 34〉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보완해야 할 인권 정책 분야 (중복, 2/2) ……	37
〈표 35〉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보완해야 할 인권 정책 분야 (중복, 1/2) ……	38
〈표 36〉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보완해야 할 인권 정책 분야 (중복, 2/2) ……	38
〈표 37〉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 (1순위) ……	40
〈표 38〉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 (1순위) ……	41
〈표 39〉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복) ……	42
〈표 40〉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복) ……	43
〈표 41〉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중복, 1/2) ……	45
〈표 42〉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중복, 2/2) ……	46
〈표 43〉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 경험 (중복, 1/2) ……	47
〈표 44〉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 경험 (중복, 2/2) ……	47
〈표 45〉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영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중복, 1/2) ……	49
〈표 46〉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영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중복, 2/2) ……	50
〈표 47〉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영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중복, 1/2) ……	51
〈표 48〉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 경험 (중복, 2/2) ……	51
〈표 49〉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인식 ……	53
〈표 50〉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인식 ……	54
〈표 51〉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처방법 인지도 ……	56
〈표 52〉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처방법 인지도 ……	57
〈표 53〉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대처 유형 (1순위, 1/2) ……	59
〈표 54〉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대처 유형 (1순위, 2/2) ……	60
〈표 55〉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대처 유형 (1순위,1/2) · 61	
〈표 56〉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대처 유형 (1순위,2/2) · 61	
〈표 57〉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행동 (중복, 1/2) ……	62
〈표 58〉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행동 (중복, 2/2) ……	63
〈표 59〉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행동 (중복, 1/2) ……	64
〈표 60〉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행동 (중복, 2/2) ……	64
〈표 61〉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침해 관련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1순위) ……	66
〈표 62〉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1순위) ……	67
〈표 63〉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침해 관련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중복) ……	68
〈표 64〉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중복) ……	69
〈표 65〉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5년 전 대비 인권상황 개선 여부 ……	71

〈표 66〉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5년 전 대비 인권상황 개선 여부 .....	72
〈표 67〉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본인 업무의 인권보장 관련성 .....	74
〈표 68〉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본인 업무의 인권보장 관련성 .....	75
〈표 69〉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교육 경험 여부 .....	77
〈표 70〉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교육 경험 여부 .....	78
〈표 71〉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교육 경험 장소 .....	80
〈표 72〉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교육 경험 장소 .....	81
〈표 73〉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교육 필요도 .....	83
〈표 74〉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교육 필요도 .....	84
〈표 75〉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침해 관련 인권교육 실시 시 중요 내용 (1순위) .....	86
〈표 76〉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교육 실시 시 중요 내용 (1순위) .....	87
〈표 77〉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교육 실시 시 중요 내용 (중복) .....	88
〈표 78〉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교육 실시 시 중요 내용 (중복) .....	89

## 【그림 차례】

〈그림 1〉 기본적 인권 보호 인지도 .....	7
〈그림 2〉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인지도 .....	10
〈그림 3〉 인천광역시 인권 존중 여부 .....	13
〈그림 4〉 인천광역시에서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	16
〈그림 5〉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 .....	23
〈그림 6〉 시민을 위해 역점을 두고 보완해야 하는 분야 .....	32
〈그림 7〉 인권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 .....	39
〈그림 8〉 인권 침해·차별 경험 .....	44
〈그림 9〉 영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	48
〈그림 10〉 인권 침해·차별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인식 .....	52
〈그림 11〉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처방안 인지 수준 .....	55
〈그림 12〉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행동 .....	58
〈그림 13〉 인권침해 관련 인천광역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	65
〈그림 14〉 5년 전 대비 인천광역시 인권상황 개선 여부 .....	70
〈그림 15〉 본인 업무의 인권보장 관련성 .....	73
〈그림 16〉 인권교육 경험 여부 .....	76
〈그림 17〉 인권교육 경험 장소 .....	79
〈그림 18〉 인권교육 필요도 .....	82
〈그림 19〉 인권교육 시 중요 내용 .....	85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조사 추진 배경

인권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자, 시민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의 기준이다. 오늘날 지방정부의 역할이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공동체의 포용성 제고까지 확대되면서, 인권은 도시 정책의 중심 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2019년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인권 존중 도시로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2020년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체계적인 인권행정 기반을 다져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실제 인권 경험과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디지털 전환, 고령화, 경제적 불평등 심화, 이주민 증가, 사회적 갈등 확대 등)은 새로운 유형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차별과 혐오표현의 확산, 청소년과 고령층 등 집단별 인권 사각지대,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권리 침해, 사회·경제적 지위에 기반한 격차 등 복합적인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체감 경험과 목소리를 면밀하게 살피는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25년을 시작으로 새로운 인권정책의 5개년 주기가 개시됨에 따라, 근거 기반 인권정책의 설계를 위해 시민 인권의식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2025년 인천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향후 인권보장 정책의 기초자료이자 시민 참여형 인권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1.2. 연구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인천시민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인권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수집·분석함으로써, 인권보

장 정책의 현황과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시민 인지 수준을 파악하여, 인권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관심사, 정보 접근성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인권교육정책과 홍보전략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둘째,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인권 문제를 드러내고,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에는 인권침해 유형별 경험, 차별 발생 장소, 대처 방식, 소득수준과의 상관 인식 등을 포함하였다.

셋째, 미래 인권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시민 요구 파악을 목표로 하였다. 응답자들은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 보완이 필요한 정책영역,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요건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본 실태조사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인권행정의 정교화를 위한 출발점이며,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정책의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로 기능한다. 특히, 조사 결과는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으로, 정책 현장의 실효성과 시민 중심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2. 조사의 범위 및 설계

### 2.1. 조사 범위 및 내용

본 조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내용은 시민의 인권 인식에서부터 인권침해 경험, 차별 양상, 인권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까지 폭넓게 구성되었으며, 조사 문항은 인권인식 영역, 인권실태 영역, 인권 침해·차별 영역, 인권교육 영역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인권인식 영역은 인지도 관련 2개 문항, 인권실태 영역은 5개 문항, 인권 침해·차별 영역은 7개 문항, 인권교육 영역은 5개 문항으로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문항 설계는 시민의 인권 감수성 수준, 제도 인식 정도, 실제 경험, 정책 수요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표 1〉 주요 조사 항목

분류	조사 내용
인권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 인권의 보호에 대한 인지도</li> <li>-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인지도</li> </ul>
인권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li> <li>- 인천광역시에서 인권 침해·차별 발생 장소</li> <li>- 인천광역시에서 인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li> <li>-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인권 정책을 보완해야 할 분야</li> <li>-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li> </ul>
인권 침해·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침해·차별 경험 (최근 3년 기준)</li> <li>- 인권 침해·차별 경험 영역 (최근 3년 기준)</li> <li>- 인권 침해·차별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인식</li> <li>-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li> <li>-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행동</li> <li>- 인권 침해·차별 예방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li> <li>- 5년 전 대비 인천광역시의 인권 상황 개선 정도</li> </ul>
인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업무와 인권보장과의 관련성</li> <li>- 인권 교육 경험 여부</li> <li>- 인권 교육 경험 장소</li> <li>- 인권 교육 필요도</li> <li>- 인권 교육 실행 시 가장 중요한 내용</li> </ul>
응답자 개인 특성 문항	성별, 거주 지역, 장애 여부, 이주 여부, 최종학력, 직업

## 2.2. 조사 방법 및 표본 설계

조사 방법은 온라인 패널 기반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고령층 및 일부 지역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 PC를 활용한 면접 방식으로 병행 조사하였다. 이러한 혼합형 조사 방식은 연령·지역별 응답률을 보완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표본설계는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별·연령대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표본추출은 규모비례계통추출(PPS :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을 적용하여 지역 특성과 모집단 구성비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연령·거주지 분포가 인천시 전체 인구 구조와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며, 장애 여부, 이주민 여부, 학력, 직업군 등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변수가 함께 수집되었다.

이와 같은 표본 설계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여, 인천시민 전체의 인권의식 수준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는 2025년 11월 3일(월)부터 11월 17일(월)까지 약 2

주간 실시되었다.

### 2.3. 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

본 조사 결과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명)	구성비 (%)	구분		사례수 (명)	구성비 (%)
전 체		(1003)	100.0	전 체		(1003)	100.0
성별	여성	(563)	56.1	이주민 여부	예	(18)	1.8
	남성	(440)	43.9		아니오	(985)	98.2
연령	10대	(59)	6.0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6.5
	20대	(152)	15.2		고등학교 졸업	(258)	25.7
	30대	(177)	17.6		대학 졸업	(610)	60.8
	40대	(202)	20.1		대학원 졸업 이상	(70)	7.0
	50대	(220)	21.9	직업	무직	(114)	11.4
	60대 이상	(193)	19.2		전문직	(63)	6.3
거주 지역	계양구	(98)	9.7		관리직	(44)	4.4
	남동구	(164)	16.4		사무직	(328)	32.7
	미추홀구	(136)	13.6		판매직	(32)	3.2
	부평구	(167)	16.7		서비스직	(66)	6.6
	서구	(213)	21.2		생산직	(53)	5.3
	연수구	(134)	13.4		주부·학생 등	(213)	21.2
	중·동·강화·옹진	(91)	9.0	시간제 노동자	(57)	5.7	
	장애 여부	장애인	(56)	5.6	기타	(33)	3.2
비장애인		(947)	94.4				

### 3.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성과 향후 기대 효과

본 실태조사는 인천광역시 인권정책의 근거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첫째, 제2차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5~2029)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로서 기능을 한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는 기본계획의 세부 전략목표 설정, 세부과제 설계, 우선순위 선정 등 세부적인 정책 설계 전 과정에 반영될 것이다.

둘째, 인권교육·홍보 정책의 세부 방향 수립에 활용되며, 시민과 공공부문의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셋째, 인권 침해·차별 실태 분석은 지역사회 내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근거가 된다.

넷째, 시민의 인권 관점에서 도시의 문제를 재구성함으로써, 인천이 지향하는 “시민이 행복한 포용도시” 구축에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조사는 인권을 도시 행정의 중심 가치로 확립하고, 시민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인권 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II.

# 인천광역시 인권실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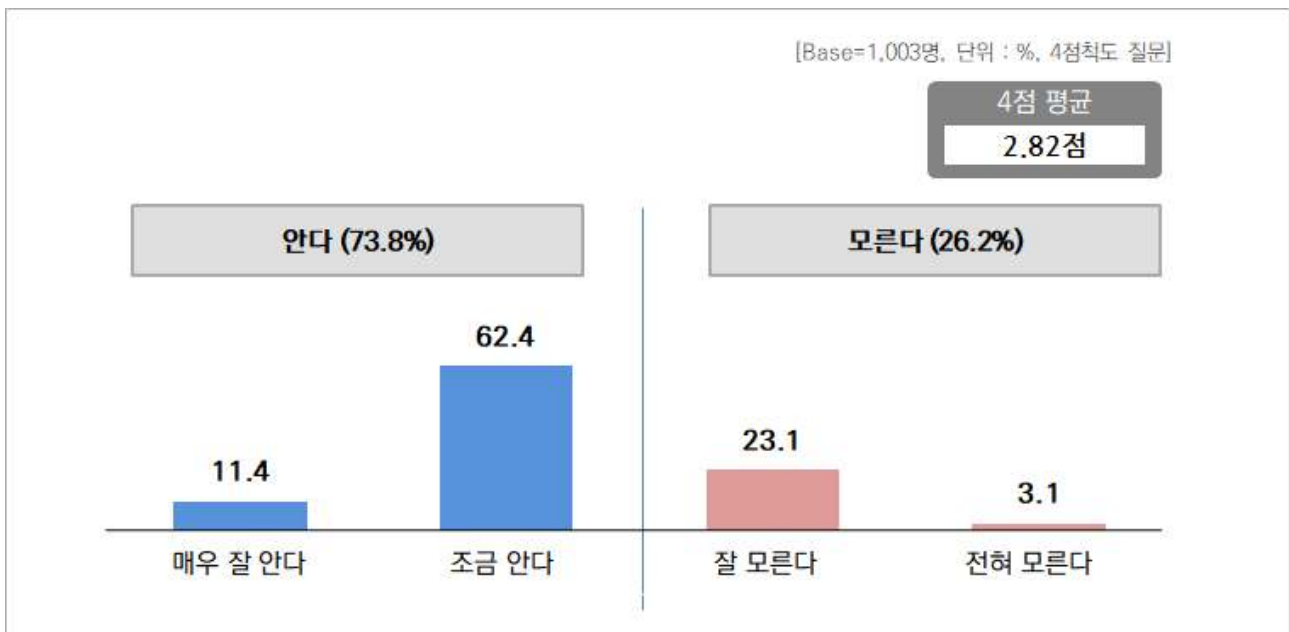
## 1. 인권 인식에 관한 질문

### 1.1. 기본적 인권 보호 관련 인지도

#### 1) 전체 인지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의 보호(노동권, 건강권, 이동권, 주거권, 교육권 등)에 대한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인천시민들의 기본적 인권보호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응답자 중 73.8%가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매우 잘 안다(11.4%)와 조금 안다(62.4%)는 응답을 합산한 수치이다. 반면,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은 26.2%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잘 모른다 23.1%, 전혀 모른다 3.1%를 차지하였다. 과반수 이상의 시민이 기본적 인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4분의 1에 달하는 시민들의 관련 인지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기본적 인권 보호 인지도



## 2) 응답자 특성별 인지도 비교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69.1%)보다는 남자(79.8%)의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인지도가 약10%p 가량 높게 조사되어 성별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70.3%), 50대(75.0%), 60대 이상(83.9%)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비교적 고른 인지도를 보였으나, 부평구(79.6%)와 연수구(78.4%) 특정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표 3〉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기본적 인권보호 관련 인지도

구분		사례수 (명)	①매우 잘안다	②조금 안다	③잘 모른다	④전혀 모른다	긍정률 (①+②)	부정률 (③+④)	4점척도 평균점
전 체		(1003)	11.4	62.4	23.1	3.1	73.8	26.2	2.82
성별	여성	(563)	9.1	60.0	26.8	4.1	69.1	30.9	2.74
	남성	(440)	14.3	65.5	18.4	1.8	79.8	20.2	2.92
연령	10대	(59)	15.3	54.2	25.4	5.1	69.5	30.5	2.80
	20대	(152)	15.1	57.2	23.0	4.6	72.4	27.6	2.83
	30대	(177)	11.3	56.5	26.6	5.6	67.8	32.2	2.73
	40대	(202)	9.9	60.4	25.7	4.0	70.3	29.7	2.76
	50대	(220)	8.6	66.4	24.5	0.5	75.0	25.0	2.83
	60대 이상	(193)	11.9	72.0	15.0	1.0	83.9	16.1	2.95
거주 지역	계양구	(98)	9.2	56.1	30.6	4.1	65.3	34.7	2.70
	남동구	(164)	14.6	58.5	23.8	3.0	73.2	26.8	2.85
	미추홀구	(136)	11.8	58.8	26.5	2.9	70.6	29.4	2.79
	부평구	(167)	9.6	70.1	16.8	3.6	79.6	20.4	2.86
	서구	(213)	11.7	62.9	21.6	3.8	74.6	25.4	2.83
	연수구	(134)	12.7	65.7	19.4	2.2	78.4	21.6	2.89
	중·동·강화·옹진	(91)	7.7	61.5	29.7	1.1	69.2	30.8	2.76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4점척도 질문]

장애인(76.8%) 응답자가 비장애인(73.6%) 응답자 대비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인지도가 소폭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 졸업(76.1%), 대학원 졸업 이상(75.7%)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중졸 이하

(72.3%), 고등학교 졸업(68.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70% 전 후대의 고른 인지도를 보였으며, 전문직(85.7%)과 관리직(81.8%)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표 4〉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기본적 인권보호 관련 인지도

구분		사례수 (명)	①매우 잘안다	②조금 안다	③잘 모른다	④전혀 모른다	긍정률 (①+②)	부정률 (③+④)	4점척도 평균(점)
전 체		(1003)	11.4	62.4	23.1	3.1	73.8	26.2	2.82
장애 여부	장애인	(56)	19.6	57.1	19.6	3.6	76.8	23.2	2.93
	비장애인	(947)	10.9	62.7	23.3	3.1	73.6	26.4	2.81
이주민 여부	예	(18)	22.2	50.0	22.2	5.6	72.2	27.8	2.89
	아니오	(985)	11.2	62.6	23.1	3.0	73.8	26.2	2.82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15.4	56.9	20.0	7.7	72.3	27.7	2.80
	고등학교 졸업	(258)	6.6	61.6	28.7	3.1	68.2	31.8	2.72
	대학 졸업	(610)	12.1	63.9	21.3	2.6	76.1	23.9	2.86
	대학원 졸업 이상	(70)	18.6	57.1	21.4	2.9	75.7	24.3	2.91
직업	무직	(114)	11.4	53.5	26.3	8.8	64.9	35.1	2.68
	전문직	(63)	19.0	66.7	12.7	1.6	85.7	14.3	3.03
	관리직	(44)	18.2	63.6	18.2	0.0	81.8	18.2	3.00
	사무직	(328)	12.2	63.7	22.0	2.1	75.9	24.1	2.86
	판매직	(32)	12.5	62.5	25.0	0.0	75.0	25.0	2.88
	서비스직	(66)	4.5	65.2	25.8	4.5	69.7	30.3	2.70
	생산직	(53)	11.3	56.6	30.2	1.9	67.9	32.1	2.77
	주부·학생 등	(213)	8.9	62.4	25.8	2.8	71.4	28.6	2.77
	시간제 노동자	(57)	10.5	61.4	22.8	5.3	71.9	28.1	2.77
	기타	(33)	9.1	75.8	15.2	0.0	84.8	15.2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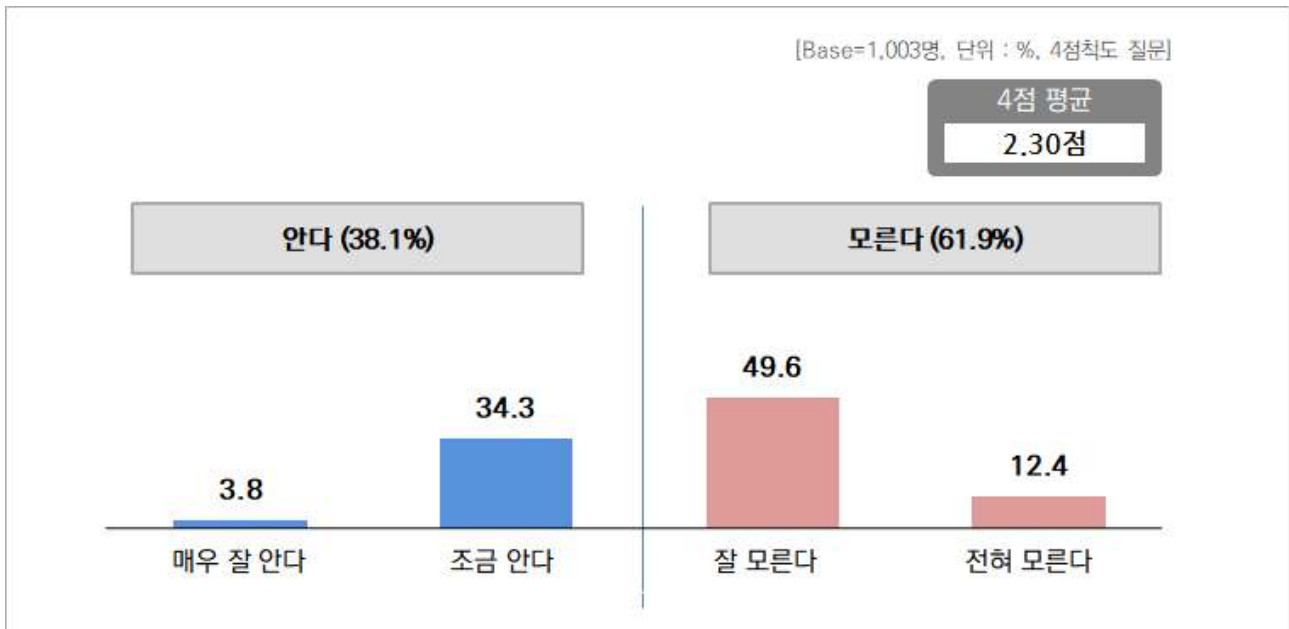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4점척도 질문]

## 1.2.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인지도

### 1) 전체 인지도

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9년 1월 제정, 시민의 권리와 협력,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인지도는 38.1%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시민 10명중 6명 이상이 인권조례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안다(38.1%)’는 응답은 매우 잘 안다(3.8%)와 조금 안다(34.3%)를 합한 수치이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61.9%(잘 모른다 49.6%, 전혀 모른다 12.4%) 수준으로 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인천시민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인지도



### 2) 응답자 특성별 인지도 비교

성별로는 남자(39.5%)가 여자(36.9%)보다 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응답자층에서 46.1%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기록했다. 40대 응

답자의 66.8%, 50대 응답자의 66.4%가 ‘잘 모른다’는 응답하여 중고령층에서의 조례 관련 정보 접근성 및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 인지도는 중·동·강화·옹진 지역 47.3%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계양구(68.4%)와 미추홀구(65.4%)에서는 조례 존재 자체를 ‘잘 모른다’는 비율이 높게 집계되었다.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지역 특성과는 무관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조례 관련 인지도

구분		사례수 (명)	①매우 잘안다	②조금 안다	③잘 모른다	④전혀 모른다	긍정률 (①+②)	부정률 (③+④)	4점척도 평균(점)
전 체		(1003)	3.8	34.3	49.6	12.4	38.1	61.9	2.30
성별	여성	(563)	3.6	33.4	48.7	14.4	36.9	63.1	2.26
	남성	(440)	4.1	35.5	50.7	9.8	39.5	60.5	2.34
연령	10대	(59)	5.1	35.6	45.8	13.6	40.7	59.3	2.32
	20대	(152)	5.9	35.5	43.4	15.1	41.4	58.6	2.32
	30대	(177)	6.2	30.5	45.8	17.5	36.7	63.3	2.25
	40대	(202)	4.0	29.2	53.0	13.9	33.2	66.8	2.23
	50대	(220)	1.8	31.8	55.5	10.9	33.6	66.4	2.25
	60대 이상	(193)	1.6	44.6	48.7	5.2	46.1	53.9	2.42
거주 지역	계양구	(98)	0.0	31.6	54.1	14.3	31.6	68.4	2.17
	남동구	(164)	2.4	36.0	50.0	11.6	38.4	61.6	2.29
	미추홀구	(136)	6.6	27.9	50.7	14.7	34.6	65.4	2.26
	부평구	(167)	3.6	31.7	49.7	15.0	35.3	64.7	2.24
	서구	(213)	5.2	34.7	52.6	7.5	39.9	60.1	2.38
	연수구	(134)	4.5	35.8	47.0	12.7	40.3	59.7	2.32
	중·동·강화·옹진	(91)	2.2	45.1	38.5	14.3	47.3	52.7	2.35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4점척도 질문]

장애여부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응답자(39.3%)가 비장애인 응답자(38.0%)보다 시민인권 과 조례 관련 인지도가 소폭 높게 나타났다. 학력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잘 모른다’에 대한 응답이 고등학교 졸업 63.2%, 대학 졸업 62.8%, 대학원 졸업 이상 57.1%, 중졸 이하 53.8%로 조례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인지도는 직종별 편차

를 보였다. ‘잘 모른다’에 대한 응답은 무직(68.4%), 생산직(67.9%), 그리고 시간제 노동자(66.7%)로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직업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관리직(56.8%)과 전문직(54.0%)에서 ‘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조례 관련 인지도

구분		사례수 (명)	①매우 잘안다	②조금 안다	③잘 모른다	④전혀 모른다	긍정률 (①+②)	부정률 (③+④)	4점척도 평균(점)
전 체		(1003)	3.8	34.3	49.6	12.4	38.1	61.9	2.30
장애 여부	장애인	(56)	8.9	30.4	53.6	7.1	39.3	60.7	2.41
	비장애인	(947)	3.5	34.5	49.3	12.7	38.0	62.0	2.29
이주민 여부	예	(18)	16.7	33.3	44.4	5.6	50.0	50.0	2.61
	아니오	(985)	3.6	34.3	49.6	12.5	37.9	62.1	2.29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7.7	38.5	41.5	12.3	46.2	53.8	2.42
	고등학교 졸업	(258)	2.7	34.1	51.6	11.6	36.8	63.2	2.28
	대학 졸업	(610)	3.9	33.3	49.8	13.0	37.2	62.8	2.28
	대학원 졸업 이상	(70)	2.9	40.0	47.1	10.0	42.9	57.1	2.36
직업	무직	(114)	4.4	27.2	50.9	17.5	31.6	68.4	2.18
	전문직	(63)	6.3	47.6	41.3	4.8	54.0	46.0	2.56
	관리직	(44)	6.8	50.0	40.9	2.3	56.8	43.2	2.61
	사무직	(328)	4.3	33.2	47.6	14.9	37.5	62.5	2.27
	판매직	(32)	9.4	43.8	37.5	9.4	53.1	46.9	2.53
	서비스직	(66)	3.0	34.8	53.0	9.1	37.9	62.1	2.32
	생산직	(53)	5.7	26.4	54.7	13.2	32.1	67.9	2.25
	주부·학생 등	(213)	1.9	32.9	52.6	12.7	34.7	65.3	2.24
	시간제 노동자	(57)	0.0	33.3	54.4	12.3	33.3	66.7	2.21
	기타	(33)	0.0	36.4	60.6	3.0	36.4	63.6	2.33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4점척도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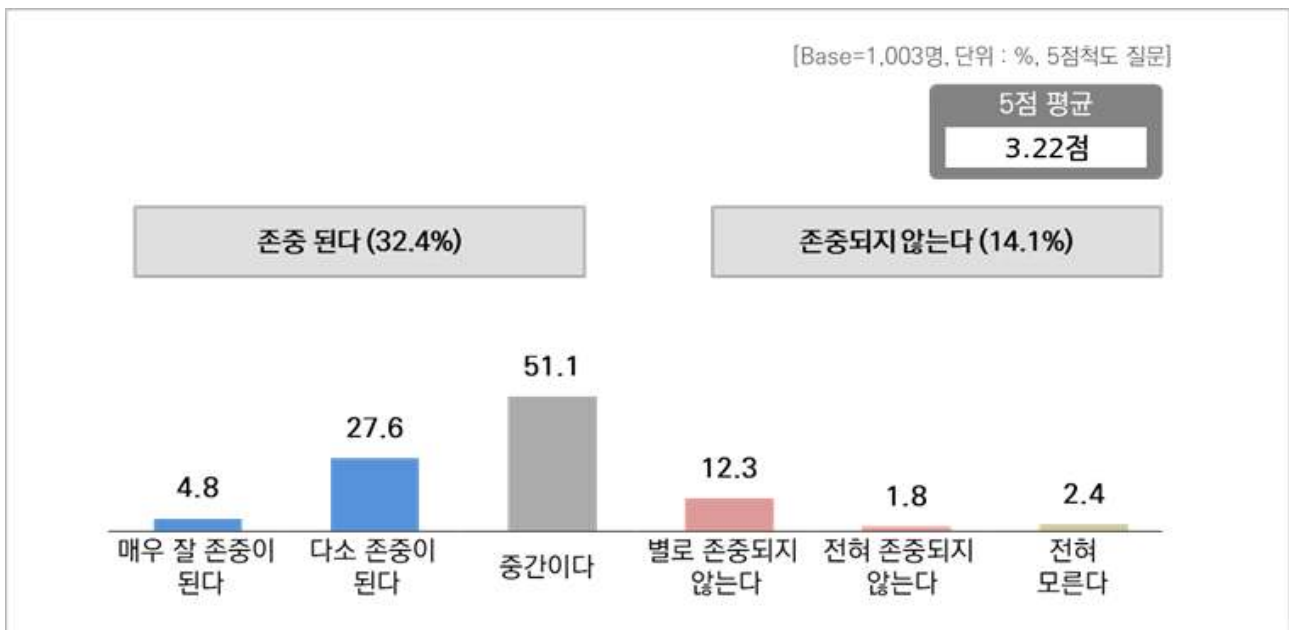
## 2. 인권 실태에 관한 질문

### 2.1.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

#### 1) 전체 인식

인천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 존중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정도를 파악한 결과, 인천시민의 32.4%가 '존중된다'(매우 존중된다 4.8% + 다소 존중된다 27.6%)고 응답하였다. 반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천시민 3명 중 1명 이상은 지역사회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3〉 인천광역시 인권 존중 여부



#### 2) 응답자 특성별 인지도 비교

성별로는 남자(33.4%)가 여자(31.6%)보다 인권 존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10대(45.8%), 20대(44.1%)에서 긍정적 응답이 두드러졌

으며, 다음으로는 60대 이상(32.6%)과 50대(31.4%) 순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년층이 인권인식에 대해 더 민감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인권존중 인식은 지역별 간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남동구(44.5%)에서 인권 존중에 대한 긍정 응답이 높았으며, 연수구(39.6%) 서구(34.7%)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계양구는 22.4%로 인권존중에 대한 긍정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7〉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천광역시 인권 존중 여부

구분	사례수 (명)	① 매우 잘 존중 된다	② 다소 존중 된다	③ 중간 이다	④ 별로 존중 되지 않는 다	⑤ 전혀 존중 되지 않는 다	⑥ 모른 다	긍정 률 (①+ ②)	중간 (③)	부정 률 (④+ ⑤)	5점 평균 모른 다 제외 (점)	
전 체	(1003)	4.8	27.6	51.1	12.3	1.8	2.4	32.4	51.1	14.1	3.22	
성별	여성	(563)	4.1	27.5	52.0	12.3	1.2	2.8	31.6	52.0	13.5	3.22
	남성	(440)	5.7	27.7	50.0	12.3	2.5	1.8	33.4	50.0	14.8	3.22
연령	10대	(59)	5.1	40.7	42.4	8.5	3.4	0.0	45.8	42.4	11.9	3.36
	20대	(152)	12.5	31.6	45.4	7.2	1.3	2.0	44.1	45.4	8.6	3.48
	30대	(177)	2.3	22.0	53.1	17.5	3.4	1.7	24.3	53.1	20.9	3.02
	40대	(202)	3.5	24.3	57.4	11.4	1.0	2.5	27.7	57.4	12.4	3.18
	50대	(220)	4.1	27.3	51.8	11.4	1.8	3.6	31.4	51.8	13.2	3.21
	60대 이상	(193)	3.1	29.5	49.2	14.5	1.0	2.6	32.6	49.2	15.5	3.20
거주 지역	계양구	(98)	1.0	21.4	59.2	13.3	1.0	4.1	22.4	59.2	14.3	3.09
	남동구	(164)	10.4	34.1	40.9	11.6	2.4	0.6	44.5	40.9	14.0	3.39
	미추홀구	(136)	5.9	22.1	53.7	14.0	2.2	2.2	27.9	53.7	16.2	3.16
	부평구	(167)	1.8	22.2	58.1	13.8	0.6	3.6	24.0	58.1	14.4	3.11
	서구	(213)	5.6	29.1	53.5	8.0	0.9	2.8	34.7	53.5	8.9	3.31
	연수구	(134)	3.7	35.8	46.3	12.7	0.7	0.7	39.6	46.3	13.4	3.29
	중·동·강화·옹진	(91)	2.2	25.3	46.2	16.5	6.6	3.3	27.5	46.2	23.1	3.0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5점척도 질문]

장애여부별로 살펴보면, 인권 존중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정도는 비장애인 응답자(32.5%)가 장애인 응답자(30.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식의 강도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매우 잘 존중된다'는 강한 긍정의 경우 장애인 12.5%로, 비장

에인 4.3%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인권에 대한 인식은 대학원 졸업 이상(42.9%)과 중졸이하(40.4%) 집단에서 긍정응답 비율이 높지만 동시에 ‘존중되지 않는다’는 부정응답 비율도 16.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집단 내에서 인권환경에 대한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직업별로는 관리직(47.7%)과 전문직(46.0%)에서는 긍정응답이 타 직업군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판매직(21.9%)과 서비스직(19.7%)에서는 ‘존중되지 않는다’는 부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천광역시 인권 존중 여부

구분	사례수 (명)	① 매우 잘 존중 된다	② 다소 존중 된다	③ 중간 이다	④ 별로 존중 되지 않는 다	⑤ 전혀 존중 되지 않는 다	⑥ 모른 다	긍정 률 (①+ ②)	중간 (③)	부정 률 (④+ ⑤)	5점 평균 모른 다 제외 (점)	
전 체	(1003)	4.8	27.6	51.1	12.3	1.8	2.4	32.4	51.1	14.1	3.22	
장애 여부	장애인	(56)	12.5	17.9	48.2	16.1	3.6	1.8	30.4	48.2	19.6	3.20
	비장애인	(947)	4.3	28.2	51.3	12.0	1.7	2.4	32.5	51.3	13.7	3.22
이주민 여부	예	(18)	11.1	16.7	55.6	5.6	11.1	0.0	27.8	55.6	16.7	3.11
	아니오	(985)	4.7	27.8	51.1	12.4	1.6	2.4	32.5	51.1	14.0	3.22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1.5	38.5	40.0	13.8	3.1	3.1	40.0	40.0	16.9	3.22
	고등학교 졸업	(258)	5.4	26.4	49.2	14.0	2.3	2.7	31.8	49.2	16.3	3.19
	대학 졸업	(610)	5.1	25.6	53.6	12.0	1.5	2.3	30.7	53.6	13.4	3.21
	대학원 졸업 이상	(70)	2.9	40.0	47.1	7.1	1.4	1.4	42.9	47.1	8.6	3.36
직업	무직	(114)	4.4	25.4	55.3	9.6	0.9	4.4	29.8	55.3	10.5	3.24
	전문직	(63)	7.9	38.1	42.9	9.5	0.0	1.6	46.0	42.9	9.5	3.45
	관리직	(44)	4.5	43.2	36.4	13.6	2.3	0.0	47.7	36.4	15.9	3.34
	사무직	(328)	4.3	23.2	56.4	13.1	1.5	1.5	27.4	56.4	14.6	3.16
	판매직	(32)	6.3	18.8	53.1	18.8	3.1	0.0	25.0	53.1	21.9	3.06
	서비스직	(66)	6.1	25.8	42.4	18.2	1.5	6.1	31.8	42.4	19.7	3.18
	생산직	(53)	5.7	20.8	50.9	9.4	7.5	5.7	26.4	50.9	17.0	3.08
	주부·학생 등	(213)	3.8	31.5	48.8	12.2	2.3	1.4	35.2	48.8	14.6	3.22
	시간제 노동자	(57)	3.5	33.3	47.4	12.3	0.0	3.5	36.8	47.4	12.3	3.29
	기타	(33)	9.1	27.3	57.6	3.0	0.0	3.0	36.4	57.6	3.0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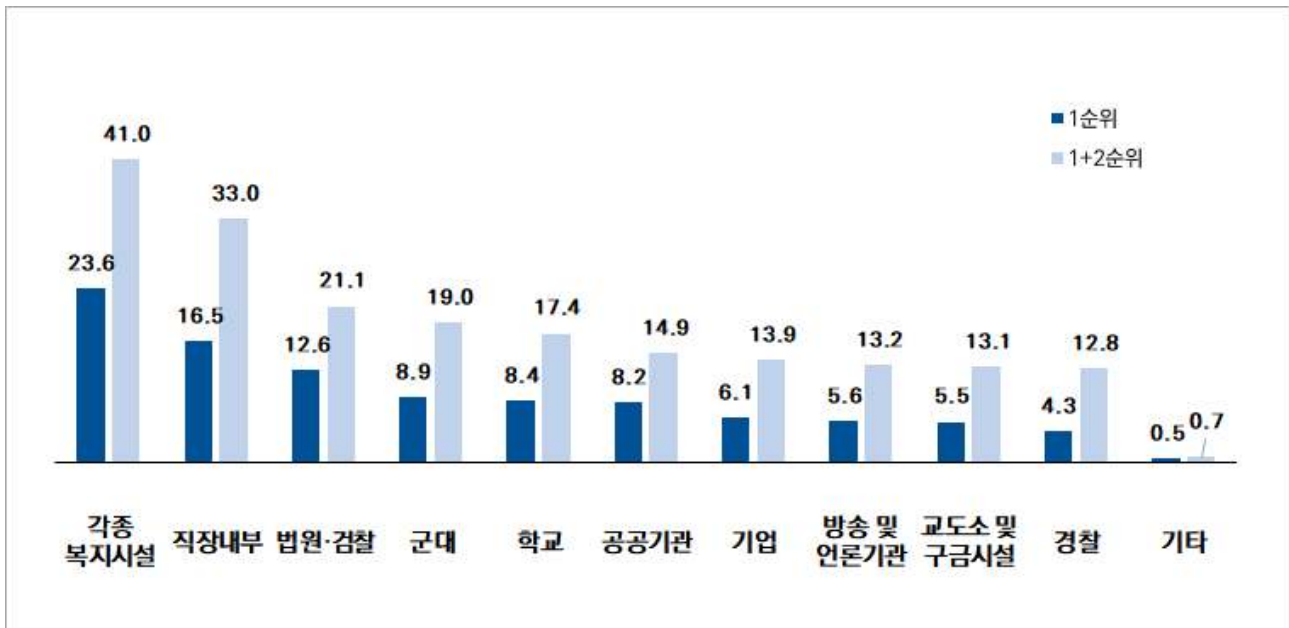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5점척도 질문]

## 2.2. 인천광역시에서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 1) 전체 인식

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차별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장소(1순위 기준)를 조사한 결과, 요양원·생활시설 등의 각종 복지시설(23.6%)과 직장내부(16.5%)가 주요 취약 영역으로 지목되었다. 다음으로는 법원·검찰 12.6%, 군대 8.9%, 학교 8.4%, 공공기관 8.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인천광역시에서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 2) 응답자 특성별 비교

인천광역시에서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1순위 기준)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 직장내부(20.6%)와 학교(10.3%)에서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는 법원·검찰(17.3%)과 군대(10.7%)를 취약한 장소로 지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는 10대(22.0%)와 20대(23.7%)는 직장 내부, 30대는 복지시설(19.8%)과 직장 내부(19.8%)를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응답하였

고, 40대(26.2%)와 50대(25.0%) 그리고 60대 이상(36.3%)의 중장년 연령층은 복지시설을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인식했다. 또한, 거주지역별 분석에서는 인천시 전역에서 ‘복지시설’을 인권 침해·차별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부평구(26.3%), 서구(25.4%), 중·동·강화·옹진(25.3%), 연수구(22.4%), 남동구(22.0%), 계양구(21.4%), 미추홀구(21.3%) 등의 모든 지역에서 인권침해 취약 장소 1순위로 응답하였다.

〈표 9〉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1순위, 1/2)

구분		사례수 (명)	복지 시설	직장 내부	법원 검찰	군대	학교	공공 기관	기업
전 체		(1003)	23.6	16.5	12.6	8.9	8.4	8.2	6.1
성별	여성	(563)	26.5	20.6	8.9	7.5	10.3	8.0	4.4
	남성	(440)	20.0	11.1	17.3	10.7	5.9	8.4	8.2
연령	10대	(59)	8.5	22.0	0.0	15.3	18.6	8.5	6.8
	20대	(152)	12.5	23.7	7.2	11.8	11.2	11.8	6.6
	30대	(177)	19.8	19.8	6.8	10.7	10.2	10.7	5.6
	40대	(202)	26.2	15.3	14.4	9.9	7.9	8.9	4.5
	50대	(220)	25.0	10.5	19.1	7.3	5.9	7.3	7.7
	60대 이상	(193)	36.3	14.0	16.6	3.6	4.7	3.1	5.7
거주 지역	계양구	(98)	21.4	17.3	13.3	8.2	8.2	8.2	5.1
	남동구	(164)	22.0	18.3	14.6	7.3	9.8	6.1	6.7
	미추홀구	(136)	21.3	17.6	14.7	14.7	5.1	9.6	4.4
	부평구	(167)	26.3	14.4	9.6	7.2	10.8	9.0	7.8
	서구	(213)	25.4	16.4	9.4	9.9	6.6	8.0	8.0
	연수구	(134)	22.4	13.4	14.9	7.5	11.2	8.2	3.7
	중·동·강화·옹진	(91)	25.3	18.7	14.3	6.6	6.6	8.8	4.4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표 10〉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1순위, 2/2)

구분		사례수 (명)	방송 및 언론기관	교도소 및 구금시설	경찰	기타
전 체		(1003)	5.6	5.5	4.3	0.5
성별	여성	(563)	6.2	4.1	3.0	0.5
	남성	(440)	4.8	7.3	5.9	0.5
연령	10대	(59)	11.9	5.1	3.4	0.0
	20대	(152)	7.9	2.6	3.9	0.7
	30대	(177)	3.4	4.5	7.9	0.6
	40대	(202)	3.5	5.9	3.5	0.0
	50대	(220)	5.9	6.4	4.5	0.5
	60대 이상	(193)	5.7	7.3	2.1	1.0
거주 지역	계양구	(98)	7.1	8.2	3.1	0.0
	남동구	(164)	7.3	4.3	3.7	0.0
	미추홀구	(136)	0.7	6.6	4.4	0.7
	부평구	(167)	4.2	3.6	6.6	0.6
	서구	(213)	7.0	6.1	3.3	0.0
	연수구	(134)	6.0	7.5	4.5	0.7
	중·동·강화·옹진	(91)	6.6	2.2	4.4	2.2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응답자 특성별(1순위 기준)로 살펴보면, 장애 여부 관계없이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장소로 ‘복지시설’이 공통적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장애인 응답자(41.1%)가 비장애인 응답자(22.6%) 대비 ‘복지시설’을 취약 장소로 인식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 따라 인권침해 취약 장소에 대한 인식이 다소 달랐다. 중졸 이하 학력자는 ‘직장 내부(30.8%)’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고등학교 졸업자(20.9%)와 대학 졸업자(26.4%)는 ‘복지시설’에서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난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모든 분야에서 인권침해가 골고루 발생한다고 인식했으나, 그 중에서도 ‘법원·검찰(18.6%)’을 가장 취약한 장소로 꼽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직업군에서는 인권 침해·차별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요양원·생활시설 등의 각종 ‘복지시설’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무직 응답자의 경우는 ‘직장내부(19.3%)’를 취약 장소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1순위, 1/2)

구분		사례수 (명)	복지 시설	직장 내부	법원 검찰	군대	학교	공공 기관	기업
전 체		(1003)	23.6	16.5	12.6	8.9	8.4	8.2	6.1
장애 여부	장애인	(56)	41.1	7.1	10.7	1.8	8.9	7.1	3.6
	비장애인	(947)	22.6	17.0	12.7	9.3	8.3	8.2	6.2
이주민 여부	예	(18)	5.6	16.7	16.7	5.6	11.1	11.1	0.0
	아니오	(985)	24.0	16.4	12.5	8.9	8.3	8.1	6.2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15.4	30.8	0.0	3.1	15.4	7.7	6.2
	고등학교 졸업	(258)	20.9	16.3	13.2	7.8	8.9	8.9	5.4
	대학 졸업	(610)	26.4	14.9	13.0	10.3	7.2	7.9	6.4
	대학원 졸업 이상	(70)	17.1	17.1	18.6	5.7	10.0	8.6	5.7
직업	무직	(114)	18.4	19.3	14.9	6.1	10.5	6.1	9.6
	전문직	(63)	25.4	14.3	14.3	6.3	4.8	12.7	6.3
	관리직	(44)	15.9	9.1	13.6	18.2	2.3	6.8	9.1
	사무직	(328)	19.5	14.0	14.0	13.1	7.9	9.5	6.7
	판매직	(32)	34.4	9.4	9.4	3.1	15.6	3.1	3.1
	서비스직	(66)	28.8	18.2	13.6	4.5	4.5	10.6	3.0
	생산직	(53)	24.5	17.0	13.2	11.3	3.8	13.2	3.8
	주부·학생 등	(213)	25.8	20.2	9.9	5.6	12.2	5.6	5.2
	시간제 노동자	(57)	36.8	21.1	10.5	5.3	7.0	7.0	3.5
기타	(33)	30.3	15.2	6.1	6.1	6.1	6.1	6.1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표 12〉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1순위, 2/2)

구분		사례수 (명)	방송 및 언론기관	교도소 및 구금시설	경찰	기타
전 체		(1003)	5.6	5.5	4.3	0.5
장애 여부	장애인	(56)	8.9	5.4	5.4	0.0
	비장애인	(947)	5.4	5.5	4.2	0.5
이주민 여부	예	(18)	22.2	11.1	0.0	0.0
	아니오	(985)	5.3	5.4	4.4	0.5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13.8	4.6	1.5	1.5
	고등학교 졸업	(258)	7.8	6.2	3.9	0.8
	대학 졸업	(610)	3.6	4.9	5.2	0.2
	대학원 졸업 이상	(70)	7.1	8.6	0.0	1.4
직업	무직	(114)	9.6	3.5	0.9	0.9
	전문직	(63)	4.8	6.3	4.8	0.0
	관리직	(44)	4.5	13.6	6.8	0.0
	사무직	(328)	4.6	4.6	5.8	0.3
	판매직	(32)	6.3	12.5	3.1	0.0
	서비스직	(66)	4.5	7.6	4.5	0.0
	생산직	(53)	0.0	3.8	9.4	0.0
	주부·학생 등	(213)	8.0	3.8	2.8	0.9
	시간제 노동자	(57)	3.5	3.5	1.8	0.0
기타	(33)	3.0	15.2	3.0	3.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 중복응답(1+2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는 '복지시설(44.9%)'과 '직장내부(38.2%)'에서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는 '법원·검찰(27.3%)'과 '군대(20.7%)'를 취약한 장소로 지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는 10대(45.8%)와 20대(42.8%)는 '직장 내부'를, 40대(43.1%)와 50대(45.5%) 그리고 60대 이상(56.0%) 중장년 연령층은 '복지시설'을 취약한 영역이라고 인식하였고, 30대는 비슷한 수준으로 '복지시설(36.7%)'과 '직장 내부(39.5%)'라고 인식했다. 거주지역별 분석으로는, 인천시 전역에서 '복지시설'을 인권 침해·차별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서구(45.5%), 연수구(43.3%), 계양구(41.8%), 부평구(40.1%), 중·동·강화·옹진(39.6%), 미추홀구(38.2%), 남동구(36.6%) 등의 모든 지역으로 인권침해 취약 장소로 응답되었다.

〈표 13〉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중복, 1/2)

구분		사례수 (명)	복지 시설	직장 내부	법원 경찰	군대	학교	공공 기관	기업
전 체		(1003)	41.0	33.0	21.1	19.0	17.4	14.9	13.9
성별	여성	(563)	44.9	38.2	16.3	17.8	20.2	14.6	14.2
	남성	(440)	35.9	26.4	27.3	20.7	13.9	15.2	13.4
연령	10대	(59)	20.3	45.8	3.4	20.3	33.9	18.6	23.7
	20대	(152)	25.7	42.8	18.4	24.3	25.0	16.4	18.4
	30대	(177)	36.7	39.5	13.6	21.5	19.8	19.2	16.4
	40대	(202)	43.1	30.7	21.8	24.8	14.9	15.8	10.9
	50대	(220)	45.5	22.7	29.1	15.5	15.0	14.1	12.3
	60대 이상	(193)	56.0	29.5	25.9	10.4	9.8	8.3	9.8
거주 지역	계양구	(98)	41.8	33.7	20.4	15.3	18.4	15.3	8.2
	남동구	(164)	36.6	32.9	22.6	20.7	19.5	11.0	14.0
	미추홀구	(136)	38.2	36.0	20.6	22.1	14.7	16.2	12.5
	부평구	(167)	40.1	30.5	18.0	20.4	18.6	17.4	15.0
	서구	(213)	45.5	35.2	18.8	17.8	17.4	14.1	17.8
	연수구	(134)	43.3	26.1	29.1	15.7	16.4	15.7	10.4
	중·동·강화·옹진	(91)	39.6	37.4	19.8	20.9	16.5	15.4	15.4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표 14〉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중복, 2/2)

구분		사례수 (명)	방송 및 언론기관	교도소 및 구금시설	경찰	기타
전 체		(1003)	13.2	13.1	12.8	0.7
성별	여성	(563)	14.4	10.5	8.0	0.9
	남성	(440)	11.6	16.4	18.9	0.5
연령	10대	(59)	23.7	5.1	5.1	0.0
	20대	(152)	15.1	4.6	8.6	0.7
	30대	(177)	13.0	7.3	12.4	0.6
	40대	(202)	8.4	13.4	16.3	0.0
	50대	(220)	11.8	19.1	14.5	0.5
	60대 이상	(193)	15.0	20.2	13.0	2.1
	중·동·강화·옹진	(91)	13.2	5.5	14.3	2.2
거주 지역	계양구	(98)	10.2	21.4	14.3	1.0
	남동구	(164)	17.1	13.4	12.2	0.0
	미추홀구	(136)	8.1	13.2	16.9	1.5
	부평구	(167)	15.6	9.6	14.4	0.6
	서구	(213)	11.7	13.6	8.0	0.0
	연수구	(134)	14.9	14.9	12.7	0.7
	중·동·강화·옹진	(91)	13.2	5.5	14.3	2.2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 중복응답(1+2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 여부 상관없이 모두 '복지시설'이라고 응답했으며, 장애인의 경우 62.5%로 비장애인의 경우 39.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에서는 중졸 이하 학력자는 높은 비율로 직장 내부(56.9%)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대학 졸업(43.8%)과 고등학교 졸업(37.6%) 그리고 대학원 이상 졸업(35.7%)에서는 '복지시설'을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인식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 응답자를 제외한 직업군 모두 인권 침해·차별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요양원·생활시설 등의 각종 '복지시설'이 취약 장소라고 응답되었다. 반면, 무직 응답자의 경우 36.0%로 직장내부라고 응답하였다.

〈표 15〉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중복, 1/2)

구분		사례수 (명)	복지 시설	직장 내부	법원 경찰	군대	학교	공공 기관	기업
전 체		(1003)	41.0	33.0	21.1	19.0	17.4	14.9	13.9
장애 여부	장애인	(56)	62.5	23.2	14.3	7.1	17.9	14.3	12.5
	비장애인	(947)	39.7	33.6	21.5	19.7	17.4	14.9	13.9
이주민 여부	예	(18)	22.2	27.8	27.8	11.1	16.7	16.7	11.1
	아니오	(985)	41.3	33.1	21.0	19.2	17.5	14.8	13.9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33.8	56.9	4.6	7.7	27.7	13.8	20.0
	고등학교 졸업	(258)	37.6	31.4	22.5	16.3	18.2	15.1	13.6
	대학 졸업	(610)	43.8	32.0	21.6	21.3	16.1	14.8	13.3
	대학원 졸업 이상	(70)	35.7	25.7	27.1	20.0	17.1	15.7	14.3
직업	무직	(114)	33.3	36.0	21.9	18.4	21.9	10.5	16.7
	전문직	(63)	47.6	31.7	20.6	17.5	14.3	17.5	15.9
	관리직	(44)	31.8	13.6	34.1	25.0	13.6	13.6	13.6
	사무직	(328)	38.7	30.5	22.0	23.8	18.3	15.5	12.8
	판매직	(32)	37.5	37.5	15.6	21.9	18.8	6.3	15.6
	서비스직	(66)	36.4	34.8	24.2	15.2	12.1	15.2	13.6
	생산직	(53)	45.3	32.1	22.6	18.9	9.4	24.5	11.3
	주부·학생 등	(213)	43.7	38.5	16.9	14.6	22.5	13.1	16.4
	시간제 노동자	(57)	57.9	36.8	22.8	15.8	8.8	19.3	5.3
	기타	(33)	48.5	27.3	15.2	9.1	9.1	15.2	12.1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표 16〉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이 일어나는 곳 (중복, 2/2)

구분		사례수 (명)	방송 및 언론기관	교도소 및 구금시설	경찰	기타
전 체		(1003)	13.2	13.1	12.8	0.7
장애 여부	장애인	(56)	14.3	17.9	16.1	0.0
	비장애인	(947)	13.1	12.8	12.6	0.7
이주민 여부	예	(18)	33.3	16.7	11.1	5.6
	아니오	(985)	12.8	13.0	12.8	0.6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20.0	7.7	4.6	3.1
	고등학교 졸업	(258)	18.2	12.8	13.6	0.8
	대학 졸업	(610)	10.0	13.1	13.8	0.3
	대학원 졸업 이상	(70)	15.7	18.6	8.6	1.4
직업	무직	(114)	14.9	8.8	15.8	1.8
	전문직	(63)	14.3	14.3	6.3	0.0
	관리직	(44)	9.1	18.2	27.3	0.0
	사무직	(328)	11.0	11.9	14.9	0.6
	판매직	(32)	12.5	18.8	15.6	0.0
	서비스직	(66)	15.2	19.7	13.6	0.0
	생산직	(53)	11.3	9.4	15.1	0.0
	주부·학생 등	(213)	16.9	10.3	6.1	0.9
	시간제 노동자	(57)	12.3	12.3	8.8	0.0
	기타	(33)	9.1	36.4	15.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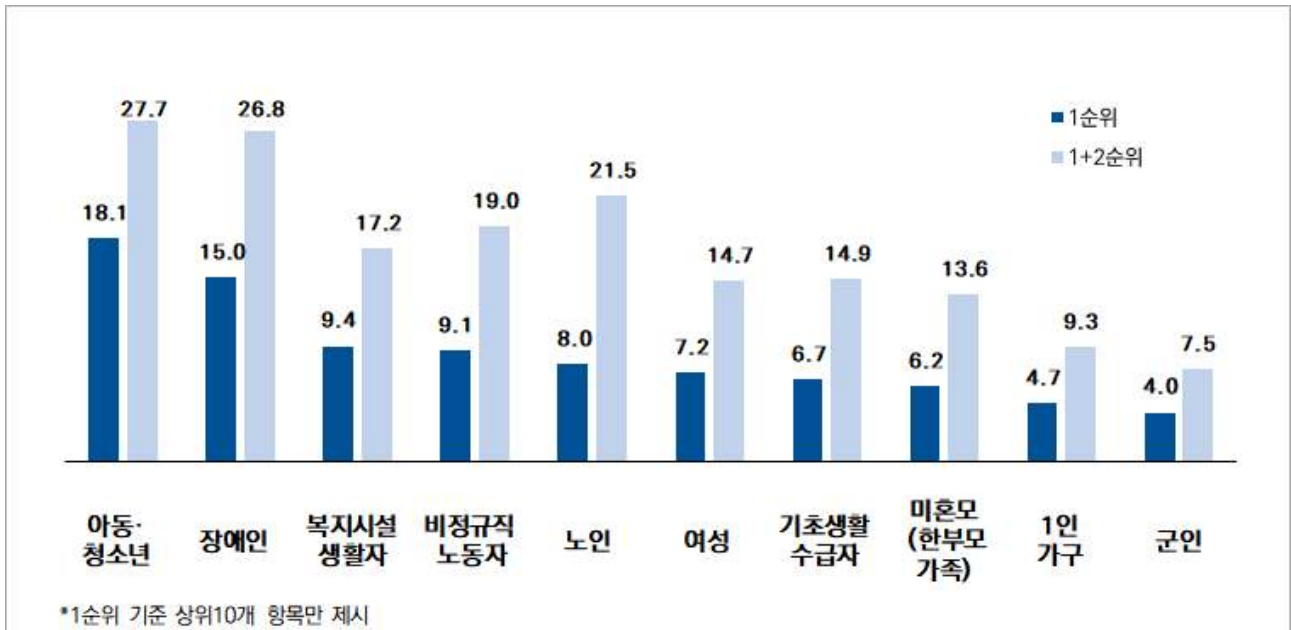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 2.3. 인천광역시에서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

#### 1) 전체 분석

인천광역시에서 인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은 아동·청소년(18.1%), 장애인(15.0%), 복지시설 생활자(9.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고,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9.1%), 노인(8.0%), 여성(7.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6.7%)의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인천시민은 보호대상을 인권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그림 5〉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



## 2) 응답자 특성별 비교

인천광역시에서 인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1순위 기준)로 살펴보면, 여성은 아동·청소년(22.0%)을, 남성은 장애인(13.6%)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라는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23.7%), 20대(20.4%), 30대(18.1%), 40대(24.8%), 50대(18.2%)는 아동·청소년이라고 응답했으며, 고령자인 60대 이상(18.7%)는 복지시설 생활자라고 응답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미추홀구(19.1%)와 중·동·강화·옹진(15.4%)은 인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을 장애인이라고 응답하였고, 연수구(22.4%), 서구(20.7%), 계양구(18.4%), 부평구(18.0%), 남동구(15.9%)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7〉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1순위, 1/3)

구분		사례수 (명)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 생활자	비정 규직 노동자	노인	여성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미혼모 (한부모 가족)
전 체		(1003)	18.1	15.0	9.4	9.1	8.0	7.2	6.7	6.2
성별	여성	(563)	22.0	16.0	9.8	6.9	7.6	10.8	5.7	5.7
	남성	(440)	13.2	13.6	8.9	11.8	8.4	2.5	8.0	6.8
연령	10대	(59)	23.7	18.6	0.0	3.4	1.7	10.2	3.4	8.5
	20대	(152)	20.4	17.8	5.3	5.9	7.2	11.2	6.6	6.6
	30대	(177)	18.1	12.4	6.2	10.7	5.1	7.3	5.1	6.8
	40대	(202)	24.8	13.4	8.9	7.4	6.4	5.4	7.4	5.0
	50대	(220)	18.2	16.8	9.5	11.8	9.5	6.4	7.3	5.9
	60대 이상	(193)	7.8	13.5	18.7	10.4	13.0	5.7	7.8	6.2
거주 지역	계양구	(98)	18.4	13.3	9.2	12.2	6.1	6.1	7.1	6.1
	남동구	(164)	15.9	14.6	6.1	8.5	8.5	8.5	6.7	7.3
	미추홀구	(136)	17.6	19.1	9.6	9.6	6.6	5.9	8.1	5.1
	부평구	(167)	18.0	15.6	9.0	10.2	9.6	8.4	4.2	3.0
	서구	(213)	20.7	15.0	10.8	7.5	7.5	7.5	8.0	5.2
	연수구	(134)	22.4	11.2	11.9	8.2	3.0	5.2	6.7	11.2
	중·동·강화·옹진	(91)	11.0	15.4	8.8	8.8	16.5	7.7	5.5	6.6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표 18〉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1순위, 2/3)

구분		사례수 (명)	1인 가구	군인	외국인 근로자	수사 중인 피의자	이주 노동자	기타	결혼이 주여성	구금 시설 수용자
전 체		(1003)	4.7	4.0	2.3	1.4	1.0	1.0	0.9	0.8
성별	여성	(563)	3.6	2.8	2.1	1.4	0.7	0.5	0.9	0.2
	남성	(440)	6.1	5.5	2.5	1.4	1.4	1.6	0.9	1.6
연령	10대	(59)	1.7	10.2	5.1	1.7	0.0	0.0	0.0	0.0
	20대	(152)	3.9	4.6	1.3	1.3	0.7	0.0	0.0	0.0
	30대	(177)	7.9	5.6	4.0	1.7	1.1	2.8	1.1	0.0
	40대	(202)	3.5	3.5	2.0	1.0	1.5	2.0	2.0	2.0
	50대	(220)	3.6	3.6	0.9	1.4	0.5	0.5	0.9	0.9
	60대 이상	(193)	5.7	1.0	2.6	1.6	1.6	0.0	0.5	1.0
거주 지역	계양구	(98)	5.1	2.0	2.0	1.0	4.1	1.0	3.1	1.0
	남동구	(164)	4.9	6.7	2.4	0.6	1.8	0.0	0.6	1.2
	미추홀구	(136)	2.9	4.4	2.9	0.7	0.0	2.2	0.0	1.5
	부평구	(167)	4.2	5.4	2.4	1.2	0.0	1.8	0.6	1.2
	서구	(213)	3.8	1.9	1.9	2.3	0.5	0.9	0.9	0.5
	연수구	(134)	6.0	3.7	3.0	3.0	0.7	0.0	0.7	0.0
	중·동·강화·옹진	(91)	7.7	3.3	1.1	0.0	1.1	1.1	1.1	0.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표 19〉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1순위, 3/3)

구분		사례수 (명)	노숙인	병력이 있는 사람	북한이 탈주민	성매매 여성	전과자	성소수 자	난민
전 체		(1003)	0.8	0.8	0.8	0.6	0.6	0.5	0.3
성별	여성	(563)	0.7	0.7	0.5	0.2	0.5	0.2	0.4
	남성	(440)	0.9	0.9	1.1	1.1	0.7	0.9	0.2
연령	10대	(59)	0.0	5.1	1.7	3.4	0.0	1.7	0.0
	20대	(152)	2.6	1.3	2.6	0.7	0.0	0.0	0.0
	30대	(177)	0.6	0.6	0.6	0.0	1.7	0.0	0.6
	40대	(202)	0.0	0.0	0.5	1.0	0.0	2.0	0.5
	50대	(220)	0.5	0.5	0.0	0.0	1.4	0.0	0.0
	60대 이상	(193)	1.0	0.5	0.5	0.5	0.0	0.0	0.5
거주 지역	계양구	(98)	1.0	1.0	0.0	0.0	0.0	0.0	0.0
	남동구	(164)	1.8	1.8	0.6	0.6	0.0	0.6	0.0
	미추홀구	(136)	0.7	2.2	0.0	0.0	0.7	0.0	0.0
	부평구	(167)	0.6	0.0	1.2	1.8	0.0	1.2	0.6
	서구	(213)	0.5	0.0	1.9	0.0	1.9	0.5	0.5
	연수구	(134)	0.0	0.7	0.7	0.0	0.7	0.0	0.7
	중·동·강화·옹진	(91)	1.1	0.0	0.0	2.2	0.0	1.1	0.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인천광역시에서 인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아동·청소년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23.1%)와 대학 졸업(19.5%)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학원 졸업 이상(20.0%)과 고등학교 졸업(16.7%)은 장애인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관리직(22.7%)은 장애인을, 주부·학생(28.2%)과 사무직(20.4%)은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응답하였고, 시간제 노동자(17.5%)는 복지시설 생활자를, 생산직에서는 15.1% 동일 비율로 장애인과 비정규 노동자를 꼽았으며, 다른 직업군에서는 비슷한 비율로 장애인과 아동·청소년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0〉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1순위, 1/3)

구분	사례수 (명)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 생활자	비정 규직 노동자	노인	여성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미혼모 (한부모 가족)	
전 체	(1003)	18.1	15.0	9.4	9.1	8.0	7.2	6.7	6.2	
장애 여부	장애인	(56)	16.1	14.3	12.5	8.9	14.3	3.6	1.8	7.1
	비장애인	(947)	18.3	15.0	9.2	9.1	7.6	7.4	7.0	6.1
이주민 여부	예	(18)	11.1	16.7	5.6	11.1	11.1	0.0	5.6	5.6
	아니오	(985)	18.3	14.9	9.4	9.0	7.9	7.3	6.7	6.2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23.1	13.8	4.6	7.7	6.2	7.7	6.2	7.7
	고등학교 졸업	(258)	14.3	16.7	8.9	7.4	8.9	8.1	8.1	6.6
	대학 졸업	(610)	19.5	13.8	10.2	9.3	7.9	7.4	6.6	5.7
	대학원 졸업 이상	(70)	15.7	20.0	8.6	14.3	7.1	1.4	2.9	7.1
직업	무직	(114)	17.5	17.5	7.0	8.8	10.5	7.0	5.3	4.4
	전문직	(63)	19.0	19.0	9.5	7.9	6.3	6.3	1.6	4.8
	관리직	(44)	9.1	22.7	6.8	13.6	4.5	2.3	9.1	13.6
	사무직	(328)	20.4	13.7	7.6	9.8	6.4	7.6	6.7	6.4
	판매직	(32)	12.5	12.5	9.4	12.5	6.3	3.1	6.3	3.1
	서비스직	(66)	12.1	13.6	13.6	7.6	15.2	9.1	13.6	3.0
	생산직	(53)	3.8	15.1	7.5	15.1	11.3	9.4	5.7	7.5
	주부·학생 등	(213)	28.2	11.3	10.3	6.1	5.2	8.9	6.1	6.6
	시간제 노동자	(57)	5.3	15.8	17.5	7.0	17.5	1.8	8.8	5.3
	기타	(33)	6.1	27.3	12.1	12.1	6.1	6.1	6.1	9.1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표 21〉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1순위, 2/3)

구분		사례수 (명)	1인 가구	군인	외국인 근로자	수사 중인 피의자	이주 노동자	기타	결혼이 주여성	구금 시설 수용자
전 체		(1003)	4.7	4.0	2.3	1.4	1.0	1.0	0.9	0.8
장애 여부	장애인	(56)	5.4	1.8	1.8	1.8	1.8	0.0	0.0	1.8
	비장애인	(947)	4.6	4.1	2.3	1.4	1.0	1.1	1.0	0.7
이주민 여부	예	(18)	16.7	11.1	0.0	0.0	0.0	0.0	0.0	0.0
	아니오	(985)	4.5	3.9	2.3	1.4	1.0	1.0	0.9	0.8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4.6	4.6	3.1	1.5	1.5	0.0	0.0	0.0
	고등학교 졸업	(258)	6.2	2.3	2.7	1.9	1.2	1.2	0.0	0.0
	대학 졸업	(610)	3.8	4.8	2.1	1.3	0.8	1.1	1.3	0.8
	대학원 졸업 이상	(70)	7.1	2.9	1.4	0.0	1.4	0.0	1.4	4.3
직업	무직	(114)	7.9	4.4	1.8	0.9	0.9	0.9	0.0	0.0
	전문직	(63)	3.2	6.3	1.6	1.6	3.2	1.6	0.0	1.6
	관리직	(44)	4.5	0.0	2.3	0.0	0.0	2.3	4.5	2.3
	사무직	(328)	5.5	5.2	2.1	0.9	0.6	1.2	1.5	0.9
	판매직	(32)	9.4	0.0	6.3	3.1	3.1	0.0	3.1	3.1
	서비스직	(66)	6.1	0.0	0.0	0.0	1.5	0.0	0.0	1.5
	생산직	(53)	5.7	7.5	1.9	0.0	0.0	3.8	0.0	0.0
	주부·학생 등	(213)	1.9	3.8	2.8	2.8	0.9	0.0	0.5	0.0
	시간제 노동자	(57)	1.8	1.8	3.5	3.5	1.8	1.8	0.0	0.0
	기타	(33)	3.0	3.0	3.0	0.0	0.0	0.0	0.0	3.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표 22〉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1순위, 3/3)

구분		사례수 (명)	노숙인	병력이 있는 사람	북한이 탈주민	성매매 여성	전과자	성소수 자	난민
전 체		(1003)	0.8	0.8	0.8	0.6	0.6	0.5	0.3
장애 여부	장애인	(56)	1.8	1.8	3.6	0.0	0.0	0.0	0.0
	비장애인	(947)	0.7	0.7	0.6	0.6	0.6	0.5	0.3
이주민 여부	예	(18)	0.0	0.0	5.6	0.0	0.0	0.0	0.0
	아니오	(985)	0.8	0.8	0.7	0.6	0.6	0.5	0.3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0.0	3.1	1.5	1.5	0.0	1.5	0.0
	고등학교 졸업	(258)	1.9	0.4	0.8	0.8	0.0	0.4	1.2
	대학 졸업	(610)	0.3	0.8	0.8	0.5	0.8	0.3	0.0
	대학원 졸업 이상	(70)	1.4	0.0	0.0	0.0	1.4	1.4	0.0
직업	무직	(114)	0.0	0.9	0.9	0.9	0.0	1.8	0.9
	전문직	(63)	1.6	0.0	3.2	1.6	0.0	0.0	0.0
	관리직	(44)	0.0	0.0	0.0	0.0	2.3	0.0	0.0
	사무직	(328)	0.6	0.6	0.6	0.3	0.6	0.6	0.0
	판매직	(32)	0.0	0.0	3.1	0.0	0.0	3.1	0.0
	서비스직	(66)	1.5	0.0	1.5	0.0	0.0	0.0	0.0
	생산직	(53)	1.9	0.0	0.0	1.9	0.0	0.0	1.9
	주부·학생 등	(213)	0.5	1.9	0.5	0.9	0.5	0.0	0.5
	시간제 노동자	(57)	3.5	0.0	0.0	0.0	3.5	0.0	0.0
	기타	(33)	0.0	3.0	0.0	0.0	0.0	0.0	0.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인천광역시에서 인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에 대해 중복응답(1+2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아동·청소년(32.0%)을, 남성은 장애인(24.8%)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35.6%) 20대(32.9%) 30대(28.8%) 40대(33.7%)는 아동·청소년이라고 응답했으며, 50대(29.5%)는 장애인을, 60대 이상(27.5%)은 복지시설 생활자라고 응답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미추홀구(30.9%) 부평구(30.5%)와 중·동·강화·옹진(27.5%)은 인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을 장애인이라고 응답했으며, 계양구는 아동·청소년(26.5%) 장애인(26.5%)이라는 응답이 같은 비율로 동일하게, 서구(33.3%)와 연수구(27.6%) 그리고 남동구(25.6%)는 아동·청소년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3〉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중복, 1/3)

구분		사례수 (명)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비정규 직 노동자	복지 시설 생활자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여성	미혼모 (한부모 가족)
전 체		(1003)	27.7	26.8	21.5	19.0	17.2	14.9	14.7	13.6
성별	여성	(563)	32.0	28.4	21.0	16.5	17.9	12.6	21.7	15.3
	남성	(440)	22.3	24.8	22.3	22.3	16.4	17.7	5.7	11.4
연령	10대	(59)	35.6	32.2	11.9	6.8	3.4	11.9	18.6	13.6
	20대	(152)	32.9	28.3	20.4	9.9	11.8	16.4	23.7	14.5
	30대	(177)	28.8	23.2	17.5	18.6	9.6	15.8	13.6	12.4
	40대	(202)	33.7	24.8	22.3	19.3	16.8	15.8	12.4	16.3
	50대	(220)	27.7	29.5	23.2	23.6	22.3	11.8	14.5	11.8
	60대 이상	(193)	14.0	26.4	26.4	24.9	27.5	16.1	9.8	13.0
거주 지역	계양구	(98)	26.5	26.5	20.4	24.5	19.4	16.3	9.2	11.2
	남동구	(164)	25.6	24.4	20.1	17.1	17.7	14.6	13.4	16.5
	미추홀구	(136)	26.5	30.9	25.0	17.6	18.4	11.0	16.9	13.2
	부평구	(167)	26.9	30.5	22.2	19.8	16.2	13.8	19.2	12.6
	서구	(213)	33.3	25.4	20.7	17.8	16.0	17.4	16.0	12.7
	연수구	(134)	27.6	23.1	18.7	20.9	18.7	15.7	9.0	15.7
	중·동·강화·옹진	(91)	23.1	27.5	25.3	17.6	15.4	14.3	16.5	12.1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표 24〉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중복, 2/3)

구분		사례수 (명)	1인 가구	군인	외국인 근로자	병력이 있는 사람	이주 노동자	북한이 탈주민	수사 중인 피의자	결혼이 주여성
전 체		(1003)	9.3	7.5	4.4	3.0	2.7	2.6	2.6	2.2
성별	여성	(563)	7.8	4.8	4.1	2.1	1.6	1.6	2.8	2.1
	남성	(440)	11.1	10.9	4.8	4.1	4.1	3.9	2.3	2.3
연령	10대	(59)	5.1	15.3	11.9	8.5	0.0	3.4	1.7	1.7
	20대	(152)	6.6	10.5	2.6	3.3	3.3	2.6	3.3	2.6
	30대	(177)	15.8	13.6	4.0	4.5	1.7	2.3	4.0	2.3
	40대	(202)	6.4	5.9	3.5	1.5	3.0	1.5	1.0	5.0
	50대	(220)	7.3	5.0	3.6	2.7	1.8	2.7	2.3	0.9
	60대 이상	(193)	11.9	1.6	5.7	1.6	4.7	3.6	3.1	0.5
거주 지역	계양구	(98)	8.2	6.1	5.1	3.1	8.2	1.0	3.1	6.1
	남동구	(164)	10.4	11.6	4.3	3.0	3.0	1.8	1.8	3.0
	미추홀구	(136)	8.8	5.9	5.1	3.7	1.5	2.2	1.5	1.5
	부평구	(167)	10.2	7.2	2.4	0.0	2.4	3.0	1.2	0.6
	서구	(213)	5.6	5.2	4.7	3.8	.5	4.2	4.2	1.4
	연수구	(134)	11.2	7.5	6.7	5.2	3.0	3.0	4.5	1.5
	중·동·강화·옹진	(91)	13.2	9.9	2.2	2.2	3.3	1.1	1.1	3.3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표 25〉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중복, 3/3)

구분		사례수 (명)	구금 시설 수용자	성소수 자	노숙인	성매매 여성	기타	난민	전과자
전 체		(1003)	2.0	2.0	1.5	1.5	1.3	1.1	1.0
성별	여성	(563)	0.5	1.6	1.1	1.6	0.9	1.2	0.7
	남성	(440)	3.9	2.5	2.0	1.4	1.8	0.9	1.4
연령	10대	(59)	0.0	5.1	0.0	6.8	1.7	5.1	0.0
	20대	(152)	0.0	2.6	2.6	1.3	0.0	0.0	0.7
	30대	(177)	2.3	1.7	1.1	0.6	3.4	1.7	1.7
	40대	(202)	2.0	3.0	0.5	1.5	2.5	1.0	0.5
	50대	(220)	1.4	1.8	1.8	1.4	0.5	0.5	1.8
	60대 이상	(193)	4.7	0.0	2.1	1.0	0.0	1.0	0.5
거주 지역	계양구	(98)	1.0	1.0	1.0	1.0	1.0	0.0	0.0
	남동구	(164)	3.0	1.8	2.4	1.8	0.6	0.0	1.8
	미추홀구	(136)	3.7	0.0	2.2	0.0	2.9	0.7	0.7
	부평구	(167)	2.4	3.0	0.6	2.4	2.4	1.2	0.0
	서구	(213)	1.9	2.8	1.4	0.9	0.9	0.9	2.3
	연수구	(134)	0.0	1.5	0.7	2.2	0.0	3.0	0.7
	중·동·강화·옹진	(91)	1.1	3.3	2.2	2.2	1.1	2.2	0.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인천광역시에서 인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응답(1+2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경우(37.5%) 장애인을, 비장애인 경우(28.1%)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35.4%)와 대학 졸업(29.3%)은 아동·청소년을, 고등학교 졸업(28.7%)과 대학원 졸업 이상(31.4%)은 장애인을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문직(33.3%)과 관리직(31.8%)에서는 장애인을, 주부·학생(36.2%)과 사무직(30.2%)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시간제 노동자인 경우 '노인'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높게 응답하였다. 인천시민은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을 인천광역시에서 인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표 26〉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중복, 1/3)

구분		사례수 (명)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비정규 직 노동자	복지 시설 생활자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여성	미혼모 (한부모 가족)
전 체		(1003)	27.7	26.8	21.5	19.0	17.2	14.9	14.7	13.6
장애 여부	장애인	(56)	21.4	37.5	23.2	17.9	16.1	12.5	7.1	12.5
	비장애인	(947)	28.1	26.2	21.4	19.1	17.3	15.0	15.1	13.6
이주민 여부	예	(18)	11.1	27.8	11.1	22.2	5.6	16.7	11.1	11.1
	아니오	(985)	28.0	26.8	21.7	19.0	17.5	14.8	14.7	13.6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35.4	23.1	20.0	15.4	10.8	12.3	10.8	12.3
	고등학교 졸업	(258)	22.5	28.7	21.3	17.4	17.1	17.8	16.3	14.0
	대학 졸업	(610)	29.3	25.9	21.6	19.7	18.4	14.1	15.6	13.3
	대학원 졸업 이상	(70)	25.7	31.4	22.9	22.9	14.3	12.9	4.3	15.7
직업	무직	(114)	29.8	29.8	26.3	16.7	10.5	16.7	11.4	10.5
	전문직	(63)	30.2	33.3	27.0	17.5	17.5	4.8	12.7	9.5
	관리직	(44)	18.2	31.8	13.6	22.7	20.5	22.7	9.1	18.2
	사무직	(328)	30.2	23.5	22.3	19.5	15.5	14.6	17.4	13.4
	판매직	(32)	28.1	21.9	12.5	21.9	25.0	6.3	3.1	12.5
	서비스직	(66)	21.2	22.7	25.8	21.2	27.3	18.2	19.7	12.1
	생산직	(53)	17.0	28.3	26.4	22.6	15.1	11.3	13.2	15.1
	주부·학생 등	(213)	36.2	27.2	14.6	16.0	17.4	15.0	18.3	15.5
	시간제 노동자	(57)	10.5	24.6	29.8	19.3	22.8	19.3	3.5	14.0
	기타	(33)	9.1	42.4	21.2	27.3	18.2	18.2	9.1	15.2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표 27〉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중복, 2/3)

구분		사례수 (명)	1인 가구	군인	외국인 근로자	병력이 있는 사람	이주 노동자	북한이 탈주민	수사 중인 피의자	결혼 이주 여성
전 체		(1003)	9.3	7.5	4.4	3.0	2.7	2.6	2.6	2.2
장애 여부	장애인	(56)	5.4	5.4	8.9	5.4	3.6	7.1	3.6	0.0
	비장애인	(947)	9.5	7.6	4.1	2.9	2.6	2.3	2.5	2.3
이주민 여부	예	(18)	27.8	22.2	5.6	5.6	0.0	16.7	0.0	0.0
	아니오	(985)	8.9	7.2	4.4	2.9	2.7	2.3	2.6	2.2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10.8	9.2	7.7	4.6	1.5	4.6	3.1	0.0
	고등학교 졸업	(258)	11.6	5.0	5.0	4.3	2.3	2.3	2.7	1.2
	대학 졸업	(610)	7.7	8.7	3.9	2.5	2.8	2.3	2.8	2.8
	대학원 졸업 이상	(70)	12.9	4.3	2.9	1.4	4.3	4.3	0.0	2.9
직업	무직	(114)	14.9	7.0	5.3	4.4	3.5	1.8	1.8	0.9
	전문직	(63)	4.8	9.5	1.6	1.6	9.5	6.3	1.6	1.6
	관리직	(44)	6.8	2.3	2.3	2.3	0.0	4.5	2.3	4.5
	사무직	(328)	8.5	10.4	3.4	2.1	1.8	2.7	2.1	3.0
	판매직	(32)	15.6	0.0	6.3	3.1	6.3	9.4	9.4	3.1
	서비스직	(66)	10.6	3.0	1.5	1.5	3.0	1.5	0.0	3.0
	생산직	(53)	17.0	15.1	3.8	3.8	0.0	0.0	0.0	0.0
	주부·학생 등	(213)	7.0	5.6	6.1	3.8	1.9	1.9	3.3	1.9
	시간제 노동자	(57)	7.0	3.5	7.0	5.3	5.3	1.8	8.8	1.8
기타	(33)	6.1	6.1	9.1	3.0	0.0	0.0	0.0	0.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표 28〉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중복, 3/3)

구분		사례수 (명)	구금 시설 수용자	성소수 자	노숙인	성매매 여성	기타	난민	전과자
전 체		(1003)	2.0	2.0	1.5	1.5	1.3	1.1	1.0
장애 여부	장애인	(56)	7.1	0.0	1.8	3.6	0.0	0.0	0.0
	비장애인	(947)	1.7	2.1	1.5	1.4	1.4	1.2	1.1
이주민 여부	예	(18)	5.6	0.0	0.0	0.0	0.0	0.0	0.0
	아니오	(985)	1.9	2.0	1.5	1.5	1.3	1.1	1.0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3.1	6.2	0.0	6.2	0.0	3.1	0.0
	고등학교 졸업	(258)	1.2	1.2	2.3	1.6	1.6	1.9	0.8
	대학 졸업	(610)	2.0	1.6	1.1	1.0	1.5	0.3	1.1
	대학원 졸업 이상	(70)	4.3	4.3	2.9	1.4	0.0	2.9	1.4
직업	무직	(114)	1.8	2.6	0.0	2.6	0.9	0.9	0.0
	전문직	(63)	3.2	1.6	1.6	1.6	1.6	1.6	0.0
	관리직	(44)	9.1	0.0	2.3	2.3	2.3	0.0	2.3
	사무직	(328)	1.5	2.1	1.2	1.2	1.5	0.6	1.2
	판매직	(32)	9.4	3.1	0.0	0.0	0.0	0.0	3.1
	서비스직	(66)	1.5	3.0	1.5	0.0	0.0	1.5	0.0
	생산직	(53)	0.0	1.9	1.9	1.9	3.8	1.9	0.0
	주부·학생 등	(213)	0.0	1.9	0.9	2.3	0.5	2.3	0.5
	시간제 노동자	(57)	0.0	1.8	7.0	0.0	1.8	0.0	5.3
기타	(33)	9.1	0.0	3.0	0.0	3.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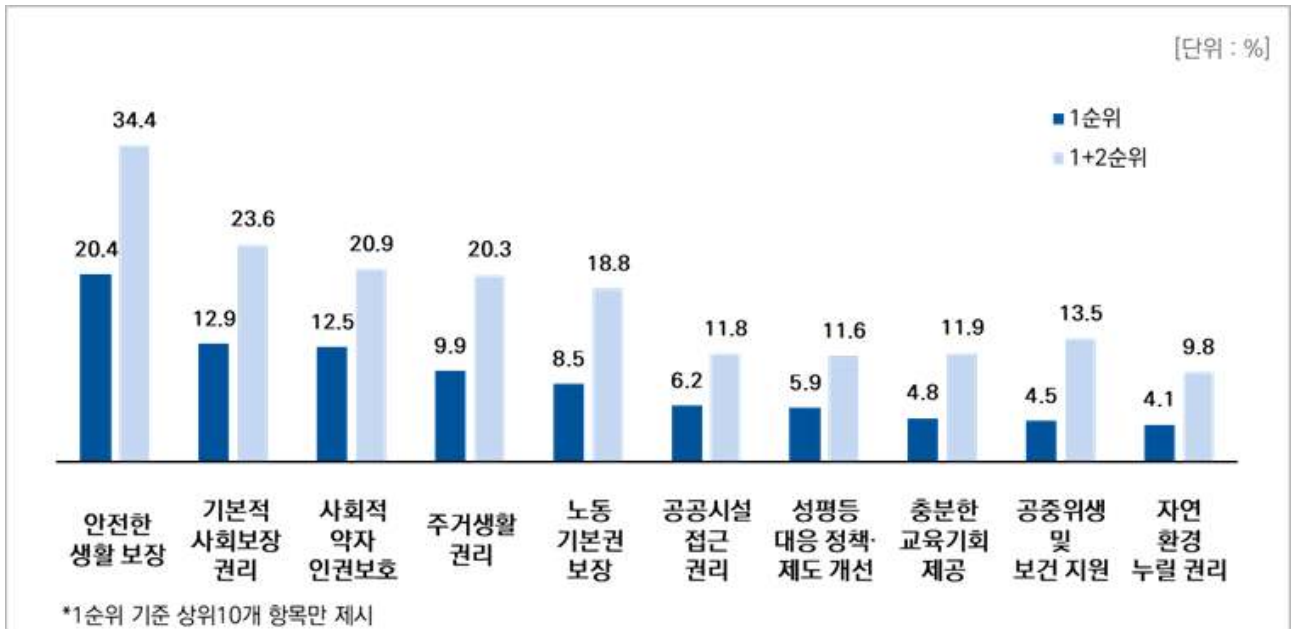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 2.4. 시민을 위해 역점을 두고 보완해야 하는 분야

### 1) 전체 분석

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모든 시민을 위해 역점을 두고 인권 정책을 보완해야 할 분야(1순위 기준)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생활보장(20.4%), 기본적 사회보장 권리(12.9%),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12.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주거 생활 권리(9.9%), 노동 기본권 보장(8.5%), 공공시설 접근 권리(6.2%) 등의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6〉 시민을 위해 역점을 두고 보완해야 하는 분야



### 2) 응답자 특성별 비교

인천광역시에서 시민을 위해 역점을 두고 인권 정책을 보완해야 할 분야를 응답자 특성별(1순위 기준)로 살펴보면,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보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정책 분야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여성 21.8%와 남성 18.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10대(22.0%)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20대(20.4%) 30대(22.6%) 50대(22.7%) 60대 이상(20.7%)은 안전한 생활보장을, 40대(18.3%)는 기본적 사

회보장 서비스를 누릴 권리에 역점을 두고 인권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 별 요구되는 정책 분야로 인천시 전 지역에서도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보장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분야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중·동·강화·옹진(24.2%), 남동구(22.0%), 부평구(21.6%), 미추홀구(20.6%), 계양구(20.4%), 연수구(19.4%), 서구(17.4%)로 나타났다.

〈표 29〉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보완해야 할 인권 정책 분야 (1순위, 1/2)

구분		사례수 (명)	안전한 생활 보장	기본적 사회 보장 권리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주거 생활 권리	노동기 본권 보장	공공 시설 접근 권리	성평등 대응 정책· 제도 개선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
전 체		(1003)	20.4	12.9	12.5	9.9	8.5	6.2	5.9	4.8
성별	여성	(563)	21.8	11.4	12.3	11.0	8.3	6.2	6.4	4.4
	남성	(440)	18.6	14.8	12.7	8.4	8.6	6.1	5.2	5.2
연령	10대	(59)	15.3	5.1	22.0	11.9	6.8	1.7	10.2	6.8
	20대	(152)	20.4	8.6	12.5	10.5	6.6	6.6	8.6	4.6
	30대	(177)	22.6	11.3	11.9	7.9	9.6	4.0	8.5	5.6
	40대	(202)	17.3	18.3	8.4	12.4	8.9	7.9	6.9	3.5
	50대	(220)	22.7	11.8	12.3	9.1	10.5	6.8	3.6	5.5
	60대 이상	(193)	20.7	15.5	14.5	8.8	6.7	6.7	1.6	4.1
거주 지역	계양구	(98)	20.4	9.2	11.2	9.2	12.2	9.2	6.1	4.1
	남동구	(164)	22.0	12.2	12.8	7.9	9.1	6.7	6.7	4.3
	미추홀구	(136)	20.6	14.0	12.5	11.0	5.9	7.4	8.1	2.2
	부평구	(167)	21.6	15.6	11.4	9.6	9.6	4.2	6.0	7.2
	서구	(213)	17.4	11.7	13.6	9.4	9.4	5.2	3.8	6.1
	연수구	(134)	19.4	14.9	14.9	10.4	3.7	7.5	6.0	3.7
	중·동·강화·옹진	(91)	24.2	11.0	8.8	13.2	9.9	4.4	5.5	4.4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표 30〉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보완해야 할 인권 정책 분야 (1순위, 2/2)

구분		사례수 (명)	공중위 생 및 보건 지원	자연 환경 누릴 권리	자유로 운 의사 표현	정책 참여 기회 보장	종교의 자유 누릴 권리	충분한 여가 기회 제공	기타
전 체		(1003)	4.5	4.1	4.0	2.7	2.3	1.4	0.1
성별	여성	(563)	4.6	4.3	3.6	2.5	1.6	1.4	0.2
	남성	(440)	4.3	3.9	4.5	3.0	3.2	1.4	0.0
연령	10대	(59)	3.4	5.1	5.1	1.7	5.1	0.0	0.0
	20대	(152)	3.9	4.6	7.2	3.3	1.3	1.3	0.0
	30대	(177)	2.8	4.0	2.3	5.1	1.7	2.8	0.0
	40대	(202)	6.9	2.0	2.5	3.5	1.5	0.0	0.0
	50대	(220)	3.2	5.0	3.6	1.4	2.7	1.8	0.0
	60대 이상	(193)	5.7	4.7	4.7	1.0	3.1	1.6	0.5
거주 지역	계양구	(98)	4.1	4.1	4.1	3.1	1.0	2.0	0.0
	남동구	(164)	2.4	3.0	7.3	1.8	3.0	0.6	0.0
	미추홀구	(136)	5.9	2.2	1.5	3.7	4.4	0.0	0.7
	부평구	(167)	3.0	4.2	3.6	1.8	1.8	0.6	0.0
	서구	(213)	7.0	6.1	2.8	2.8	1.9	2.8	0.0
	연수구	(134)	3.7	4.5	4.5	4.5	0.0	2.2	0.0
	중·동·강화·옹진	(91)	4.4	3.3	4.4	1.1	4.4	1.1	0.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인천광역시에서 모든 시민을 위해 역점을 두고 인권 정책을 보완해야 할 분야를 응답자 특성별(1순위 기준)로 살펴보면, 장애인 응답자 경우(21.4%)와 비장애인 응답자 경우(20.4%) 두 집단 모두 안전한 생활 보장을 높게 꼽았다. 학력별로도 모두 안전한 생활보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졸 이하(23.1%), 고등학교 졸업(17.4%) 대학 졸업(21.8%) 대학원 이상 졸업(17.1%)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에서도 역시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보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인권 정책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직업별로는 전문직(28.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지만, 무직 응답자인 경우에는 기본적 사회보장 권리(16.7%)를 가장 높게 꼽았다.

〈표 31〉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보완해야 할 인권 정책 분야 (1순위, 1/2)

구분		사례수 (명)	안전한 생활 보장	기본적 사회 보장 권리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주거 생활 권리	노동 기본권 보장	공공 시설 접근 권리	성평등 대응 정책· 제도 개선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
전 체		(1003)	20.4	12.9	12.5	9.9	8.5	6.2	5.9	4.8
장애 여부	장애인	(56)	21.4	8.9	8.9	8.9	17.9	5.4	3.6	7.1
	비장애인	(947)	20.4	13.1	12.7	9.9	7.9	6.2	6.0	4.6
이주민 여부	예	(18)	27.8	5.6	22.2	11.1	11.1	16.7	0.0	0.0
	아니오	(985)	20.3	13.0	12.3	9.8	8.4	6.0	6.0	4.9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23.1	6.2	15.4	12.3	6.2	6.2	9.2	0.0
	고등학교 졸업	(258)	17.4	12.0	11.2	8.1	8.5	8.5	4.3	7.8
	대학 졸업	(610)	21.8	13.9	12.6	10.0	8.5	5.2	6.7	3.3
	대학원 졸업 이상	(70)	17.1	12.9	12.9	12.9	10.0	5.7	1.4	11.4
직업	무직	(114)	15.8	16.7	14.9	7.0	7.0	5.3	11.4	6.1
	전문직	(63)	28.6	11.1	9.5	9.5	9.5	4.8	3.2	3.2
	관리직	(44)	22.7	18.2	9.1	9.1	6.8	4.5	11.4	9.1
	사무직	(328)	18.9	13.4	12.5	9.1	8.8	5.5	6.7	4.6
	판매직	(32)	25.0	12.5	6.3	15.6	6.3	3.1	0.0	0.0
	서비스직	(66)	24.2	12.1	13.6	9.1	9.1	9.1	3.0	6.1
	생산직	(53)	20.8	9.4	15.1	11.3	9.4	1.9	3.8	5.7
	주부·학생 등	(213)	20.7	8.9	12.2	13.6	8.0	8.5	3.3	3.8
	시간제 노동자	(57)	21.1	17.5	8.8	5.3	14.0	8.8	5.3	3.5
	기타	(33)	18.2	15.2	21.2	6.1	3.0	6.1	9.1	9.1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표 32〉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보완해야 할 인권 정책 분야 (1순위, 2/2)

구분		사례수 (명)	공중위 생 및 보건 지원	자연 환경 누릴 권리	자유로 운 의사 표현	정책 참여 기회 보장	종교의 자유 누릴 권리	충분한 여가 기회 제공	기타
전 체		(1003)	4.5	4.1	4.0	2.7	2.3	1.4	0.1
장애 여부	장애인	(56)	10.7	3.6	1.8	0.0	1.8	0.0	0.0
	비장애인	(947)	4.1	4.1	4.1	2.9	2.3	1.5	0.1
이주민 여부	예	(18)	5.6	0.0	0.0	0.0	0.0	0.0	0.0
	아니오	(985)	4.5	4.2	4.1	2.7	2.3	1.4	0.1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7.7	1.5	6.2	1.5	1.5	3.1	0.0
	고등학교 졸업	(258)	5.4	5.4	5.8	1.2	3.1	1.2	0.0
	대학 졸업	(610)	4.3	3.4	3.3	3.3	2.1	1.3	0.2
	대학원 졸업 이상	(70)	0.0	7.1	1.4	4.3	1.4	1.4	0.0
직업	무직	(114)	4.4	6.1	1.8	0.9	2.6	0.0	0.0
	전문직	(63)	0.0	6.3	6.3	4.8	3.2	0.0	0.0
	관리직	(44)	2.3	0.0	0.0	2.3	2.3	2.3	0.0
	사무직	(328)	3.4	4.9	4.0	4.3	1.8	1.8	0.3
	판매직	(32)	6.3	6.3	3.1	6.3	3.1	6.3	0.0
	서비스직	(66)	6.1	3.0	3.0	0.0	1.5	0.0	0.0
	생산직	(53)	7.5	0.0	7.5	1.9	5.7	0.0	0.0
	주부·학생 등	(213)	6.6	4.2	5.2	1.4	2.3	1.4	0.0
	시간제 노동자	(57)	5.3	1.8	3.5	0.0	1.8	3.5	0.0
	기타	(33)	3.0	0.0	3.0	6.1	0.0	0.0	0.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인천광역시에서 모든 시민을 위해 역점을 두고 인권 정책을 보완해야 할 분야를 중복응답(1+2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보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정책 분야라고 여자(36.8%)와 남자(31.4%) 모두 응답했으며, 차선으로는 여자의 경우(22.2%) 주거생활 권리를, 남자의 경우(27.0%) 기본적 사회보장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27.1%)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20대(34.9%) 30대(36.7%) 40대(28.7%) 50대(39.5%) 60대 이상(35.2%)은 안전한 생활보장에 역점을 두고 인권 정책에서 보완해야 하는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인천시 모든 거주지역에서도 안전한 생활보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동·강화·옹진(37.4%), 남동구(37.2%), 부평구(35.9%), 계양구(35.7%), 미추홀구(34.6%), 연수구(32.1%), 서구(3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보완해야 할 인권 정책 분야 (중복, 1/2)

구분		사례수 (명)	안전한 생활보 장	기본적 사회보 장 권리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주거 생활 권리	노동기 본권 보장	공중위 생 및 보건 지원	충분한 교육기 회 제공	공공시 설 접근 권리
전 체		(1003)	34.4	23.6	20.9	20.3	18.8	13.5	11.9	11.8
성별	여성	(563)	36.8	21.0	20.6	22.2	18.1	13.7	11.5	12.3
	남성	(440)	31.4	27.0	21.4	18.0	19.8	13.2	12.3	11.1
연령	10대	(59)	23.7	15.3	27.1	25.4	13.6	8.5	13.6	8.5
	20대	(152)	34.9	13.2	21.1	23.0	15.8	13.8	13.8	9.9
	30대	(177)	36.7	20.3	21.5	16.9	19.8	9.6	13.0	8.5
	40대	(202)	28.7	26.7	14.4	24.3	19.8	16.8	10.9	16.8
	50대	(220)	39.5	26.8	21.4	16.8	25.0	11.8	12.3	10.0
	60대 이상	(193)	35.2	30.6	24.9	19.7	14.0	16.6	9.3	14.0
거주 지역	계양구	(98)	35.7	19.4	22.4	19.4	25.5	11.2	8.2	14.3
	남동구	(164)	37.2	24.4	18.9	18.3	20.1	12.8	11.0	13.4
	미추홀구	(136)	34.6	24.3	19.9	18.4	14.7	11.0	11.0	15.4
	부평구	(167)	35.9	28.7	19.2	21.0	15.0	15.0	15.0	10.8
	서구	(213)	30.5	23.0	24.4	18.3	20.2	16.9	14.1	9.9
	연수구	(134)	32.1	23.1	20.9	23.1	17.2	14.2	9.7	12.7
	중·동·강화·옹진	(91)	37.4	18.7	19.8	27.5	22.0	8.8	11.0	5.5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표 34〉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보완해야 할 인권 정책 분야 (중복, 2/2)

구분	사례수 (명)	성평등 대응 정책·제 도 개선	자연 환경 누릴 권리	자유로 운 의사 표현	정책 참여 기회 보장	종교의 자유 누릴 권리	충분한 여가 기회 제공	기타	
전 체	(1003)	11.6	9.8	7.7	6.3	5.2	4.2	0.1	
성별	여성	(563)	13.1	9.4	6.7	5.9	4.4	4.1	0.2
	남성	(440)	9.5	10.2	8.9	6.8	6.1	4.3	0.0
연령	10대	(59)	23.7	10.2	10.2	6.8	11.9	1.7	0.0
	20대	(152)	14.5	11.8	11.8	5.9	5.3	5.3	0.0
	30대	(177)	14.7	11.3	6.2	10.7	4.0	6.8	0.0
	40대	(202)	14.9	5.9	5.9	7.4	4.5	3.0	0.0
	50대	(220)	5.9	10.9	6.8	3.6	5.0	4.1	0.0
	60대 이상	(193)	5.7	9.3	7.8	4.1	5.2	3.1	0.5
거주 지역	계양구	(98)	13.3	10.2	5.1	6.1	4.1	5.1	0.0
	남동구	(164)	12.2	6.1	9.1	5.5	7.3	3.7	0.0
	미추홀구	(136)	16.2	9.6	9.6	6.6	5.9	2.2	0.7
	부평구	(167)	10.8	8.4	9.6	4.2	4.2	2.4	0.0
	서구	(213)	6.6	11.7	4.7	8.5	5.2	6.1	0.0
	연수구	(134)	11.9	10.4	9.0	8.2	3.0	4.5	0.0
	중·동·강화·옹진	(91)	14.3	13.2	6.6	3.3	6.6	5.5	0.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인천광역시에서 모든 시민을 위해 역점을 두고 인권 정책을 보완해야 할 분야를 중복응답(1+2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인(33.9%)과 비장애인(34.4%) 모두 안전한 생활보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정책 분야라고 응답하였고, 차선으로는 장애인 경우(21.4%)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비장애인 경우(24.0%)는 기본적 사회보장 권리를 보완 정책으로 꼽았다. 학력별로는 안전한 생활보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분야라고 모든 집단에서 응답하였으며, 중졸 이하(32.3%) 고등학교 졸업(29.5%) 대학 졸업(37.2%) 대학원 이상 졸업(30.0%)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에서도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보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인권 정책 분야라고 응답했으며, 전문직(41.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5〉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보완해야 할 인권 정책 분야 (중복, 1/2)

구분		사례수 (명)	안전한 생활 보장	기본적 사회 보장 권리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주거 생활 권리	노동기 본권 보장	공중위 생 및 보건 지원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	공공 시설 접근 권리
전 체		(1003)	34.4	23.6	20.9	20.3	18.8	13.5	11.9	11.8
장애 여부	장애인	(56)	33.9	17.9	17.9	16.1	21.4	19.6	16.1	16.1
	비장애인	(947)	34.4	24.0	21.1	20.6	18.7	13.1	11.6	11.5
이주민 여부	예	(18)	27.8	11.1	38.9	27.8	16.7	11.1	11.1	16.7
	아니오	(985)	34.5	23.9	20.6	20.2	18.9	13.5	11.9	11.7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32.3	15.4	26.2	23.1	13.8	12.3	10.8	13.8
	고등학교 졸업	(258)	29.5	19.4	21.3	21.7	18.6	12.0	14.0	12.8
	대학 졸업	(610)	37.2	26.6	20.2	19.0	19.3	14.8	10.2	10.7
	대학원 졸업 이상	(70)	30.0	21.4	21.4	24.3	20.0	8.6	20.0	15.7
직업	무직	(114)	33.3	28.9	22.8	20.2	17.5	7.9	14.0	11.4
	전문직	(63)	41.3	23.8	17.5	19.0	19.0	9.5	9.5	14.3
	관리직	(44)	36.4	29.5	15.9	11.4	15.9	18.2	25.0	6.8
	사무직	(328)	32.9	24.4	19.8	18.6	20.4	14.6	11.0	11.0
	판매직	(32)	40.6	18.8	12.5	28.1	9.4	12.5	12.5	18.8
	서비스직	(66)	31.8	21.2	24.2	15.2	22.7	13.6	15.2	13.6
	생산직	(53)	32.1	20.8	28.3	24.5	20.8	9.4	7.5	3.8
	주부·학생 등	(213)	34.3	17.4	20.2	27.7	16.0	16.0	10.3	13.6
	시간제 노동자	(57)	33.3	29.8	22.8	15.8	24.6	17.5	12.3	12.3
	기타	(33)	42.4	33.3	30.3	9.1	18.2	6.1	9.1	12.1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표 36〉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보완해야 할 인권 정책 분야 (중복, 2/2)

구분		사례수 (명)	성평등 대응 정책·제 도 개선	자연 환경 누릴 권리	자유로 운 의사 표현	정책 참여 기회 보장	종교의 자유 누릴 권리	충분한 여가 기회 제공	기타
전 체		(1003)	11.6	9.8	7.7	6.3	5.2	4.2	0.1
장애 여부	장애인	(563)	10.7	12.5	5.4	3.6	7.1	1.8	0.0
	비장애인	(947)	11.6	9.6	7.8	6.4	5.1	4.3	0.1
이주민 여부	예	(18)	0.0	16.7	5.6	11.1	0.0	5.6	0.0
	아니오	(985)	11.8	9.6	7.7	6.2	5.3	4.2	0.1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18.5	6.2	10.8	6.2	4.6	6.2	0.0
	고등학교 졸업	(258)	11.2	11.2	11.6	4.3	7.4	5.0	0.0
	대학 졸업	(610)	12.0	9.2	5.9	6.7	4.4	3.8	0.2
	대학원 졸업 이상	(70)	2.9	12.9	5.7	10.0	4.3	2.9	0.0
직업	무직	(114)	14.9	14.0	6.1	3.5	4.4	.9	0.0
	전문직	(63)	7.9	12.7	9.5	9.5	4.8	1.6	0.0
	관리직	(44)	15.9	4.5	9.1	4.5	2.3	4.5	0.0
	사무직	(328)	13.1	9.1	5.8	8.2	4.9	5.8	0.3
	판매직	(32)	0.0	12.5	9.4	6.3	12.5	6.3	0.0
	서비스직	(66)	9.1	16.7	6.1	3.0	6.1	1.5	0.0
	생산직	(53)	13.2	7.5	15.1	3.8	7.5	5.7	0.0
	주부·학생 등	(213)	9.4	9.4	9.9	6.1	6.1	3.8	0.0
	시간제 노동자	(57)	8.8	5.3	3.5	1.8	3.5	8.8	0.0
	기타	(33)	18.2	0.0	9.1	12.1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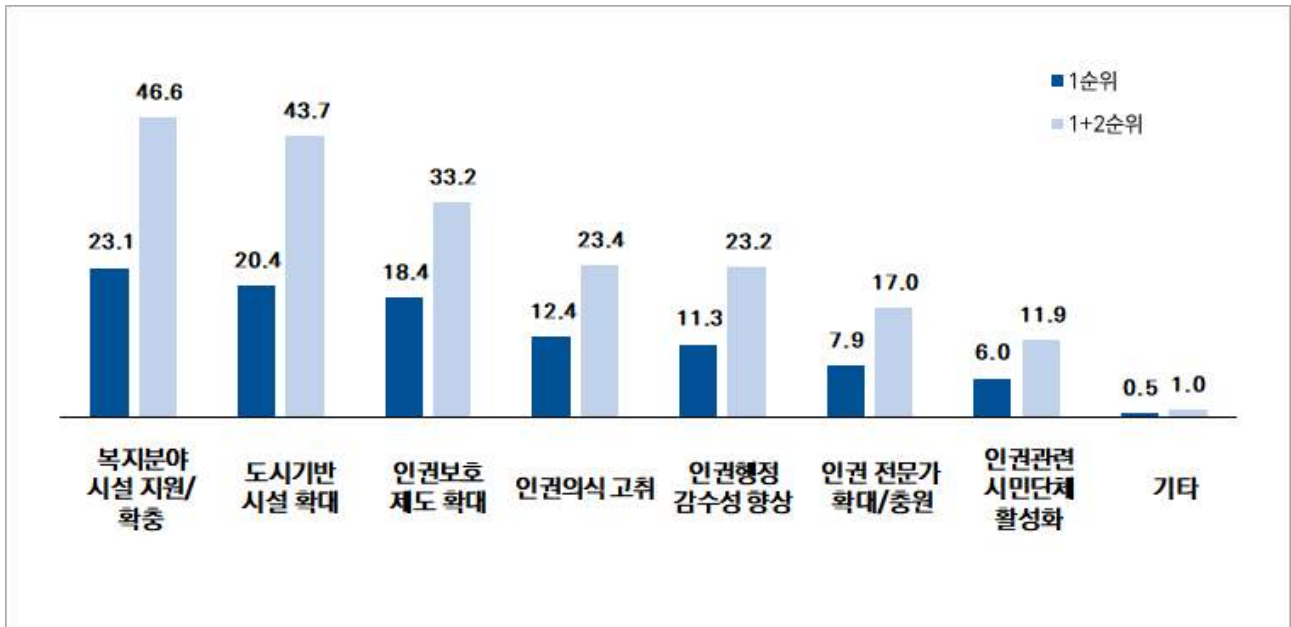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 2.5. 인권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

### 1) 전체 분석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는 복지분야 시설지원 및 확충(23.1%), 도시기반시설 확대(20.4%), 인권보호제도 확대(18.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인권의식 고취(12.4%), 인권행정 감수성 향상(11.3%), 인권 전문가 확대 및 확충(7.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인권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



### 2) 응답자 특성별 비교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1순위 기준)로 살펴보면, '복지 분야 시설 지원 및 확충'이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여성은 23.8%, 남성은 22.3%라고 응답하였고, 차선으로는 여성(21.7%)과 남성(18.9%) 모두 도시기반시설 확대를 꼽았다.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10대(25.4%)와 30대(21.5%)는 '인권보호제도 확대'를, 20대(24.3%), 40대(20.3%), 50대(24.5%), 60대 이상(26.4%)은 '복지 분야 시설 지원'을

및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계양구(22.4%)와 남동구(19.5%)에서 '도시기반시설 확대'와 '인권보호 제도 확대'가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복지분야 시설지원 및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7〉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 (1순위)

구분	사례수 (명)	복지 분야 시설 지원/ 확충	도시기 반시설 확대	인권 보호 제도 확대	인권 의식 고취	인권 행정 감수성 향상	인권 전문가 확대/ 총원	인권 관련 시민 단체 활성화	기타	
전 체	(1003)	23.1	20.4	18.4	12.4	11.3	7.9	6.0	0.5	
성별	여성	(563)	23.8	21.7	18.8	12.4	10.1	6.6	5.9	0.7
	남성	(440)	22.3	18.9	18.0	12.3	12.7	9.5	6.1	0.2
연령	10대	(59)	20.3	15.3	25.4	11.9	13.6	5.1	6.8	1.7
	20대	(152)	24.3	20.4	23.7	9.9	9.9	8.6	3.3	0.0
	30대	(177)	20.9	17.5	21.5	10.7	10.7	9.6	7.3	1.7
	40대	(202)	20.3	19.8	16.8	14.4	11.4	9.9	6.9	0.5
	50대	(220)	24.5	20.9	17.3	10.5	13.6	6.4	6.8	0.0
	60대 이상	(193)	26.4	24.9	12.4	16.1	9.3	6.2	4.7	0.0
거주 지역	계양구	(98)	21.4	22.4	22.4	14.3	10.2	4.1	5.1	0.0
	남동구	(164)	18.9	19.5	19.5	14.0	9.8	9.8	6.7	1.8
	미추홀구	(136)	25.0	17.6	19.9	11.8	13.2	7.4	5.1	0.0
	부평구	(167)	26.3	21.0	21.0	12.0	10.8	4.2	4.8	0.0
	서구	(213)	22.5	22.5	15.5	13.1	9.4	8.5	8.0	0.5
	연수구	(134)	23.1	17.9	14.2	12.7	17.2	9.0	5.2	0.7
	중·동·강화·옹진	(91)	25.3	22.0	18.7	6.6	8.8	13.2	5.5	0.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1순위 기준)에 대해, 장애인의 경우(28.6%) '도시기반시설 확대'를, 비장애인 경우(23.2%)는 '복지분야 시설지원 및 확충'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27.1%) 대학 졸업(21.8%) 대학원 이상 졸업(21.4%)은 '복지분야 시설지원 및 확충'을, 중졸 이하 학력자는 21.5% 동일 비율로 '복지분야 시설지원 및 확충', '도시기반시설 확대', '인권보호제도 확대'를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직업별로는 생산직 37.7%와 서비스직 28.8%로 '복지분야 시설지원 및 확충'에서 높게 응답했으며, 관리직 25.0%와 판매직 25.0%, 시간제 노동자 26.3%로 '인권보호제도 확대'를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38〉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 (1순위)

구분	사례수 (명)	복지 분야 시설 지원/ 확충	도시기 반시설 확대	인권 보호 제도 확대	인권 의식 고취	인권 행정 감수성 향상	인권 전문가 확대/ 충원	인권 관련 시민 단체 활성화	기타	
전 체	(1003)	23.1	20.4	18.4	12.4	11.3	7.9	6.0	0.5	
장애 여부	장애인	(56)	21.4	28.6	21.4	3.6	12.5	7.1	5.4	0.0
	비장애인	(947)	23.2	20.0	18.3	12.9	11.2	7.9	6.0	0.5
이주민 여부	예	(18)	16.7	16.7	22.2	11.1	16.7	11.1	5.6	0.0
	아니오	(985)	23.2	20.5	18.4	12.4	11.2	7.8	6.0	0.5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21.5	21.5	21.5	12.3	6.2	4.6	10.8	1.5
	고등학교 졸업	(258)	27.1	20.9	13.2	13.2	10.5	8.1	6.6	0.4
	대학 졸업	(610)	21.8	20.2	20.5	11.8	12.3	7.7	5.2	0.5
	대학원 졸업 이상	(70)	21.4	20.0	17.1	14.3	10.0	11.4	5.7	0.0
직업	무직	(114)	25.4	21.9	16.7	11.4	14.0	7.0	3.5	0.0
	전문직	(63)	12.7	25.4	23.8	11.1	9.5	14.3	3.2	0.0
	관리직	(44)	20.5	13.6	25.0	9.1	13.6	6.8	11.4	0.0
	사무직	(328)	20.1	22.3	17.7	12.5	12.8	8.5	5.2	0.9
	판매직	(32)	21.9	18.8	25.0	9.4	6.3	9.4	9.4	0.0
	서비스직	(66)	28.8	19.7	24.2	13.6	7.6	0.0	6.1	0.0
	생산직	(53)	37.7	5.7	11.3	11.3	13.2	13.2	7.5	0.0
	주부·학생 등	(213)	26.3	18.8	16.4	12.7	10.8	7.0	7.0	0.9
	시간제 노동자	(57)	17.5	24.6	26.3	12.3	7.0	5.3	7.0	0.0
	기타	(33)	24.2	27.3	6.1	21.2	6.1	9.1	6.1	0.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에 대해 중복응답(1+2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49.9%, 남성은 42.3%로 '복지분야 시설지원 및 확충'으로 응답하였고, '도시기반시설 확대'를 여성 45.3%와 남성 41.6%로 모두 차선으로 응답하였다. 연령층으로 살펴보면, 10대(47.5%)는 '인권보호 제도 확대'를, 20대(47.4%), 30대(44.1%), 50대(51.8%)는 '복지분야 시설지원 및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고 있으며, 40대(41.6%)와 60대 이상(52.8%)에서는 '도시기반시설 확대'를 높게 꼽았다. 거주지역별로는 계양구

(46.9%)는 ‘도시기반시설 확대’를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복지분야 시설지원 및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9〉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복)

구분		사례수 (명)	복지 분야 시설 지원/ 확충	도시기 반시설 확대	인권 보호 제도 확대	인권 의식 고취	인권 행정 감수성 향상	인권 전문가 확대/ 충원	인권 관련 시민 단체 활성화	기타
전 체		(1003)	46.6	43.7	33.2	23.4	23.2	17.0	11.9	1.0
성별	여성	(563)	49.9	45.3	33.7	24.0	20.6	15.1	10.3	1.1
	남성	(440)	42.3	41.6	32.5	22.7	26.6	19.5	13.9	0.9
연령	10대	(59)	45.8	32.2	47.5	23.7	27.1	11.9	10.2	1.7
	20대	(152)	47.4	42.8	41.4	18.4	19.1	19.7	11.2	0.0
	30대	(177)	44.1	41.8	34.5	23.2	20.9	19.8	13.6	2.3
	40대	(202)	40.1	41.6	34.7	24.8	24.3	19.3	13.4	2.0
	50대	(220)	51.8	42.7	30.5	21.8	27.3	13.6	11.8	0.5
	60대 이상	(193)	49.2	52.8	22.8	28.0	21.8	15.5	9.8	0.0
거주 지역	계양구	(98)	44.9	46.9	34.7	27.6	26.5	12.2	6.1	1.0
	남동구	(164)	43.9	42.1	34.8	24.4	18.9	21.3	12.2	2.4
	미추홀구	(136)	44.9	38.2	35.3	22.8	29.4	16.9	12.5	0.0
	부평구	(167)	47.9	46.7	35.3	23.4	23.4	12.6	10.2	0.6
	서구	(213)	48.4	45.5	31.0	23.0	20.2	17.8	13.6	0.5
	연수구	(134)	49.3	43.3	26.9	25.4	26.9	14.9	12.7	0.7
	중·동·강화·옹진	(91)	45.1	41.8	36.3	16.5	19.8	24.2	14.3	2.2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중복 기준)에 대해 장애인 응답자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 확대(50.0%)’를, 비장애인 응답자 경우 ‘복지분야 시설지원 및 확충(46.9%)’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52.3%) 고등학교 졸업(50.0%) 대학 졸업(44.8%)에서는 ‘복지분야 시설지원 및 확충’을, 대학원 졸업 이상에서는 44.3%의 동일 비율로 ‘복지분야 시설지원 및 확충’, ‘도시기반시설 확대’를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직업별로는 주부·학생(52.6%)과 서비스직(51.5%), 그리고 무직(53.5%)은 ‘복지 분야 시설 지원 및 확충’에서 높게 응답했으며, 시간제 노동자(52.6%), 사무직(45.1%), 전문직(42.9%)은 ‘도시기반시설 확대’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40〉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복)

구분		사례수 (명)	복지 분야 시설 지원/ 확충	도시기 반시설 확대	인권 보호 제도 확대	인권 의식 고취	인권 행정 감수성 향상	인권 전문가 확대/ 충원	인권 관련 시민 단체 활성화	기타
전 체		(1003)	46.6	43.7	33.2	23.4	23.2	17.0	11.9	1.0
장애 여부	장애인	(56)	41.1	50.0	46.4	16.1	19.6	10.7	16.1	0.0
	비장애인	(947)	46.9	43.3	32.4	23.9	23.4	17.4	11.6	1.1
이주민 여부	예	(18)	38.9	38.9	38.9	16.7	27.8	16.7	22.2	0.0
	아니오	(985)	46.7	43.8	33.1	23.6	23.1	17.1	11.7	1.0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52.3	43.1	36.9	23.1	20.0	9.2	13.8	1.5
	고등학교 졸업	(258)	50.0	42.6	30.2	22.5	20.5	19.0	14.7	0.4
	대학 졸업	(610)	44.8	44.1	34.8	23.3	24.8	17.0	10.0	1.3
	대학원 졸업 이상	(70)	44.3	44.3	27.1	28.6	22.9	17.1	15.7	0.0
직업	무직	(114)	53.5	48.2	30.7	18.4	26.3	13.2	9.6	0.0
	전문직	(63)	36.5	42.9	42.9	28.6	22.2	17.5	9.5	0.0
	관리직	(44)	43.2	38.6	31.8	18.2	25.0	25.0	18.2	0.0
	사무직	(328)	42.7	45.1	33.2	22.9	25.3	18.6	10.7	1.5
	판매직	(32)	40.6	37.5	34.4	25.0	15.6	28.1	15.6	3.1
	서비스직	(66)	51.5	36.4	40.9	27.3	18.2	12.1	13.6	0.0
	생산직	(53)	47.2	39.6	18.9	18.9	28.3	24.5	22.6	0.0
	주부·학생 등	(213)	52.6	41.8	32.4	23.9	21.6	14.6	11.7	1.4
	시간제 노동자	(57)	42.1	52.6	36.8	26.3	19.3	10.5	10.5	1.8
	기타	(33)	48.5	45.5	30.3	33.3	18.2	18.2	6.1	0.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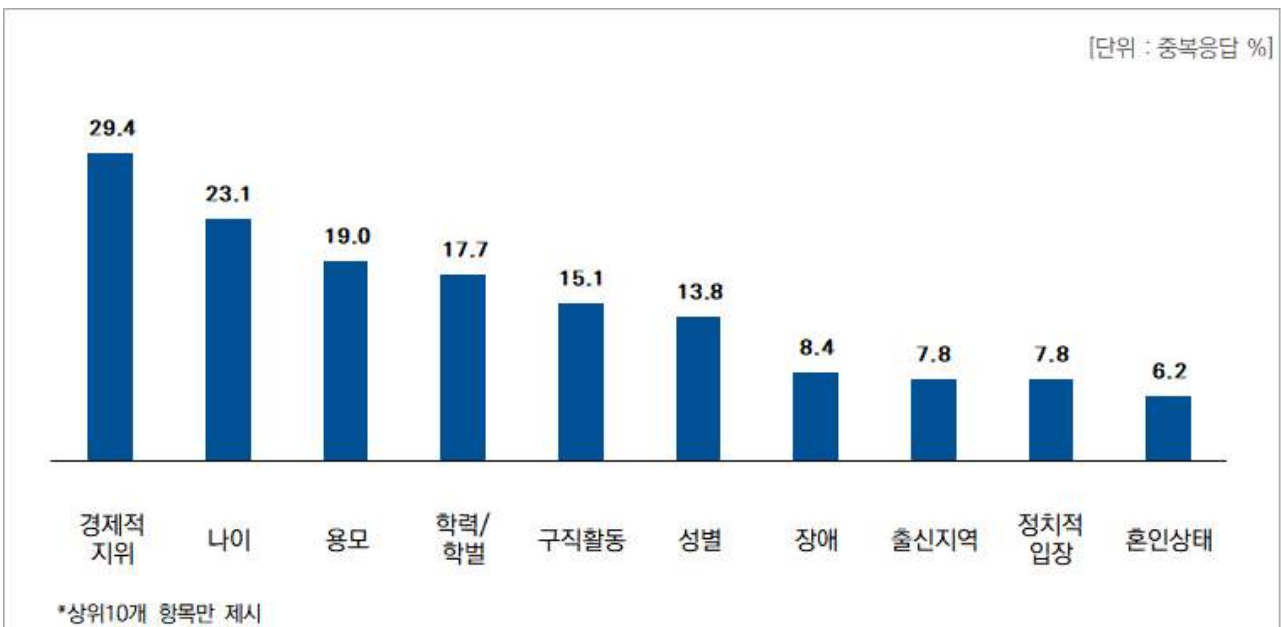
### 3. 인권 침해·차별에 관한 질문

#### 3.1. 인권 침해·차별 경험

##### 1) 전체 분석

인천시민의 인권 침해·차별 경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지위(29.4%), 나이(23.1%), 용모(19.0%)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학력/학벌(17.7%), 구직활동(15.1%), 성별(13.8%), 장애(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시민들이 소득 수준이나 신체적 조건 등 가시적인 요인에 의해 일상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인권 침해·차별 경험



##### 2) 응답자 특성별 비교

인권 침해·차별의 핵심 요인인 '경제적 지위' 관련하여 남성(30.5%)과 여성(28.6%) 모두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을 상대

적으로 더 강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차별을 경험하는 주요 원인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층인 10대(45.8%)와 20대(25.7%)는 ‘용모’를 가장 큰 차별 원인으로 꼽았으며, 특히 10대의 경우 타 연령대와 비교해 용모에 의한 차별 경험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40대(28.2%), 50대(33.6%), 60대 이상(38.3%)으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지위’를 차별의 주된 원인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30대(25.4%)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달리 ‘나이’를 차별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 중·동·강화·옹진(38.5%)과 연수구(35.1%)에서 ‘경제적 지위’에 의한 인권 침해·차별 경험이 타 지역 대비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지역에서는 특정한 요인에 집중되기보다는 ‘경제적 지위’, ‘나이’, ‘용모’ 등에서 다양한 항목에서 차별을 고르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중복, 1/2)

구분		사례수 (명)	경제적 지위	나이	용모	학력/ 학벌	구직 활동	기타	성별	장애
전 체		(1003)	29.4	23.1	19.0	17.7	15.1	14.3	13.8	8.4
성별	여성	(563)	28.6	22.6	21.5	16.9	15.6	14.7	19.4	8.2
	남성	(440)	30.5	23.9	15.9	18.9	14.3	13.6	6.6	8.6
연령	10대	(59)	20.3	13.6	45.8	22.0	1.7	10.2	28.8	6.8
	20대	(152)	23.0	23.0	25.7	24.3	9.9	11.8	26.3	4.6
	30대	(177)	24.3	25.4	16.9	16.4	14.1	14.1	22.6	8.5
	40대	(202)	28.2	18.3	17.8	17.8	11.4	16.8	8.9	7.9
	50대	(220)	33.6	24.1	15.0	14.1	20.9	15.5	6.8	12.3
	60대 이상	(193)	38.3	28.0	13.5	16.6	21.2	13.5	4.1	7.8
거주 지역	계양구	(98)	23.5	22.4	21.4	15.3	16.3	17.3	15.3	5.1
	남동구	(164)	26.8	23.8	23.8	22.0	20.1	12.2	11.0	10.4
	미추홀구	(136)	26.5	22.1	17.6	25.0	12.5	14.7	16.2	6.6
	부평구	(167)	29.9	27.5	18.0	15.6	15.0	12.6	18.0	9.0
	서구	(213)	28.2	20.7	20.2	13.6	14.6	14.1	12.7	7.0
	연수구	(134)	35.1	20.1	18.7	14.9	9.7	18.7	9.0	9.0
	중·동·강화·옹진	(91)	38.5	26.4	9.9	19.8	17.6	11.0	15.4	12.1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응답(모두응답)]

〈표 42〉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중복, 2/2)

구분	사례수 (명)	출신 지역	정치적 입장	혼인 상태	인종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종교	병력	
전 체	(1003)	7.8	7.8	6.2	6.0	4.6	3.8	2.1	
성별	여성	(563)	5.2	7.5	8.5	5.2	4.3	3.2	2.1
	남성	(440)	11.1	8.2	3.2	7.0	5.0	4.5	2.0
연령	10대	(59)	5.1	5.1	0.0	13.6	8.5	8.5	5.1
	20대	(152)	2.6	5.9	2.0	6.6	5.3	2.6	3.3
	30대	(177)	10.2	7.3	13.6	5.6	5.1	4.5	1.1
	40대	(202)	7.9	5.9	8.9	4.5	5.4	3.5	1.5
	50대	(220)	9.5	8.2	3.2	6.4	3.6	3.2	2.7
	60대 이상	(193)	8.3	11.9	5.2	4.7	2.6	3.6	1.0
거주 지역	계양구	(98)	7.1	8.2	8.2	8.2	5.1	4.1	1.0
	남동구	(164)	4.9	7.3	4.3	3.7	4.3	4.3	2.4
	미추홀구	(136)	2.9	9.6	2.9	7.4	3.7	2.9	2.9
	부평구	(167)	6.0	4.2	7.8	7.2	5.4	2.4	1.2
	서구	(213)	10.3	9.4	6.6	5.6	3.8	3.3	1.9
	연수구	(134)	11.2	7.5	6.0	3.7	6.0	6.0	1.5
	중·동·강화·옹진	(91)	13.2	8.8	8.8	7.7	4.4	4.4	4.4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응답(모두응답)]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인천시민은 ‘경제적 지위’와 ‘나이’를 주요 차별 원인으로 꼽았다. 장애인 30.4%와 비장애인 29.4%로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 모두에서 경제적 요인이 인권 침해의 핵심 주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별로는 고등학교 졸업(34.1%), 대학 졸업(28.4%), 대학원 이상 졸업(28.6%) 등 대부분의 학력군에서 ‘경제적 지위’를 가장 높게 응답했으나, 중졸 이하 집단의 경우 ‘용모(30.8%)’에 의한 차별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 분석 결과, 거의 모든 직종에서 ‘경제적 지위’가 주요 차별적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생산직(45.3%), 서비스직(40.9%), 판매직(40.6%) 등 차별 체감도가 월등히 높았다. 한편, 시간제 노동자는 ‘나이(29.8%)’를, 주부·학생층은 ‘용모(23.5%)’를 가장 주된 차별 요인으로 꼽았다. 이주민의 경우 일반 시민 집단에 비해 차별 경험의 강도가 높고 원인 또한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응답자는 ‘경제적 지위(44.4%)’와 ‘학벌/학력(33.3%)’을 주된 차별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표 43〉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 경험 (중복, 1/2)

구분		사례수 (명)	경제적 지위	나이	용모	학력/ 학벌	구직 활동	기타	성별	장애
전 체		(1003)	29.4	23.1	19.0	17.7	15.1	14.3	13.8	8.4
장애 여부	장애인	(56)	30.4	23.2	7.1	14.3	8.9	17.9	10.7	28.6
	비장애인	(947)	29.4	23.1	19.7	18.0	15.4	14.0	13.9	7.2
이주민 여부	예	(18)	44.4	16.7	11.1	33.3	5.6	5.6	5.6	5.6
	아니오	(985)	29.1	23.2	19.2	17.5	15.2	14.4	13.9	8.4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21.5	23.1	30.8	24.6	12.3	12.3	16.9	12.3
	고등학교 졸업	(258)	34.1	22.9	22.9	21.3	19.8	10.9	14.0	8.5
	대학 졸업	(610)	28.4	22.8	16.2	16.1	13.6	15.7	13.6	7.5
	대학원 졸업 이상	(70)	28.6	27.1	18.6	12.9	12.9	15.7	11.4	11.4
직업	무직	(114)	33.3	29.8	14.9	14.9	21.9	11.4	13.2	8.8
	전문직	(63)	39.7	30.2	27.0	14.3	12.7	9.5	17.5	7.9
	관리직	(44)	31.8	20.5	18.2	20.5	11.4	11.4	4.5	9.1
	사무직	(328)	25.9	23.5	19.2	17.1	10.1	15.2	16.5	6.4
	판매직	(32)	40.6	15.6	12.5	21.9	6.3	6.3	12.5	18.8
	서비스직	(66)	40.9	19.7	16.7	22.7	19.7	10.6	15.2	7.6
	생산직	(53)	45.3	20.8	13.2	18.9	17.0	11.3	7.5	11.3
	주부·학생 등	(213)	18.8	17.4	23.5	16.4	16.0	17.4	15.0	9.4
	시간제 노동자	(57)	28.1	29.8	17.5	26.3	28.1	8.8	8.8	7.0
	기타	(33)	39.4	30.3	12.1	15.2	18.2	36.4	3.0	9.1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응답(모두응답)]

〈표 44〉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 경험 (중복, 2/2)

구분		사례수 (명)	출신 지역	정치적 입장	혼인 상태	인종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종교	병력
전 체		(1003)	7.8	7.8	6.2	6.0	4.6	3.8	2.1
장애 여부	장애인	(56)	7.1	7.1	0.0	7.1	7.1	3.6	10.7
	비장애인	(947)	7.8	7.8	6.5	5.9	4.4	3.8	1.6
이주민 여부	예	(18)	0.0	5.6	11.1	5.6	16.7	16.7	11.1
	아니오	(985)	7.9	7.8	6.1	6.0	4.4	3.6	1.9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4.6	9.2	3.1	6.2	9.2	4.6	4.6
	고등학교 졸업	(258)	9.3	7.8	4.7	5.0	4.7	5.0	2.7
	대학 졸업	(610)	7.7	7.4	7.4	5.6	3.8	3.0	1.1
	대학원 졸업 이상	(70)	5.7	10.0	4.3	12.9	7.1	5.7	5.7
직업	무직	(114)	1.8	8.8	3.5	7.0	1.8	4.4	1.8
	전문직	(63)	9.5	17.5	7.9	12.7	4.8	6.3	3.2
	관리직	(44)	11.4	9.1	4.5	6.8	6.8	0.0	2.3
	사무직	(328)	9.5	5.8	9.8	6.7	4.0	3.0	1.5
	판매직	(32)	9.4	6.3	0.0	3.1	15.6	12.5	6.3
	서비스직	(66)	9.1	6.1	4.5	9.1	9.1	3.0	3.0
	생산직	(53)	9.4	7.5	3.8	1.9	5.7	3.8	0.0
	주부·학생 등	(213)	6.6	8.5	3.8	4.7	4.2	4.2	2.8
	시간제 노동자	(57)	7.0	7.0	10.5	1.8	3.5	0.0	1.8
	기타	(33)	6.1	6.1	0.0	0.0	0.0	6.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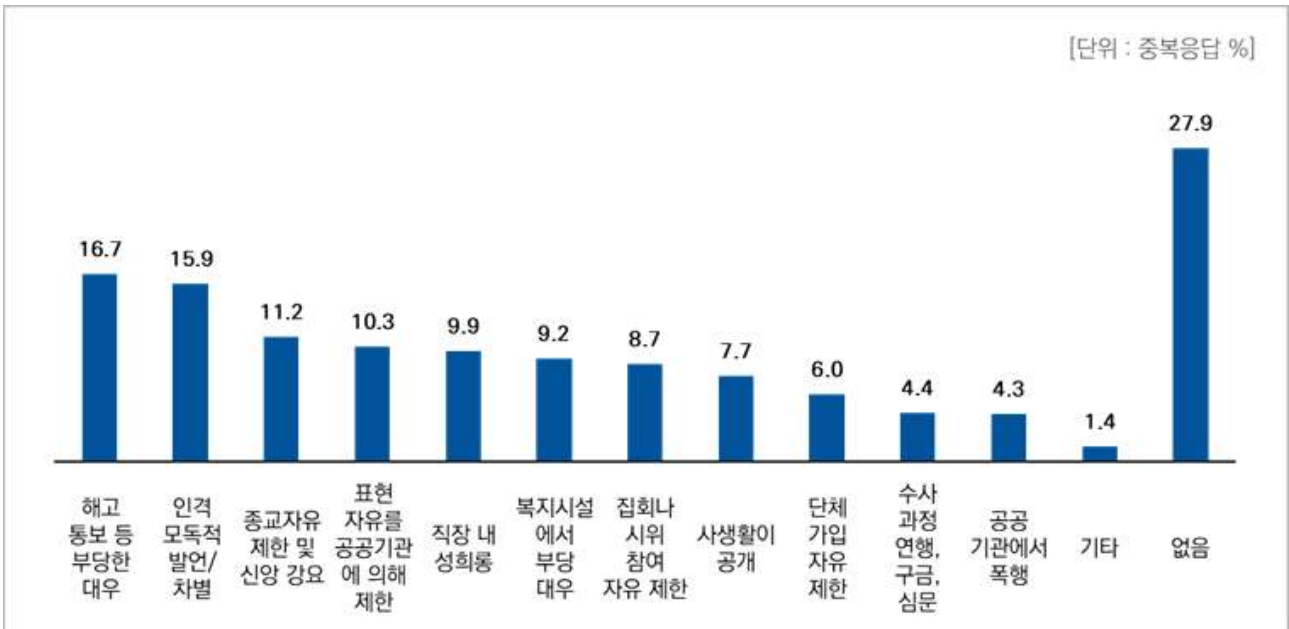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응답(모두응답)]

### 3.2. 영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 1) 전체 분석

인천시민의 최근 3년간 본인 또는 지인 중 인권 침해·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 임금체납 등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16.7%)’로 나타났다. 노동 문제에 이어 인격 모독적 발언/차별(15.9%), 종교 자유 제한 및 신앙 강요(11.2%) 등의 순으로 인권 침해·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공공기관에 의해 제한 받음(10.3%), 직장내 성희롱(9.9%), 복지 시설에서 부당대우(9.2%)가 뒤를 이었다.

〈그림 9〉 영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 2) 응답자 특성별 비교

응답자 특성별로, 성별에 따라 체감하는 주요 인권침해 유형은 남성(17.3%)은 ‘인격 모독

적 발언이나 차별 경험'을 가장 높게 꼽은 반면, 여성(16.7%)은 '해고 통보, 임금체납 등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인권침해의 핵심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20대(13.2%), 40대(17.3%), 50대(19.5%)는 '해고 통보, 임금체납 등 부당한 대우'를 가장 큰 피해 사례로 꼽았다. 반면, 30대(19.2%)와 60대 이상(21.2%)은 '모독적 발언 및 차별'에 의한 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표현자유를 공공기관에 의해 제한'과 '집회나 시위 참여 자유 제한'에 대해 각각 16.9%라는 동일한 비율로 응답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 중·동·강화·옹진(25.3%), 미추홀구(13.2%), 부평구(19.2%) 지역에서는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 경험'이 주된 침해 사례로 보고된 반면, 계양구(16.3%), 남동구(18.3%), 서구(16.4%), 연수구(17.9%) 등지에서는 '해고 통보 등 부당한 대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영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중복, 1/2)

구분		사례수 (명)	해고 통보 등 부당한 대우	인격 모독적 발언/ 차별 당함	종교 자유 제한 및 신앙 강요	표현 자유를 공공기 관에 의해 제한	직장 내 성희롱	복지시 설에서 부당 대우	집회나 시위 참여 자유 제한
전 체		(1003)	16.7	15.9	11.2	10.3	9.9	9.2	8.7
성별	여성	(563)	16.7	14.7	11.5	8.5	11.0	10.3	6.9
	남성	(440)	16.8	17.3	10.7	12.5	8.4	7.7	10.9
연령	10대	(59)	5.1	10.2	10.2	16.9	10.2	6.8	16.9
	20대	(152)	13.2	11.8	11.8	11.8	10.5	5.9	6.6
	30대	(177)	16.9	19.2	14.7	11.9	13.0	7.3	8.5
	40대	(202)	17.3	12.4	11.4	9.4	10.4	5.0	8.9
	50대	(220)	19.5	15.9	12.3	9.5	6.4	5.5	9.1
	60대 이상	(193)	19.2	21.2	6.2	7.3	9.8	22.8	7.3
거주 지역	계양구	(98)	16.3	14.3	14.3	12.2	8.2	4.1	9.2
	남동구	(164)	18.3	16.5	12.2	9.8	14.0	9.8	5.5
	미추홀구	(136)	10.3	13.2	8.1	8.1	9.6	10.3	6.6
	부평구	(167)	18.6	19.2	10.8	9.0	4.8	12.6	12.0
	서구	(213)	16.4	13.1	12.2	8.5	12.2	8.9	9.9
	연수구	(134)	17.9	12.7	10.4	12.7	9.0	9.7	9.7
	중·동·강화·옹진	(91)	19.8	25.3	9.9	15.4	9.9	5.5	6.6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응답(모두응답)]

〈표 46〉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영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중복, 2/2)

구분		사례수 (명)	사생활 공개됨	단체 가입 자유 제한	수사 과정 연행, 구금, 심문	공공기관에서 폭행	기타
전 체		(1003)	7.7	6.0	4.4	4.3	29.3
성별	여성	(563)	6.2	5.7	2.0	3.6	30.9
	남성	(440)	9.5	6.4	7.5	5.2	27.3
연령	10대	(59)	10.2	5.1	1.7	11.9	27.1
	20대	(152)	7.9	7.2	5.3	4.6	27.0
	30대	(177)	7.9	7.9	1.7	2.3	26.6
	40대	(202)	6.4	4.5	4.0	5.0	36.1
	50대	(220)	9.1	5.0	6.8	4.5	31.8
	60대 이상	(193)	6.2	6.2	4.7	2.6	24.4
거주 지역	계양구	(98)	5.1	5.1	4.1	3.1	31.6
	남동구	(164)	7.3	4.9	3.7	5.5	26.2
	미추홀구	(136)	8.8	3.7	4.4	5.1	39.0
	부평구	(167)	9.0	9.0	4.2	3.0	28.1
	서구	(213)	9.4	7.5	4.2	3.3	29.1
	연수구	(134)	6.7	3.0	5.2	6.0	29.1
	중·동·강화·옹진	(91)	4.4	7.7	5.5	4.4	20.9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응답(모두응답)]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노동 현장에서의 권익 침해를 주요한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 응답자의 17.9%는 ‘해고 통보, 임금체납 등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가장 큰 피해 사례로 꼽았다. 비장애인 역시 해고 통보 및 임금체납 등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16.7%)’와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 경험(16.2%)’이 유사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 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19.0%) 및 대학교 졸업(16.7%) 집단은 해고 통보, 임금체납 등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가장 많이 경험한 반면, 중졸이하(20.0%) 집단에서는 ‘복지시설에서 부당대우’가 주요 침해 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 졸업 이상(18.6%)의 고학력층에서는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 경험’을 경험을 가장 높게 응답했다. 직업별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전문직(23.8%), 관리직(25.0%) 서비스직(27.3%)에서는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 경험’을 주된 침해 경험으로 꼽았다. 사무직(17.4%), 생산직(18.9%), 시간제 노동자(21.1%) 및 무직(20.2%) 상태의 시민들은 ‘해고 통보, 임금체납 등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영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중복, 1/2)

구분	사례수 (명)	해고 통등 부당 대우	인격적 모독적 발언/ 차별 당함	종교 자유 제한 및 신앙 강요	표현 자유 공공 기관 에 의 해 제한	직장 내 성희롱	복지 시설 에서 부 당 대우	집회 나 위 임 자 유 제한	사생활 공개 침해	
전 체	(1003)	16.7	15.9	11.2	10.3	9.9	9.2	8.7	7.7	
장애 여부	장애인	(56)	17.9	10.7	3.6	16.1	7.1	8.9	16.1	14.3
	비장애인	(947)	16.7	16.2	11.6	9.9	10.0	9.2	8.2	7.3
이주민 여부	예	(18)	16.7	16.7	22.2	22.2	11.1	11.1	16.7	22.2
	아니오	(985)	16.8	15.8	11.0	10.1	9.8	9.1	8.5	7.4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12.3	16.9	12.3	12.3	7.7	20.0	10.8	7.7
	고등학교 졸업	(258)	19.0	15.1	11.2	9.7	7.8	9.3	10.9	10.1
	대학 졸업	(610)	16.7	15.7	11.0	10.2	10.3	8.4	6.9	6.6
	대학원 졸업 이상	(70)	12.9	18.6	11.4	11.4	15.7	5.7	14.3	8.6
직업	무직	(114)	20.2	10.5	9.6	12.3	11.4	11.4	7.9	8.8
	전문직	(63)	6.3	23.8	11.1	12.7	9.5	6.3	7.9	11.1
	관리직	(44)	13.6	25.0	11.4	18.2	6.8	15.9	15.9	9.1
	사무직	(328)	17.4	16.8	11.9	12.5	12.2	6.4	7.3	7.9
	판매직	(32)	12.5	15.6	15.6	9.4	6.3	15.6	9.4	21.9
	서비스직	(66)	19.7	27.3	13.6	10.6	18.2	13.6	16.7	4.5
	생산직	(53)	18.9	18.9	7.5	7.5	5.7	5.7	7.5	5.7
	주부·학생 등	(213)	14.6	12.2	10.3	6.6	7.5	10.3	7.5	4.7
	시간제 노동자	(57)	21.1	7.0	14.0	7.0	5.3	12.3	8.8	10.5
기타	(33)	24.2	9.1	6.1	0.0	3.0	3.0	9.1	3.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응답(모두응답)]

〈표 48〉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 경험 (중복, 2/2)

구분	사례수 (명)	단체 가입 자유 제한	수사 과정 연행, 구금, 심문	공공기관에 서 폭행	기타	
전 체	(1003)	6.0	4.4	4.3	29.3	
장애 여부	장애인	(56)	5.4	3.6	3.6	26.8
	비장애인	(947)	6.0	4.4	4.3	29.5
이주민 여부	예	(18)	5.6	5.6	5.6	11.1
	아니오	(985)	6.0	4.4	4.3	29.6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4.6	0.0	6.2	21.5
	고등학교 졸업	(258)	6.2	5.4	4.3	24.8
	대학 졸업	(610)	6.1	3.6	3.9	32.6
	대학원 졸업 이상	(70)	5.7	11.4	5.7	24.3
직업	무직	(114)	3.5	4.4	2.6	28.9
	전문직	(63)	9.5	12.7	0.0	27.0
	관리직	(44)	13.6	9.1	2.3	22.7
	사무직	(328)	5.5	3.0	5.2	29.3
	판매직	(32)	9.4	3.1	0.0	21.9
	서비스직	(66)	6.1	6.1	4.5	10.6
	생산직	(53)	9.4	7.5	7.5	24.5
	주부·학생 등	(213)	3.8	1.9	5.2	37.1
	시간제 노동자	(57)	7.0	3.5	7.0	31.6
기타	(33)	6.1	6.1	0.0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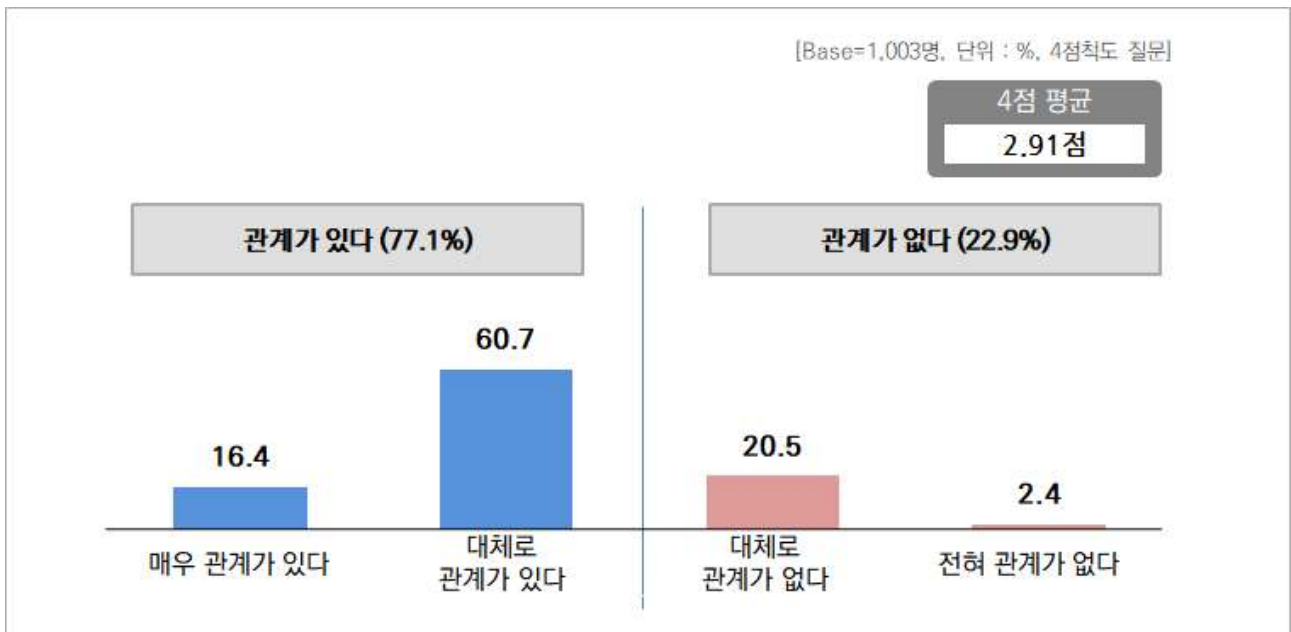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응답(모두응답)]

### 3.3. 인권 침해·차별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인식

#### 1) 전체 분석

인천시민의 대다수는 경제적 여건이 인권 침해·차별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인천시민 10명 중 약 8명에 해당하는 77.1%가 ‘인권 침해·차별과 소득수준은 관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수준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대체로 관계가 있다’는 응답이 6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매우 관계가 있다’는 응답도 16.4%에 달해 시민이 느끼는 관계 인식도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관계가 없다’는 부정적 응답은 22.9%에 그쳤다.

〈그림 10〉 인권 침해·차별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인식



※ 본 문항은 인권 침해·차별 실태와 소득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측정된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과의 관계 관련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임

#### 2) 응답자 특성별 비교

인권 침해·차별과 소득수준과 관계가 있다는 인식은 성별로는 남성(79.3%)이 여성

(75.3%) 보다 소득에 따른 차별 가능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60대 이상(83.4%)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50대(81.4%), 40대(7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대(71.8%) 이하 청년 및 청소년층(10대 69.5%)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에서 70% 안팎의 높은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 인천 전 지역에서 소득과 인권침해의 상관관계를 70% 이상으로 높은 평가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계양구(81.6%)와 중·동·강화·옹진(81.3%) 지역 시민들은 소득수준이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인식

구분		사례수 (명)	① 매우 관계가 있다	② 대체로 관계가 있다	③ 대체로 관계가 없다	④ 전혀 관계가 없다	긍정률 (①+②)	부정률 (③+④)	4점 척도 평균 (점)
전 체		(1003)	16.4	60.7	20.5	2.4	77.1	22.9	2.91
성별	여성	(563)	16.0	59.3	21.8	2.8	75.3	24.7	2.88
	남성	(440)	16.8	62.5	18.9	1.8	79.3	20.7	2.94
연령	10대	(59)	18.6	50.8	27.1	3.4	69.5	30.5	2.85
	20대	(152)	12.5	57.9	26.3	3.3	70.4	29.6	2.80
	30대	(177)	18.1	53.7	26.6	1.7	71.8	28.2	2.88
	40대	(202)	14.9	63.4	18.8	3.0	78.2	21.8	2.90
	50대	(220)	16.8	64.5	16.8	1.8	81.4	18.6	2.96
	60대 이상	(193)	18.1	65.3	14.5	2.1	83.4	16.6	2.99
거주 지역	계양구	(98)	19.4	62.2	18.4	0.0	81.6	18.4	3.01
	남동구	(164)	19.5	59.1	18.9	2.4	78.7	21.3	2.96
	미추홀구	(136)	13.2	66.2	18.4	2.2	79.4	20.6	2.90
	부평구	(167)	17.4	56.3	24.6	1.8	73.7	26.3	2.89
	서구	(213)	12.2	65.3	19.7	2.8	77.5	22.5	2.87
	연수구	(134)	20.1	50.0	24.6	5.2	70.1	29.9	2.85
	중·동·강화·옹진	(91)	14.3	67.0	17.6	1.1	81.3	18.7	2.95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4점척도 질문]

인권 침해·차별이 소득수준과 관계가 있다는 인식에 대해 비장애인(77.8%)이 장애인(64.3%)보다 13.5%p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분석에서는 중졸 이하(72.3%)부터 대학원

졸업 이상(77.1%)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력층에서 7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학력 수준과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문제를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도 소득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관리직(86.4%)과 무직(85.1%) 그리고 시간제 노동자(80.7%) 집단에서 소득수준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고 있었다.

〈표 50〉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인식

구분		사례수 (명)	① 매우 관계가 있다	② 대체로 관계가 있다	③ 대체로 관계가 없다	④ 전혀 관계가 없다	긍정률 (①+②)	부정률 (③+④)	4점 척도 평균 (점)
전 체		(1003)	16.4	60.7	20.5	2.4	77.1	22.9	2.91
장애 여부	장애인	(56)	19.6	44.6	30.4	5.4	64.3	35.7	2.79
	비장애인	(947)	16.2	61.7	20.0	2.2	77.8	22.2	2.92
이주민 여부	예	(18)	16.7	38.9	44.4	0.0	55.6	44.4	2.72
	아니오	(985)	16.3	61.1	20.1	2.4	77.5	22.5	2.91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15.4	56.9	23.1	4.6	72.3	27.7	2.83
	고등학교 졸업	(258)	15.5	58.1	22.5	3.9	73.6	26.4	2.85
	대학 졸업	(610)	17.0	62.0	19.2	1.8	79.0	21.0	2.94
	대학원 졸업 이상	(70)	14.3	62.9	22.9	0.0	77.1	22.9	2.91
직업	무직	(114)	16.7	68.4	14.0	0.9	85.1	14.9	3.01
	전문직	(63)	20.6	49.2	30.2	0.0	69.8	30.2	2.90
	관리직	(44)	25.0	61.4	11.4	2.3	86.4	13.6	3.09
	사무직	(328)	14.6	60.7	22.3	2.4	75.3	24.7	2.88
	판매직	(32)	15.6	53.1	31.3	0.0	68.8	31.3	2.84
	서비스직	(66)	18.2	56.1	21.2	4.5	74.2	25.8	2.88
	생산직	(53)	20.8	54.7	18.9	5.7	75.5	24.5	2.91
	주부·학생 등	(213)	15.5	59.6	21.6	3.3	75.1	24.9	2.87
	시간제 노동자	(57)	10.5	70.2	19.3	0.0	80.7	19.3	2.91
	기타	(33)	18.2	72.7	6.1	3.0	90.9	9.1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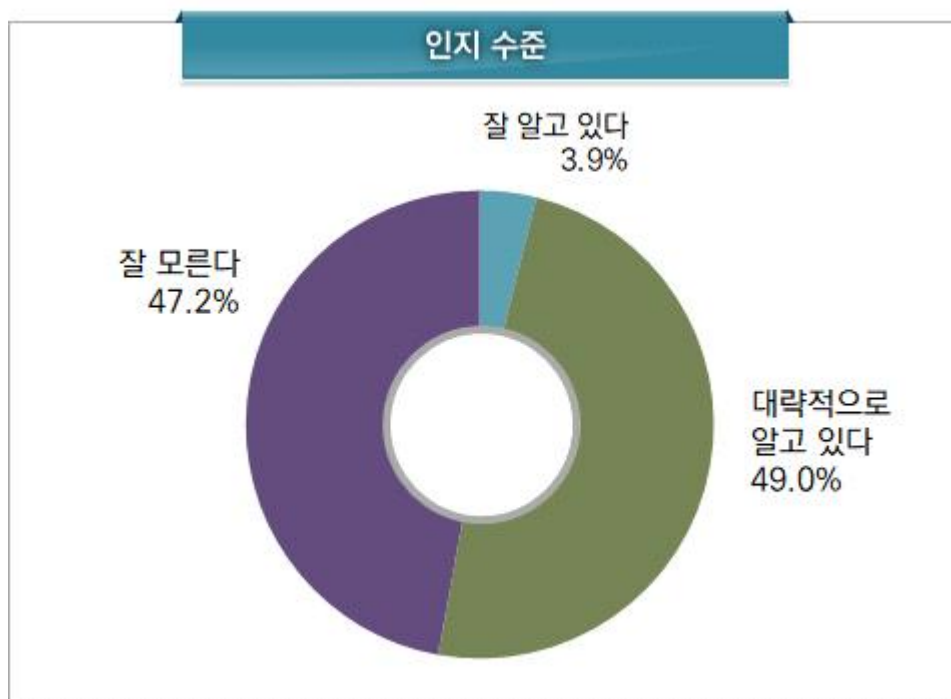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4점척도 질문]

### 3.4.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처 방안 인지 수준

#### 1) 전체 분석

인권 침해·차별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1.8%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49.0%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적극적 인지 층은 3.9%에 불과해 정보의 구체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 방법을 잘 모른다는 응답 비율도 47.2%에 달해 인지층과의 격차가 단 2.8%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민 2명 중 1명꼴로 인권 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구제 절차의 경로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처방안 인지 수준



## 2) 응답자 특성별 비교

응답자 특성별로는 인권 침해·차별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도는 성별에 따라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51.5%)에서 남성(41.6%)보다 약9.9%p 높게 나타났다. 연령 대별로는 40대(53.5%)와 30대(51.4%)에서 대처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기며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10대의 경우 응답자의 66.1%가 세부 내용까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인지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계양구(52.0%)와 미추홀구(52.2%), 중·동·강화·옹진(52.7%)지역은 대처방법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부평구(39.5%)는 미숙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1〉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처방법 인지도

구분		사례수 (명)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 체		(1003)	3.9	49.0	47.2
성별	여성	(563)	3.0	45.5	51.5
	남성	(440)	5.0	53.4	41.6
연령	10대	(59)	1.7	64.4	33.9
	20대	(152)	6.6	48.7	44.7
	30대	(177)	5.1	43.5	51.4
	40대	(202)	2.5	44.1	53.5
	50대	(220)	3.6	49.5	46.8
	60대 이상	(193)	3.1	53.9	43.0
거주 지역	계양구	(98)	2.0	45.9	52.0
	남동구	(164)	3.0	52.4	44.5
	미추홀구	(136)	3.7	44.1	52.2
	부평구	(167)	1.8	58.7	39.5
	서구	(213)	6.6	44.6	48.8
	연수구	(134)	3.7	51.5	44.8
	중·동·강화·옹진	(91)	5.5	41.8	52.7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적극적 인지 층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 응답자(8.9%)가 비장애인 응답자(3.6%)에 비해 약2.5배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 고학력층의 64.3%가 대처 방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업별로는 전문직(76.2%)과 관리직(65.9%)에서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의 경우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비율(9.5%)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활동이 없는 무직 집단에서는 대처 방법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57.9%에 달해 과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처방법 인지도

구분		사례수 (명)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 체		(1003)	3.9	49.0	47.2
장애 여부	장애인	(56)	8.9	46.4	44.6
	비장애인	(947)	3.6	49.1	47.3
이주민 여부	예	(18)	22.2	44.4	33.3
	아니오	(985)	3.6	49.0	47.4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4.6	53.8	41.5
	고등학교 졸업	(258)	0.8	48.4	50.8
	대학 졸업	(610)	4.9	47.5	47.5
	대학원 졸업 이상	(70)	5.7	58.6	35.7
직업	무직	(114)	0.9	41.2	57.9
	전문직	(63)	9.5	66.7	23.8
	관리직	(44)	6.8	59.1	34.1
	사무직	(328)	5.2	48.8	46.0
	판매직	(32)	9.4	46.9	43.8
	서비스직	(66)	4.5	59.1	36.4
	생산직	(53)	5.7	41.5	52.8
	주부·학생 등	(213)	0.9	44.1	54.9
	시간제 노동자	(57)	1.8	43.9	54.4
	기타	(33)	0.0	63.6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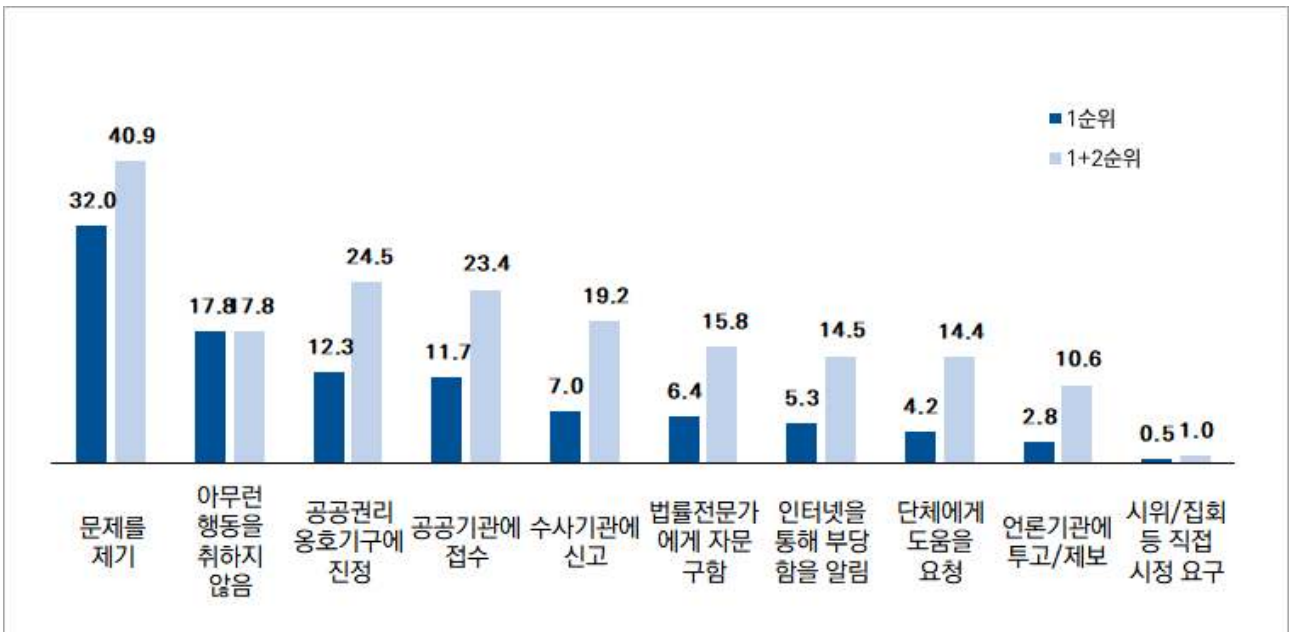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 3.5.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대처 유형

#### 1) 전체 분석

인권침해나 차별을 직접 경험한 인천시민들의 대응 방식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40.9%(중복 응답 기준)가 당사자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명 중 4명 정도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목소리를 내거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인권침해나 차별을 겪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7.8%로 조사되었다.

〈그림 12〉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행동



#### 2) 응답자 특성별 비교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후 대처 유형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1순위 기준)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에 대해, 여성(18,8%)이 남성(16,6%)보다 침해 경험 후 대응을 포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

대별로는 20대(21.7%)와 50대(21.4%)에서 무대응 응답이 타 연령대 대비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대응 방식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다. 중·동·강화·옹진(29.7%), 부평구(23.4%), 연수구(21.6%) 지역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겪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며 높게 형성되었다. 반면 미추홀구의 경우 무대응 비율이 11.0%에 그쳐, 인천 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대처 유형 (1순위, 1/2)

구분		사례수 (명)	문제를 제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	공공 권리 옹호 기구에 진정	공공 기관에 진정서 접수	수사 기관에 신고	법률 전문가 에게 자문구함
전 체		(1003)	32.0	17.8	12.3	11.7	7.0	6.4
성별	여성	(563)	31.6	18.8	10.1	10.1	5.5	7.6
	남성	(440)	32.5	16.6	15.0	13.6	8.9	4.8
연령	10대	(59)	25.4	18.6	15.3	13.6	11.9	5.1
	20대	(152)	30.9	21.7	11.8	10.5	4.6	7.2
	30대	(177)	32.8	16.9	5.6	11.3	9.6	7.9
	40대	(202)	29.7	16.3	11.9	15.3	6.9	7.9
	50대	(220)	31.8	21.4	12.3	11.4	6.8	5.0
	60대 이상	(193)	36.8	13.0	18.1	8.8	5.2	4.7
거주 지역	계양구	(98)	38.8	14.3	14.3	10.2	4.1	6.1
	남동구	(164)	28.0	15.2	11.6	14.0	6.7	7.9
	미추홀구	(136)	30.1	11.0	14.7	14.7	6.6	11.0
	부평구	(167)	34.1	23.4	12.0	12.0	3.0	4.2
	서구	(213)	35.2	14.1	10.8	8.9	11.7	6.1
	연수구	(134)	32.1	21.6	13.4	11.2	5.2	4.5
	중·동·강화·옹진	(91)	23.1	29.7	9.9	11.0	9.9	4.4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표 54〉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대처 유형 (1순위, 2/2)

구분		사례수 (명)	인터넷을 통해 부당함을 알림	단체에 도움을 요청	언론기관에 투고/제보	시위/집회 등 직접 시정 요구	기타
전 체		(1003)	5.3	4.2	2.8	0.5	0.1
성별	여성	(563)	6.9	5.5	3.4	0.2	0.2
	남성	(440)	3.2	2.5	2.0	0.9	0.0
연령	10대	(59)	6.8	3.4	0.0	0.0	0.0
	20대	(152)	9.2	2.6	0.7	0.7	0.0
	30대	(177)	5.6	5.6	2.8	1.1	0.6
	40대	(202)	4.0	2.5	4.5	1.0	0.0
	50대	(220)	3.6	4.1	3.6	0.0	0.0
	60대 이상	(193)	4.7	6.2	2.6	0.0	0.0
거주 지역	계양구	(98)	5.1	3.1	4.1	0.0	0.0
	남동구	(164)	6.7	5.5	3.7	0.6	0.0
	미추홀구	(136)	4.4	2.9	2.2	1.5	0.7
	부평구	(167)	3.0	5.4	3.0	0.0	0.0
	서구	(213)	5.2	4.7	3.3	0.0	0.0
	연수구	(134)	6.0	4.5	1.5	0.0	0.0
	중·동·강화·옹진	(91)	7.7	1.1	1.1	2.2	0.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 후 대처 유형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1순위 기준)로 살펴보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응답은 비장애인(33.1%)이 장애인 경우(14.3%)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응답은 대학 졸업(34.1%)과 대학원 졸업 이상(35.7%)에서 높은 반면, 중졸 이하(27.7%)와 고등학교 졸업(27.1%)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대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중졸이하(23.1%)에서 가장 높았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점차 낮아져 대학원 졸업 이상에서는 12.9%에 그쳤다. 직업별 분석한 결과, 인권침해를 겪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에 응답은 판매직(25.0%)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무직(22.8%)과 시간제 근무자(2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대처 유형 (1순위, 1/2)

구분		사례수 (명)	문제를 제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	공공권리 옹호기구 에 진정	공공기관 에 진정서 접수	수사기관 에 신고	법을 전문가에게 자문 구함
전 체		(1003)	32.0	17.8	12.3	11.7	7.0	6.4
장애 여부	장애인	(56)	14.3	21.4	21.4	23.2	3.6	7.1
	비장애인	(947)	33.1	17.6	11.7	11.0	7.2	6.3
이주민 여부	예	(18)	16.7	11.1	11.1	27.8	5.6	16.7
	아니오	(985)	32.3	18.0	12.3	11.4	7.0	6.2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27.7	23.1	16.9	6.2	7.7	4.6
	고등학교 졸업	(258)	27.1	20.5	14.3	14.0	7.0	7.8
	대학 졸업	(610)	34.1	16.7	10.8	10.8	6.7	6.2
	대학원 졸업 이상	(70)	35.7	12.9	12.9	15.7	8.6	4.3
직업	무직	(114)	26.3	22.8	14.0	8.8	8.8	4.4
	전문직	(63)	38.1	17.5	11.1	9.5	4.8	7.9
	관리직	(44)	22.7	15.9	15.9	18.2	11.4	2.3
	사무직	(328)	32.6	19.8	11.0	11.6	7.0	5.8
	판매직	(32)	15.6	25.0	18.8	15.6	6.3	6.3
	서비스직	(66)	34.8	12.1	10.6	16.7	1.5	7.6
	생산직	(53)	30.2	18.9	11.3	7.5	15.1	13.2
	주부·학생 등	(213)	35.7	14.6	10.8	10.3	6.6	7.0
	시간제 노동자	(57)	33.3	22.8	10.5	15.8	3.5	5.3
	기타	(33)	33.3	0.0	27.3	12.1	6.1	6.1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표 56〉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대처 유형 (1순위, 2/2)

구분		사례수 (명)	인터넷을 통해 부당함을 알림	단체에 도움을 요청	언론기관에 투고/제보	시위/집회 등 직접 시정 요구	기타
전 체		(1003)	5.3	4.2	2.8	0.5	0.1
장애 여부	장애인	(56)	3.6	1.8	3.6	0.0	0.0
	비장애인	(947)	5.4	4.3	2.7	0.5	0.1
이주민 여부	예	(18)	0.0	5.6	5.6	0.0	0.0
	아니오	(985)	5.4	4.2	2.7	0.5	0.1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7.7	6.2	0.0	0.0	0.0
	고등학교 졸업	(258)	3.1	3.9	1.9	0.4	0.0
	대학 졸업	(610)	6.2	4.1	3.6	0.7	0.0
	대학원 졸업 이상	(70)	2.9	4.3	1.4	0.0	1.4
직업	무직	(114)	8.8	.9	5.3	0.0	0.0
	전문직	(63)	4.8	1.6	3.2	1.6	0.0
	관리직	(44)	0.0	4.5	4.5	4.5	0.0
	사무직	(328)	6.4	3.7	1.8	0.3	0.0
	판매직	(32)	0.0	9.4	3.1	0.0	0.0
	서비스직	(66)	3.0	6.1	6.1	1.5	0.0
	생산직	(53)	3.8	0.0	0.0	0.0	0.0
	주부·학생 등	(213)	5.2	6.1	3.3	0.0	0.5
	시간제 노동자	(57)	3.5	5.3	0.0	0.0	0.0
	기타	(33)	6.1	9.1	0.0	0.0	0.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처 유형에 대해 중복응답(1+2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권 침해나 차별을 경험 후 여성(42.5%)은 남성(38.9%)에 비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대응 방식의 양극화가 뚜렷했다. 20대(21.7%)와 50대(21.4%)는 타 연령대 대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응답이 높았던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문제 제기(47.2%)’와 ‘공공권리 옹호 기구에 진정(34.7%)’ 등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대응 방식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렸다. 중·동·강화·옹진(29.7%)과 부평구(23.4%)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무대응 비율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반면, 계양구는 ‘문제를 제기한다(46.9%)’는 응답뿐만 아니라 ‘공공권리 옹호 기구에 진정하겠다(32.7%)’는 응답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57〉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행동 (중복, 1/2)

구분		사례수 (명)	문제를 제기	공공권리 옹호기구에 진정	공공 기관에 진정서 접수	수사 기관에 신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	법률 전문가에 게 자문 구함
전 체		(1003)	40.9	24.5	23.4	19.2	17.8	15.8
성별	여성	(563)	42.5	21.0	21.5	18.3	18.8	17.1
	남성	(440)	38.9	29.1	25.9	20.5	16.6	14.1
연령	10대	(59)	33.9	23.7	28.8	28.8	18.6	10.2
	20대	(152)	39.5	21.7	20.4	19.7	21.7	18.4
	30대	(177)	41.2	16.9	22.6	22.0	16.9	21.5
	40대	(202)	38.1	24.8	30.7	18.3	16.3	15.3
	50대	(220)	40.5	23.6	22.7	16.8	21.4	11.8
	60대 이상	(193)	47.2	34.7	18.1	17.1	13.0	15.0
거주 지역	계양구	(98)	46.9	32.7	18.4	15.3	14.3	18.4
	남동구	(164)	39.0	25.6	28.0	19.5	15.2	17.7
	미추홀구	(136)	42.6	21.3	27.2	21.3	11.0	22.8
	부평구	(167)	38.9	25.7	23.4	15.6	23.4	10.2
	서구	(213)	44.6	23.9	21.1	23.9	14.1	15.5
	연수구	(134)	41.0	23.1	21.6	14.9	21.6	15.7
	중·동·강화·옹진	(91)	29.7	19.8	23.1	22.0	29.7	9.9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표 58〉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행동 (중복, 2/2)

구분		사례수 (명)	인터넷을 통해 부당함을 알림	단체에 도움을 요청	언론기관에 투고/제보	시위/집회 등 직접 시정 요구	기타
전 체		(1003)	14.5	14.4	10.6	1.0	0.1
성별	여성	(563)	16.3	14.2	10.8	0.5	0.2
	남성	(440)	12.0	14.5	10.2	1.6	0.0
연령	10대	(59)	15.3	13.6	6.8	1.7	0.0
	20대	(152)	22.4	8.6	5.3	0.7	0.0
	30대	(177)	11.9	13.6	14.1	1.7	0.6
	40대	(202)	14.4	11.4	13.4	1.0	0.0
	50대	(220)	11.4	16.8	13.2	0.5	0.0
	60대 이상	(193)	14.0	20.2	6.7	1.0	0.0
거주 지역	계양구	(98)	11.2	13.3	15.3	0.0	0.0
	남동구	(164)	14.0	14.0	11.0	0.6	0.0
	미추홀구	(136)	14.7	15.4	10.3	1.5	0.7
	부평구	(167)	13.2	15.6	10.2	0.6	0.0
	서구	(213)	14.1	16.9	11.7	0.0	0.0
	연수구	(134)	17.9	13.4	7.5	1.5	0.0
	중·동·강화·옹진	(91)	16.5	7.7	7.7	4.4	0.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인권 침해·차별 경험시 대응 방식을 분석한 결과(중복 응답 기준), 장애인 응답자의 21.4%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비장애인(17.6%)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비장애인은 ‘문제를 제기(41.9%)’를 하겠다는 응답이 높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응답은 대학원 졸업 이상(42.9%)과 대학 졸업(42.0%)에서 높은 반면, 고등학교 졸업(38.8%)과 중졸이하(36.9%)로 갈수록 점차 낮아졌다. 특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응답은 중졸이하(23.1%)가 대학원 졸업 이상(12.9%)보다 약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주부·학생(46.0%)과 전문직(42.9%)은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를 제기’ 의사를 보여 적극적인 권리 옹호 성향을 보였다. 반면, 판매직(25.0%), 무직(22.8%), 시간제 노동자(22.8%) 직군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무대응 비율이 타 직종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표 59〉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행동 (중복, 1/2)

구분		사례수 (명)	문제를 제기	공공권리 옹호 기구에 진정	공공 기관에 진정서 접수	수사 기관에 신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	법률 전문가에 게 자문 구함
전 체		(1003)	40.9	24.5	23.4	19.2	17.8	15.8
장애 여부	장애인	(56)	23.2	35.7	32.1	17.9	21.4	8.9
	비장애인	(947)	41.9	23.9	22.9	19.3	17.6	16.2
이주민 여부	예	(18)	27.8	22.2	38.9	27.8	11.1	22.2
	아니오	(985)	41.1	24.6	23.1	19.1	18.0	15.6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36.9	23.1	18.5	20.0	23.1	7.7
	고등학교 졸업	(258)	38.8	24.4	23.6	18.2	20.5	16.7
	대학 졸업	(610)	42.0	25.1	22.8	19.7	16.7	15.7
	대학원 졸업 이상	(70)	42.9	21.4	32.9	18.6	12.9	20.0
직업	무직	(114)	40.4	26.3	19.3	17.5	22.8	14.9
	전문직	(63)	42.9	25.4	25.4	17.5	17.5	19.0
	관리직	(44)	29.5	29.5	29.5	20.5	15.9	9.1
	사무직	(328)	40.9	21.6	22.9	22.9	19.8	14.9
	판매직	(32)	18.8	37.5	21.9	12.5	25.0	25.0
	서비스직	(66)	40.9	24.2	31.8	18.2	12.1	10.6
	생산직	(53)	39.6	28.3	18.9	24.5	18.9	17.0
	주부·학생 등	(213)	46.0	20.2	22.1	17.8	14.6	16.9
	시간제 노동자	(57)	38.6	28.1	22.8	8.8	22.8	21.1
	기타	(33)	48.5	42.4	33.3	18.2	0.0	12.1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표 60〉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 침해·차별 경험 시 행동 (중복, 2/2)

구분		사례수 (명)	인터넷을 통해 부당함을 알림	단체에 도움을 요청	언론기관에 투고/제보	시위/집회 등 직접 시정 요구	기타
전 체		(1003)	14.5	14.4	10.6	1.0	0.1
장애 여부	장애인	(56)	12.5	14.3	12.5	0.0	0.0
	비장애인	(947)	14.6	14.4	10.5	1.1	0.1
이주민 여부	예	(18)	5.6	16.7	11.1	5.6	0.0
	아니오	(985)	14.6	14.3	10.6	0.9	0.1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18.5	20.0	7.7	1.5	0.0
	고등학교 졸업	(258)	15.9	11.6	8.5	1.2	0.0
	대학 졸업	(610)	13.8	14.4	12.1	1.0	0.0
	대학원 졸업 이상	(70)	11.4	18.6	7.1	0.0	1.4
직업	무직	(114)	13.2	11.4	10.5	0.9	0.0
	전문직	(63)	12.7	14.3	6.3	1.6	0.0
	관리직	(44)	9.1	22.7	13.6	4.5	0.0
	사무직	(328)	14.6	11.3	10.7	0.6	0.0
	판매직	(32)	3.1	12.5	15.6	3.1	0.0
	서비스직	(66)	16.7	19.7	12.1	1.5	0.0
	생산직	(53)	11.3	15.1	7.5	0.0	0.0
	주부·학생 등	(213)	17.8	17.8	10.8	0.9	0.5
	시간제 노동자	(57)	10.5	14.0	10.5	0.0	0.0
	기타	(33)	24.2	12.1	9.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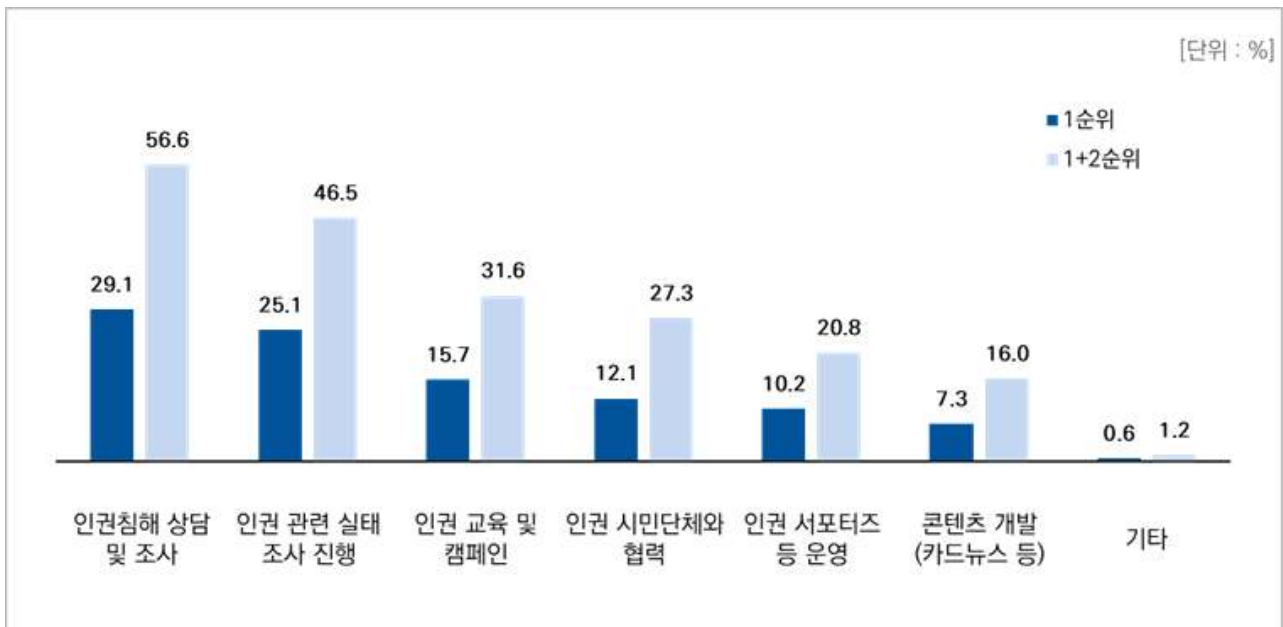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 3.6. 인권 침해·차별 관련 인천광역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 1) 전체 분석

인천광역시가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권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가 29.1%(1순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복 응답(1+2순위) 기준으로는 56.6%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 상담 및 조사 다음으로는 ‘인권 관련 실태조사 진행(25.1%)’이 주요 과제로 꼽혔으며, 이어 “인권 교육 및 캠페인(15.7%)’이 뒤를 이었다. 반면,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추진(7.3%)’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13〉 인권침해 관련 인천광역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 2) 응답자 특성별 비교

응답자 특성별(1순위 기준)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권 정책에 대해 성별에 관계없이 실질적 구제와 현황 파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항목에서는 여성(29.7%)과 남성(28.4%) 모두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인권관련 실태조사 진행'에 대해서는 남성(26.8%)이 여성(23.8%)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택하였다. 특히 40대(35.6%)에서 상담 및 조사에 대한 요구가 가장 강력했으며, 이어 10대(30.5%), 20대(29.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33.3%)의 경우 타 연령대와 달리 '인권관련 실태조사 진행'을 1순위로 꼽았다. 지역별로도 정책 수요의 편차가 관찰되었다. 중·동·강화·옹진(33.0%), 계양구(32.7%), 남동구(31.1%) 지역 시민들은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 선택하였다.

〈표 61〉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침해 관련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1순위)

구분		사례수 (명)	인권 침해 상담 및 조사	인권 관련 실태 조사 진행	인권 교육 및 캠페인	인권 시민단 체와 협력	인권 서포터 즈 등 운영	콘텐츠 개발(카 드뉴스 등)	기타
전 체		(1003)	29.1	25.1	15.7	12.1	10.2	7.3	0.6
성별	여성	(563)	29.7	23.8	16.7	12.4	9.6	7.1	0.7
	남성	(440)	28.4	26.8	14.3	11.6	10.9	7.5	0.5
연령	10대	(59)	30.5	25.4	13.6	11.9	10.2	8.5	0.0
	20대	(152)	29.6	28.9	9.9	14.5	10.5	6.6	0.0
	30대	(177)	21.5	33.3	18.1	9.6	9.0	7.9	0.6
	40대	(202)	35.6	21.3	13.9	11.9	9.4	7.4	0.5
	50대	(220)	28.6	21.8	16.8	14.5	10.9	5.9	1.4
	60대 이상	(193)	29.0	22.3	19.2	9.8	10.9	8.3	0.5
거주 지역	계양구	(98)	32.7	27.6	16.3	9.2	6.1	6.1	2.0
	남동구	(164)	31.1	26.2	15.2	11.6	9.1	6.7	0.0
	미추홀구	(136)	25.0	26.5	20.6	14.7	8.1	5.1	0.0
	부평구	(167)	28.1	21.6	13.2	18.6	10.2	7.8	0.6
	서구	(213)	27.2	23.9	16.0	11.7	12.7	8.5	0.0
	연수구	(134)	29.9	28.4	14.2	7.5	10.4	9.0	0.7
	중·동·강화·옹진	(91)	33.0	23.1	14.3	7.7	13.2	6.6	2.2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인권 정책의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비장애인(29.1%)과 장애인(28.6%) 집단 모두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1순위로 꼽았다. 학력과 직업군에 따라서는 '사후 구제(상담/조사)'와 '사전 예방 및 현황 파악(실태조사)'에 대한 선호가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대학 졸업

(30.8%) 및 고등학교 졸업(27.1%)과 주부·학생(33.8%), 관리직(31.8%), 사무직(29.9%) 직군에서는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중졸 이하(29.2%) 및 대학원 졸업 이상(27.1%) 층과 생산직(32.1%), 전문직(27.0%), 시간제 노동자(26.3%) 직군에서는 ‘인권관련 실태조사 진행’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주민의 경우 ‘인권관련 실태조사 진행(27.8%)’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응답했으며,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22.2%)’가 그 뒤를 이었다.

〈표 62〉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1순위)

구분		사례수 (명)	인권 침해 상담 및 조사	인권 관련 실태 조사 진행	인권 교육 및 캠페인	인권 시민단 체와 협력	인권 서포터 즈 등 운영	콘텐츠 개발(카 드뉴스 등)	기타
전 체		(1003)	29.1	25.1	15.7	12.1	10.2	7.3	0.6
장애 여부	장애인	(56)	28.6	17.9	16.1	8.9	14.3	14.3	0.0
	비장애인	(947)	29.1	25.6	15.6	12.2	9.9	6.9	0.6
이주민 여부	예	(18)	22.2	27.8	16.7	11.1	5.6	11.1	5.6
	아니오	(985)	29.2	25.1	15.6	12.1	10.3	7.2	0.5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26.2	29.2	15.4	7.7	10.8	9.2	1.5
	고등학교 졸업	(258)	27.1	21.3	17.8	12.4	14.3	7.0	0.0
	대학 졸업	(610)	30.8	26.1	14.9	12.6	7.9	6.9	0.8
	대학원 졸업 이상	(70)	24.3	27.1	14.3	10.0	14.3	10.0	0.0
직업	무직	(114)	27.2	27.2	12.3	15.8	10.5	5.3	1.8
	전문직	(63)	23.8	27.0	19.0	11.1	11.1	6.3	1.6
	관리직	(44)	31.8	13.6	22.7	15.9	4.5	11.4	0.0
	사무직	(328)	29.9	26.8	14.9	11.0	8.2	8.8	0.3
	판매직	(32)	28.1	12.5	15.6	9.4	18.8	12.5	3.1
	서비스직	(66)	25.8	19.7	18.2	15.2	13.6	6.1	1.5
	생산직	(53)	24.5	32.1	15.1	9.4	13.2	5.7	0.0
	주부·학생 등	(213)	33.8	24.4	15.5	10.8	10.8	4.7	0.0
	시간제 노동자	(57)	17.5	26.3	17.5	15.8	14.0	8.8	0.0
	기타	(33)	39.4	27.3	12.1	9.1	3.0	9.1	0.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인천광역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중복응답(1+2순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과 관계없이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에 대한 수요가 가장 압도적이었다. 여성(57.9%)과 남성(55.0%) 모두 과반수 이상이 실질적인 사건 처리와 상담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편 ‘인권관련 실태조사 진행’에 대해서는 남성(50.5%)이 여성(43.3%)

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 걸쳐 ‘인권침해 상담 및 조’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었다. 특히 40대(59.9%)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지역별 분석에서도 모든 지역에서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기능 확충을 1순위로 꼽았으며, 그중에서도 계양구(66.3%), 중·동·강화·옹진(61.5%), 남동구(57.3%) 지역 시민들의 요구가 특히 두드러졌다.

〈표 63〉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침해 관련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중복)

구분		사례수 (명)	인권 침해 상담 및 조사	인권 관련 실태 조사 진행	인권 교육 및 캠페인	인권 시민단 체와 협력	인권 서포터 즈 등 운영	콘텐츠 개발(카 드뉴스 등)	기타
전 체		(1003)	56.6	46.5	31.6	27.3	20.8	16.0	1.2
성별	여성	(563)	57.9	43.3	32.9	29.7	20.8	14.0	1.4
	남성	(440)	55.0	50.5	30.0	24.3	20.9	18.4	0.9
연령	10대	(59)	55.9	49.2	28.8	32.2	20.3	13.6	0.0
	20대	(152)	53.3	46.7	23.7	34.9	23.0	17.8	0.7
	30대	(177)	53.7	50.8	33.3	22.6	16.4	20.9	2.3
	40대	(202)	59.9	48.0	32.2	25.2	18.3	15.3	1.0
	50대	(220)	57.7	45.0	32.7	30.0	19.5	13.2	1.8
	60대 이상	(193)	57.5	41.5	35.2	23.3	27.5	14.5	0.5
거주 지역	계양구	(98)	66.3	42.9	29.6	29.6	14.3	15.3	2.0
	남동구	(164)	57.3	44.5	29.3	29.3	20.7	17.1	1.8
	미추홀구	(136)	52.9	47.8	36.0	30.1	18.4	14.7	0.0
	부평구	(167)	55.7	44.9	31.7	31.1	21.6	13.8	1.2
	서구	(213)	54.0	47.9	31.9	26.8	23.0	16.0	0.5
	연수구	(134)	54.5	51.5	34.3	20.1	19.4	18.7	1.5
	중·동·강화·옹진	(91)	61.5	44.0	26.4	22.0	27.5	16.5	2.2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인천광역시가 인권침해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장애인(60.7%)과 비장애인(56.4%) 모두 과반수 이상의 높은 비율로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선택하였다. 학력 수준과 직업적 특성에 따라 사후 구제와 사전 예방에 대한 선호가 일부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대학 졸업(60.0%), 중졸 이하(55.4%), 고등학교 졸업(51.2%) 학력층과 시간제 노동자(64.9%), 무직(62.3%), 생산직(60.4%), 관리직(59.1%) 등 대다수 직종에서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반면, 대학원 졸업 이상(51.4%) 고학력층에서는 ‘인권

관련 실태조사 진행'을 중점 추진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이주민의 경우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와 '인권관련 실태조사 진행'에 대해 각각 44.4%의 동일한 비중으로 응답하였다.

〈표 64〉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중복)

구분		사례수 (명)	인권 침해 상담 및 조사	인권 관련 실태 조사 진행	인권 교육 및 캠페인	인권 시민단 체와 협력	인권 서포터 즈 등 운영	콘텐츠 개발(카 드뉴스 등)	기타
전 체		(1003)	56.6	46.5	31.6	27.3	20.8	16.0	1.2
장애 여부	장애인	(56)	60.7	35.7	37.5	28.6	19.6	17.9	0.0
	비장애인	(947)	56.4	47.1	31.3	27.2	20.9	15.8	1.3
이주민 여부	예	(18)	44.4	44.4	27.8	38.9	11.1	27.8	5.6
	아니오	(985)	56.9	46.5	31.7	27.1	21.0	15.7	1.1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55.4	47.7	36.9	16.9	27.7	13.8	1.5
	고등학교 졸업	(258)	51.2	40.3	34.9	30.2	26.0	17.1	0.4
	대학 졸업	(610)	60.0	48.4	29.5	27.7	17.4	15.4	1.6
	대학원 졸업 이상	(70)	48.6	51.4	32.9	22.9	25.7	18.6	0.0
직업	무직	(114)	62.3	41.2	32.5	34.2	17.5	9.6	2.6
	전문직	(63)	54.0	50.8	28.6	31.7	19.0	14.3	1.6
	관리직	(44)	59.1	34.1	34.1	27.3	22.7	20.5	2.3
	사무직	(328)	54.0	52.4	32.0	25.0	15.9	19.5	1.2
	판매직	(32)	46.9	31.3	28.1	31.3	28.1	31.3	3.1
	서비스직	(66)	45.5	39.4	31.8	33.3	34.8	13.6	1.5
	생산직	(53)	60.4	52.8	28.3	20.8	28.3	9.4	0.0
	주부·학생 등	(213)	58.7	46.0	30.5	26.8	23.9	13.6	0.5
	시간제 노동자	(57)	64.9	36.8	36.8	22.8	22.8	15.8	0.0
	기타	(33)	63.6	51.5	33.3	24.2	12.1	15.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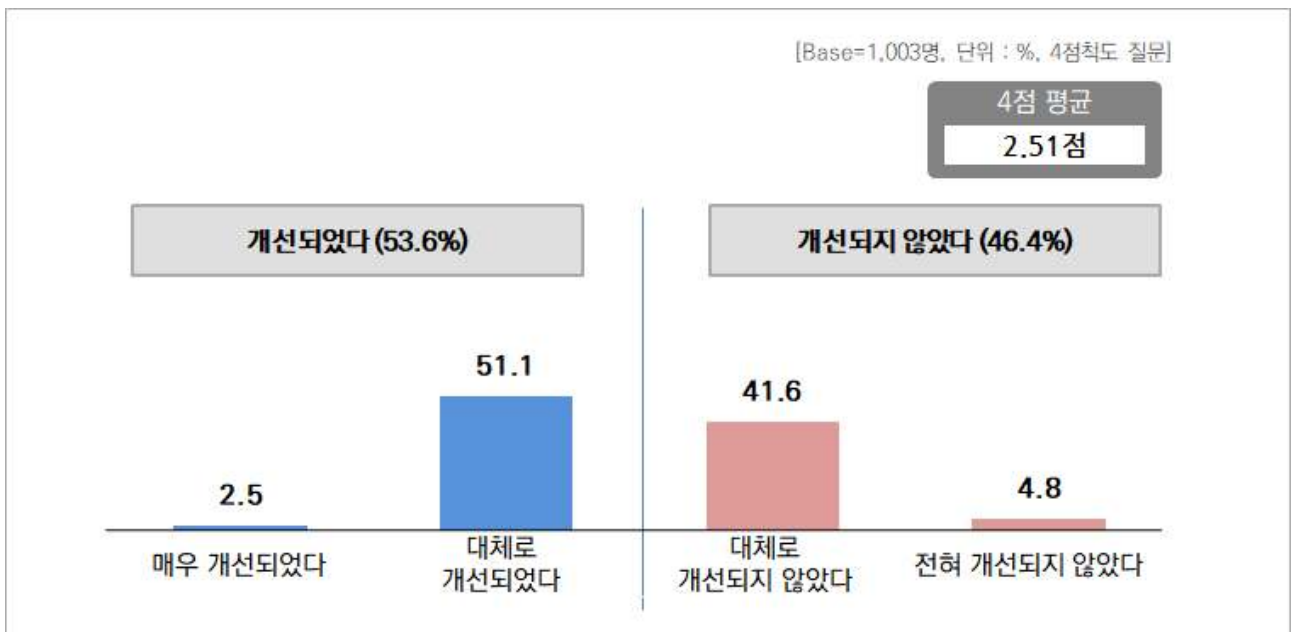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 3.7. 5년 전 대비 인천광역시 인권상황 개선 여부

#### 1) 전체 분석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5년 전인 2019년 대비 현재 인천광역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변화를 물어 본 결과, 절반이 넘는 53.6%가 ‘개선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매우 개선되었다’는 적극적 응답은 2.5% 수준으로 그친 반면, ‘개선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의견도 46.4%(대체로 개선되지 않았다 41.6%+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4.8%)에 달해, 긍정 평가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림 14〉 5년 전 대비 인천광역시 인권상황 개선 여부



#### 2) 응답자 특성별 비교

인천광역시의 인권상황이 5년 전 대비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남성 58.4%로 여성 49.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고령자층인 60대 이상(67.4%)에서 긍정율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다음으로는 20대(56.6%), 40대(52.5%), 10대(52.5%)로 개선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았다’의 부정비율은 30대 56.5%와 50대 50.9%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거주지역별로는 남동구(56.7%), 서구(55.4%), 미추홀구(55.1%)에서 개선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부평구에서는 ‘개선되지 않았다’의 부정비율이 50.3%로 응답되었다.

〈표 65〉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5년 전 대비 인권상황 개선 여부

구분		사례수 (명)	① 매우 개선되 었다	② 대체로 개선되 었다	③ 대체로 개선 되지 않았다	④ 전혀 개선 되지 않았다	긍정률 (①+②)	부정률 (③+④)	4점 척도 평균 (점)
전 체		(1003)	2.5	51.1	41.6	4.8	53.6	46.4	2.51
성별	여성	(563)	1.6	48.3	45.1	5.0	49.9	50.1	2.47
	남성	(440)	3.6	54.8	37.0	4.5	58.4	41.6	2.58
연령	10대	(59)	0.0	52.5	42.4	5.1	52.5	47.5	2.47
	20대	(152)	5.9	50.7	40.1	3.3	56.6	43.4	2.59
	30대	(177)	1.1	42.4	48.6	7.9	43.5	56.5	2.37
	40대	(202)	2.0	50.5	44.6	3.0	52.5	47.5	2.51
	50대	(220)	1.8	47.3	45.0	5.9	49.1	50.9	2.45
	60대 이상	(193)	3.1	64.2	29.0	3.6	67.4	32.6	2.67
	거주 지역	계양구	(98)	4.1	50.0	41.8	4.1	54.1	45.9
	남동구	(164)	3.0	53.7	36.6	6.7	56.7	43.3	2.53
	미추홀구	(136)	1.5	53.7	41.2	3.7	55.1	44.9	2.53
	부평구	(167)	1.8	47.9	47.3	3.0	49.7	50.3	2.49
	서구	(213)	1.9	53.5	40.4	4.2	55.4	44.6	2.53
	연수구	(134)	3.0	49.3	41.0	6.7	52.2	47.8	2.49
	중·동·강화·옹진	(91)	3.3	47.3	44.0	5.5	50.5	49.5	2.48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4점척도 질문]

5년 전 대비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 정도에 대해 장애인 경우 50.0%와 비장애인 경우 53.9%로 개선에 대해 긍정적이며, 학력별에서도 모두 50%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력별로도 중졸이하(55.4%), 대학원 졸업 이상(54.3%), 고등학교 졸업(53.5%), 대학 졸업(53.4%)로 50%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인권상황이 5년전 대비 개선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는 전문직(60.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시간제 노동자(57.9%), 판매직(56.3%) 순이며, ‘개선되지 않았다’의 부정적 평가는 관리직에서 52.3%로 평가되었다.

〈표 66〉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5년 전 대비 인권상황 개선 여부

구분		사례수 (명)	① 매우 개선되 었다	② 대체로 개선되 었다	③ 대체로 개선 되지 않았다	④ 전혀 개선 되지 않았다	긍정률 (①+②)	부정률 (③+④)	4점 척도 평균 (점)
전 체		(1003)	2.5	51.1	41.6	4.8	53.6	46.4	2.51
장애 여부	장애인	(56)	3.6	46.4	39.3	10.7	50.0	50.0	2.43
	비장애인	(947)	2.4	51.4	41.7	4.4	53.9	46.1	2.52
이주민 여부	예	(18)	5.6	50.0	33.3	11.1	55.6	44.4	2.50
	아니오	(985)	2.4	51.2	41.7	4.7	53.6	46.4	2.51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1.5	53.8	38.5	6.2	55.4	44.6	2.51
	고등학교 졸업	(258)	2.3	51.2	41.1	5.4	53.5	46.5	2.50
	대학 졸업	(610)	2.3	51.1	42.0	4.6	53.4	46.6	2.51
	대학원 졸업 이상	(70)	5.7	48.6	42.9	2.9	54.3	45.7	2.57
직업	무직	(114)	1.8	51.8	41.2	5.3	53.5	46.5	2.50
	전문직	(63)	6.3	54.0	34.9	4.8	60.3	39.7	2.62
	관리직	(44)	2.3	45.5	45.5	6.8	47.7	52.3	2.43
	사무직	(328)	1.5	50.3	44.2	4.0	51.8	48.2	2.49
	판매직	(32)	9.4	46.9	43.8	0.0	56.3	43.8	2.66
	서비스직	(66)	3.0	50.0	40.9	6.1	53.0	47.0	2.50
	생산직	(53)	3.8	47.2	43.4	5.7	50.9	49.1	2.49
	주부·학생 등	(213)	1.4	51.2	40.4	7.0	52.6	47.4	2.47
	시간제 노동자	(57)	1.8	56.1	40.4	1.8	57.9	42.1	2.58
	기타	(33)	6.1	63.6	30.3	0.0	69.7	30.3	2.76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4점척도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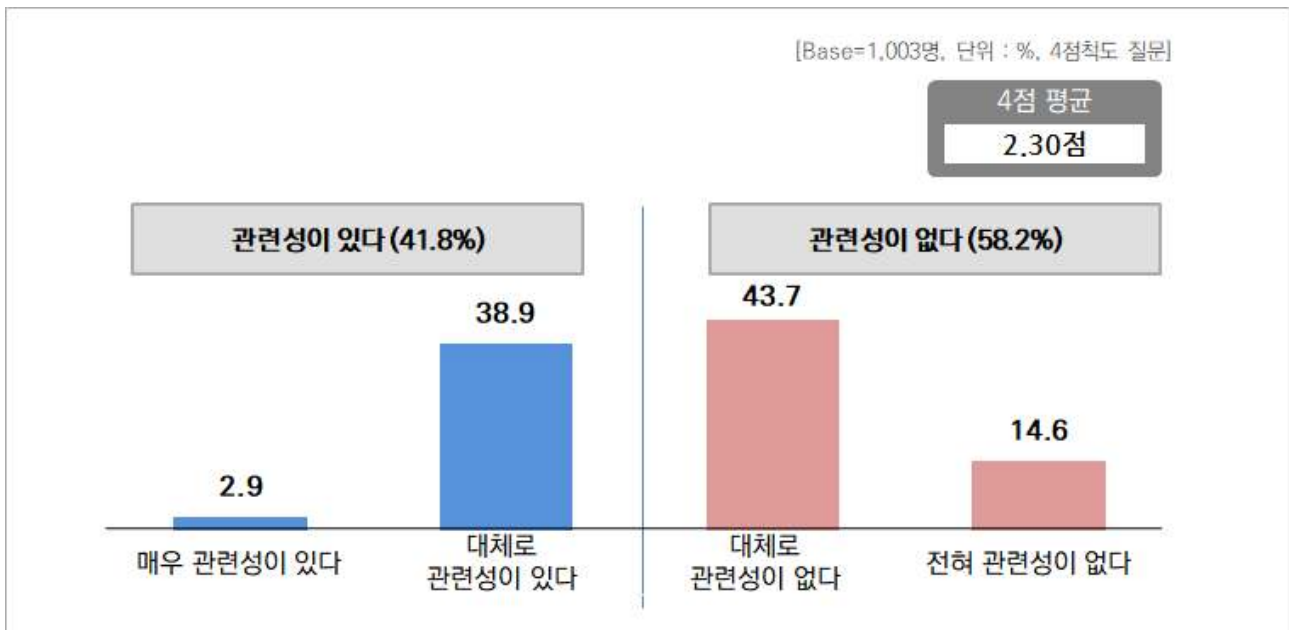
## 4. 인권교육 관련 질문

### 4.1. 본인 업무의 인권보장 관련성

#### 1) 전체 분석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본인이 종사하는 업무와 인권 보장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8%가 '본인의 업무와 인권 보장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답하였다. 시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자신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나 존중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나타난 반면, 본인 업무가 인권보장과 관련성이 없다는 응답은 58.2%로 관련성이 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15〉 본인 업무의 인권보장 관련성



#### 2) 응답자 특성별 비교

본인 업무와 인권보장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성별로는 남성(43.4%)이 여성에 비해 자신의 업무가 인권 보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59.5%가 ‘관련성이 없다’고 응답하여 직무 현장에서의 인권 연관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52.5%)만이 유일하게 과반수 이상이 본인의 업무와 인권보장의 관련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져 20대(51.3%), 30대(59.9%), 40대(59.9%), 50대(61.8%), 60대 이상(59.6%)의 전 성인 연령층에서 ‘관련성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 인천광역시 전 지역에서 시민들은 본인 업무가 인권보장과 ‘관련성이 없다’로 평가하였다. 지역별 격차를 살펴보면 연수구(67.2%)와 미추홀구(62.5%)에서 업무와 인권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응답이 특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표 67〉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본인 업무의 인권보장 관련성

구분		사례수 (명)	① 매우 관련성 있다	② 대체로 관련성 있다	③ 대체로 관련성 없다	④ 전혀 관련성 없다	긍정률 (①+②)	부정률 (③+④)	4점 척도 평균 (점)
전 체		(1003)	2.9	38.9	43.7	14.6	41.8	58.2	2.30
성별	여성	(563)	3.0	37.5	43.7	15.8	40.5	59.5	2.28
	남성	(440)	2.7	40.7	43.6	13.0	43.4	56.6	2.33
연령	10대	(59)	1.7	50.8	25.4	22.0	52.5	47.5	2.32
	20대	(152)	4.6	44.1	39.5	11.8	48.7	51.3	2.41
	30대	(177)	2.8	37.3	45.8	14.1	40.1	59.9	2.29
	40대	(202)	2.5	37.6	48.5	11.4	40.1	59.9	2.31
	50대	(220)	1.8	36.4	48.2	13.6	38.2	61.8	2.26
	60대 이상	(193)	3.6	36.8	40.4	19.2	40.4	59.6	2.25
거주 지역	계양구	(98)	2.0	40.8	49.0	8.2	42.9	57.1	2.37
	남동구	(164)	1.8	41.5	40.2	16.5	43.3	56.7	2.29
	미추홀구	(136)	5.1	32.4	50.7	11.8	37.5	62.5	2.31
	부평구	(167)	3.0	39.5	41.3	16.2	42.5	57.5	2.29
	서구	(213)	3.8	43.2	40.8	12.2	46.9	53.1	2.38
	연수구	(134)	2.2	30.6	46.3	20.9	32.8	67.2	2.14
	중·동·강화·옹진	(91)	1.1	42.9	40.7	15.4	44.0	56.0	2.3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4점척도 질문]

본인 업무와 인권보장과의 관련성에 대해 비장애인 응답자(42.5%)가 장애인 응답자(37.5%)보다 관련성이 있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분석에

서는 집단 간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학력층에서 본인 업무와 인권 보장의 관련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63.2%), 대학 졸업(57.5%), 대학원 졸업 이상(52.9%), 중졸이하(50.8%) 순으로 업무와 인권이 관련 없다고 응답이 높게 나타나, 학력 수준이 인권 연관성 인식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에 따라서는 업무와 인권의 연관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전문직(65.1%)과 관리직(54.5%)의 경우, 본인의 업무 수행이 인권보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을 넘었다. 반면, 시간제 노동자(70.2%)를 필두로 생산직(67.9%), 서비스직(66.7%)에서는 ‘관련성이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부·학생(60.1%), 판매직(56.3%), 사무직(56.1%) 또한 관련이 없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였다.

〈표 68〉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본인 업무의 인권보장 관련성

구분		사례수 (명)	① 매우 관련성 있다	② 대체로 관련성 있다	③ 대체로 관련성 없다	④ 전혀 관련성 없다	긍정률 (①+②)	부정률 (③+④)	4점 척도 평균 (점)
전 체		(1003)	2.9	38.9	43.7	14.6	41.8	58.2	2.30
장애 여부	장애인	(56)	3.6	33.9	44.6	17.9	37.5	62.5	2.23
	비장애인	(947)	2.9	39.2	43.6	14.4	42.0	58.0	2.31
이주민 여부	예	(18)	11.1	44.4	33.3	11.1	55.6	44.4	2.56
	아니오	(985)	2.7	38.8	43.9	14.6	41.5	58.5	2.30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3.1	46.2	29.2	21.5	49.2	50.8	2.31
	고등학교 졸업	(258)	2.7	34.1	46.5	16.7	36.8	63.2	2.23
	대학 졸업	(610)	3.1	39.3	44.1	13.4	42.5	57.5	2.32
	대학원 졸업 이상	(70)	1.4	45.7	42.9	10.0	47.1	52.9	2.39
직업	무직	(114)	1.8	32.5	43.9	21.9	34.2	65.8	2.14
	전문직	(63)	3.2	61.9	31.7	3.2	65.1	34.9	2.65
	관리직	(44)	9.1	45.5	38.6	6.8	54.5	45.5	2.57
	사무직	(328)	3.0	40.9	44.5	11.6	43.9	56.1	2.35
	판매직	(32)	3.1	40.6	50.0	6.3	43.8	56.3	2.41
	서비스직	(66)	1.5	31.8	59.1	7.6	33.3	66.7	2.27
	생산직	(53)	3.8	28.3	49.1	18.9	32.1	67.9	2.17
	주부·학생 등	(213)	1.9	38.0	36.6	23.5	39.9	60.1	2.18
	시간제 노동자	(57)	1.8	28.1	59.6	10.5	29.8	70.2	2.21
	기타	(33)	6.1	42.4	36.4	15.2	48.5	51.5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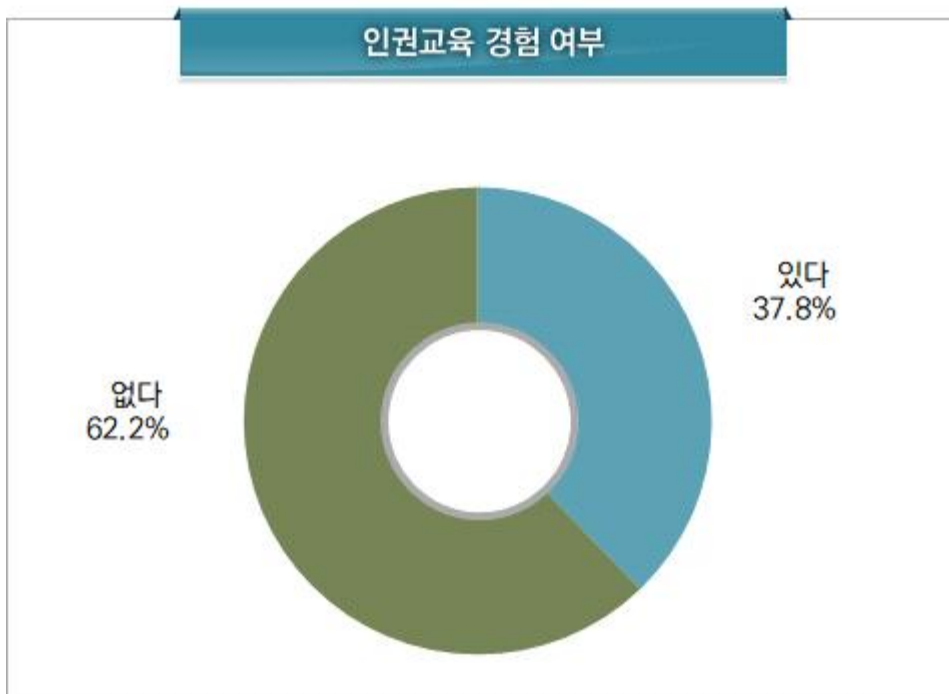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4점척도 질문]

## 4.2. 인권교육 경험 여부

### 1) 전체 분석

인천시민의 인권교육 이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8%만이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시민 10명 중 4명꼴로 교육을 접해본 셈이며, 반대로 응답자의 과반을 훨씬 넘는 62.2%는 인권 관련 교육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인권교육 경험 여부



### 2) 응답자 특성별 비교

인권교육 수강 경험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40.3%)이 남성(34.5%)보다 교육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세대 간 격차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10대의 경우 86.4%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전 연령

층 중 가장 높은 인권교육 경험율을 기록하였다. 이어 20대(53.3%)가 과반 이상의 경험율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반면 30대(65.0%), 40대(66.8%), 50대(71.8%), 60대 이상(71.0%)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 경험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 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인권교육 경험 비율은 낮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지역별로도 소폭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특히 중·동·강화·옹진(69.2%), 계양구(68.4%), 연수구(63.4%) 시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9〉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교육 경험 여부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전 체		(1003)	37.8	62.2
성별	여성	(563)	40.3	59.7
	남성	(440)	34.5	65.5
연령	10대	(59)	86.4	13.6
	20대	(152)	53.3	46.7
	30대	(177)	35.0	65.0
	40대	(202)	33.2	66.8
	50대	(220)	28.2	71.8
	60대 이상	(193)	29.0	71.0
거주 지역	계양구	(98)	31.6	68.4
	남동구	(164)	43.9	56.1
	미추홀구	(136)	41.2	58.8
	부평구	(167)	37.1	62.9
	서구	(213)	38.0	62.0
	연수구	(134)	36.6	63.4
	중·동·강화·옹진	(91)	30.8	69.2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인권교육 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 비장애인 응답자(38.0%)가 장애인 응답자(33.9%)에 비해 인권교육을 접해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분석에서는 중졸 이하(64.6%) 집단에서 인권교육 경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고등학교 졸업(65.5%), 대학 졸업(64.4%), 대학원 졸업 이상(55.7%) 등 대부분 '교육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직업별로는 전문직(55.6%)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해 가장 높은 수강률을 기록한 반면, 그 외 대다수 직종에서는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생산직(71.7%), 무직(70.2%), 시간제 노동자(70.2%)

집단은 10명 중 7명 이상이 인권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0〉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교육 경험 여부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전 체		(1003)	37.8	62.2
장애 여부	장애인	(56)	33.9	66.1
	비장애인	(947)	38.0	62.0
이주민여부	예	(18)	55.6	44.4
	아니오	(985)	37.5	62.5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64.6	35.4
	고등학교 졸업	(258)	34.5	65.5
	대학 졸업	(610)	35.6	64.4
	대학원 졸업 이상	(70)	44.3	55.7
직업	무직	(114)	29.8	70.2
	전문직	(63)	55.6	44.4
	관리직	(44)	31.8	68.2
	사무직	(328)	41.8	58.2
	판매직	(32)	31.3	68.8
	서비스직	(66)	30.3	69.7
	생산직	(53)	28.3	71.7
	주부·학생 등	(213)	39.4	60.6
	시간제 노동자	(57)	29.8	70.2
	기타	(33)	39.4	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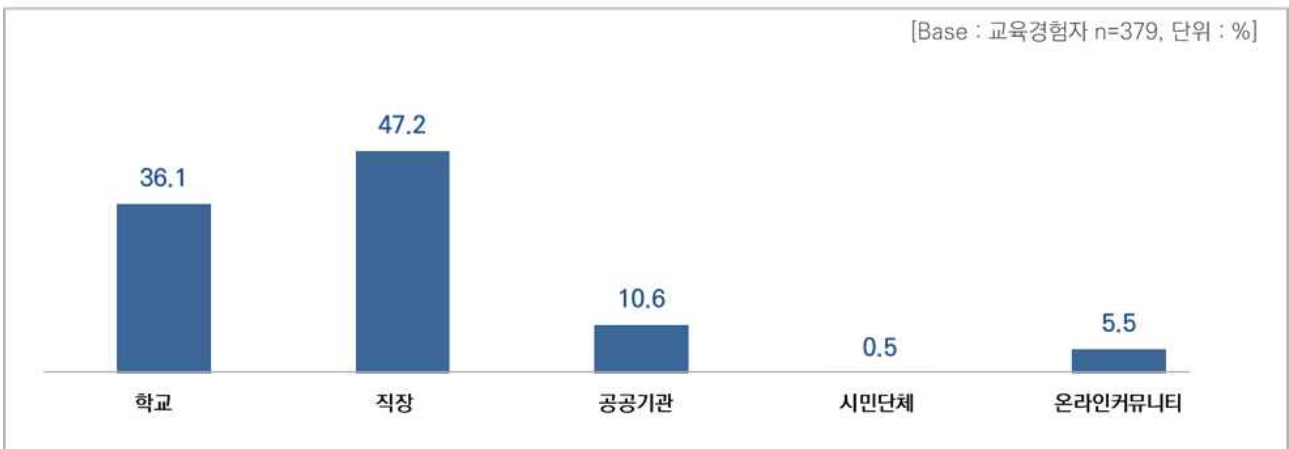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 4.3. 인권교육 경험 장소

#### 1) 전체 분석

인권교육을 경험한 인천시민들의 주요 수강 장소를 분석한 결과, 직장(47.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학교(36.1%)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8명 이상(83.3%)이 직장과 학교라는 공적 시스템을 통해 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공공기관(10.6)을 통한 교육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온라인 커뮤니티(5.5%)와 시민단체(0.5%)를 통한 교육 경험은 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인권교육 경험 장소



#### 2) 응답자 특성별 비교

인권 교육을 경험한 장소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45.4%)이 남성(22.4%)보다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았던 반면, 남성(55.3%)은 여성(41.9%)보다 ‘직장’을 통한 교육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으로 10대(98.0%)와 20대(61.7%) 등 저연령층은 대부분 ‘학교’를 주요 교육 장소로 꼽았고, 30대(61.3%), 40대(62.7%), 60대 이상(55.4%)에 이르는 성인층은 ‘직장’에서의 교육 경험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50대(69.4%)에서 직장 내 교육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대부분 ‘직장’이 주요 교육 장소로 조사되었으나, 연수구(42.9%)의 경우 ‘학교’와 ‘직장’의 비중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공공기관을 통한 교육 경험은 남성(15.1%), 60대 이상(23.2%), 남동구(18.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1〉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교육 경험 장소

구분		사례수 (명)	학교	직장	공공기관	시민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전 체		(379)	36.1	47.2	10.6	0.5	5.5
성별	여성	(227)	45.4	41.9	7.5	0.4	4.8
	남성	(152)	22.4	55.3	15.1	0.7	6.6
연령	10대	(51)	98.0	0.0	2.0	0.0	0.0
	20대	(81)	61.7	30.9	7.4	0.0	0.0
	30대	(62)	14.5	61.3	19.4	1.6	3.2
	40대	(67)	25.4	62.7	3.0	0.0	9.0
	50대	(62)	12.9	69.4	9.7	0.0	8.1
	60대 이상	(56)	5.4	55.4	23.2	1.8	14.3
거주 지역	계양구	(31)	38.7	45.2	9.7	0.0	6.5
	남동구	(72)	30.6	44.4	18.1	1.4	5.6
	미추홀구	(56)	35.7	51.8	7.1	0.0	5.4
	부평구	(62)	41.9	43.5	11.3	1.6	1.6
	서구	(81)	34.6	49.4	8.6	0.0	7.4
	연수구	(49)	42.9	42.9	8.2	0.0	6.1
	중·동·강화·옹진	(28)	28.6	57.1	7.1	0.0	7.1

[Base : 인권교육 경험자(379명), 단위 : %]

장애 여부와 학력 수준에 따라 인권교육을 접하는 주요 경로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비장애인 응답자(48.6%)는 ‘직장’을 통한 교육 경험이 가장 많았으나, 장애인 응답자(42.1%)는 ‘학교’와 ‘공공기관(36.8%)’을 주요 경로로 꼽았다. 학력별로 보았을 때, 중졸 이하(83.3%) 집단이 ‘학교’를 통한 교육 경험을 압도적으로 높게 꼽은 반면, 대학원 졸업 이상(64.5%) 및 대학 졸업(59.9%)의 고학력층은 ‘직장’에서의 교육 경험이 주를 이루었다. 직업별로 보면, 주부·학생 76.2%와 무직 67.6%로 ‘학교’라고 높게 응답하였고, 전문직(71.4%) 사무직(65.7%) 관리직(64.3%)에서는 ‘직장’ 내 교육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부·학생(76.2%) 및 무직(67.6%) 집단은 ‘학교’를 주요 경로로 답하였다. 특이점으로는 판매직의 경우 ‘직장’과 ‘공공기관’의 비중이 각각 40.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72〉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교육 경험 장소

구분		사례수 (명)	학교	직장	공공기관	시민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전 체		(379)	36.1	47.2	10.6	0.5	5.5
장애 여부	장애인	(19)	42.1	21.1	36.8	0.0	0.0
	비장애인	(360)	35.8	48.6	9.2	0.6	5.8
이주민 여부	예	(10)	30.0	20.0	50.0	0.0	0.0
	아니오	(369)	36.3	48.0	9.5	0.5	5.7
최종 학력	중졸이하	(42)	83.3	2.4	9.5	2.4	2.4
	고등학교 졸업	(89)	49.4	31.5	13.5	0.0	5.6
	대학 졸업	(217)	24.9	59.9	7.8	0.5	6.9
	대학원 졸업 이상	(31)	12.9	64.5	22.6	0.0	0.0
직업	무직	(34)	67.6	17.6	8.8	2.9	2.9
	전문직	(35)	17.1	71.4	8.6	0.0	2.9
	관리직	(14)	7.1	64.3	14.3	0.0	14.3
	사무직	(137)	21.2	65.7	9.5	0.0	3.6
	판매직	(10)	10.0	40.0	40.0	0.0	10.0
	서비스직	(20)	25.0	50.0	15.0	0.0	10.0
	생산직	(15)	13.3	60.0	6.7	0.0	20.0
	주부·학생 등	(84)	76.2	11.9	4.8	1.2	6.0
	시간제 노동자	(17)	23.5	47.1	29.4	0.0	0.0
	기타	(13)	15.4	61.5	15.4	0.0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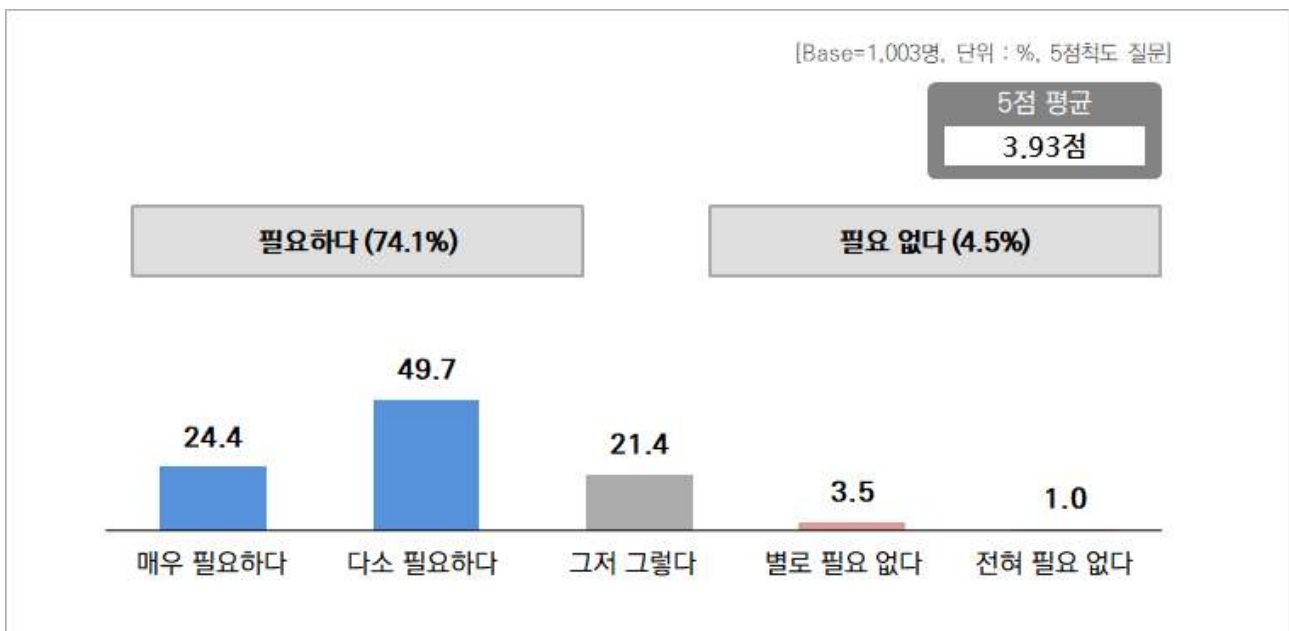
[Base : 인권교육 경험자(379명), 단위 : %]

## 4.4. 인권교육 필요도

### 1) 전체 분석

인천시민의 대다수는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인천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인 74.1%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다소 필요하다’는 의견이 49.7%,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 필요층이 24.4%로 나타났다. 반면, 인권 교육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4.5%의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림 18〉 인권교육 필요도



### 2) 응답자 특성별 필요도 비교

인권교육에 대해 성별로는 남성(72.0%)보다는 여성(75.7%)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응답되었고, 특히 60대 이상(79.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40대(75.7%), 10대(74.6%), 50대(72.3%), 20대(73.0%), 30대(6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인권교육

이 필요하다고 응답되었고, 그중에서 남동구(79.3%)가 서구(77.0%), 미추홀구(74.3%)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3〉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교육 필요도

구분		사례수 (명)	① 매우 필요 하다	② 다소 필요 하다	③ 그저 그렇 다	④ 별로 필요 없다	⑤ 전혀 필요 없다	긍정 률 (①+ ②)	중간 률 (③)	부정 률 (④+ ⑤)	5점 평균 (점)
전 체		(1003)	24.4	49.7	21.4	3.5	1.0	74.1	21.4	4.5	3.93
성별	여성	(563)	24.0	51.7	19.9	3.2	1.2	75.7	19.9	4.4	3.94
	남성	(440)	25.0	47.0	23.4	3.9	0.7	72.0	23.4	4.5	3.92
연령	10대	(59)	40.7	33.9	25.4	0.0	0.0	74.6	25.4	0.0	4.15
	20대	(152)	19.7	53.3	21.7	3.9	1.3	73.0	21.7	5.3	3.86
	30대	(177)	19.8	49.2	26.6	4.5	0.0	68.9	26.6	4.5	3.84
	40대	(202)	24.3	51.5	19.8	3.5	1.0	75.7	19.8	4.5	3.95
	50대	(220)	23.2	49.1	22.3	3.2	2.3	72.3	22.3	5.5	3.88
	60대 이상	(193)	29.0	50.8	16.1	3.6	0.5	79.8	16.1	4.1	4.04
거주 지역	계양구	(98)	20.4	50.0	23.5	5.1	1.0	70.4	23.5	6.1	3.84
	남동구	(164)	26.8	52.4	15.9	4.3	0.6	79.3	15.9	4.9	4.01
	미추홀구	(136)	21.3	52.9	22.8	2.2	0.7	74.3	22.8	2.9	3.92
	부평구	(167)	23.4	49.7	22.2	3.6	1.2	73.1	22.2	4.8	3.90
	서구	(213)	24.9	52.1	20.2	0.9	1.9	77.0	20.2	2.8	3.97
	연수구	(134)	26.1	43.3	22.4	8.2	0.0	69.4	22.4	8.2	3.87
	중·동·강화·옹진	(91)	27.5	42.9	27.5	1.1	1.1	70.3	27.5	2.2	3.95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5점척도 질문]

장애여부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응답자(62.5%) 대비 비장애인 응답자(74.8%)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도 모두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높게 응답하고 있고, 중졸이하(72.3%), 고등학교 졸업(73.6%), 대학 졸업(74.9%), 대학원 졸업 이상(70.0%) 모두 필요성이 높게 응답되었다. 직업별로 보면 시간제 노동자(82.5%), 전문직(77.8%), 사무직(75.9%), 주부·학생(75.6%)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고 있으나, 전 직종 모두 인권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4〉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교육 필요도

구분		사례수 (명)	① 매우 필요 하다	② 다소 필요 하다	③ 그저 그렇 다	④ 별로 필요 없다	⑤ 전혀 필요 없다	긍정 률 (①+ ②)	중간 (③)	부정 률 (④+ ⑤)	5점 평균 (점)
전 체		(1003)	24.4	49.7	21.4	3.5	1.0	74.1	21.4	4.5	3.93
장애 여부	장애인	(56)	30.4	32.1	32.1	3.6	1.8	62.5	32.1	5.4	3.86
	비장애인	(947)	24.1	50.7	20.8	3.5	1.0	74.8	20.8	4.4	3.93
이주민 여부	예	(18)	22.2	38.9	33.3	5.6	0.0	61.1	33.3	5.6	3.78
	아니오	(985)	24.5	49.8	21.2	3.5	1.0	74.3	21.2	4.5	3.93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32.3	40.0	21.5	1.5	4.6	72.3	21.5	6.2	3.94
	고등학교 졸업	(258)	23.3	50.4	22.5	3.1	0.8	73.6	22.5	3.9	3.92
	대학 졸업	(610)	23.0	52.0	20.3	3.9	0.8	74.9	20.3	4.8	3.92
	대학원 졸업 이상	(70)	34.3	35.7	27.1	2.9	0.0	70.0	27.1	2.9	4.01
직업	무직	(114)	22.8	42.1	29.8	4.4	0.9	64.9	29.8	5.3	3.82
	전문직	(63)	39.7	38.1	17.5	4.8	0.0	77.8	17.5	4.8	4.13
	관리직	(44)	25.0	45.5	27.3	2.3	0.0	70.5	27.3	2.3	3.93
	사무직	(328)	21.0	54.9	19.2	4.0	0.9	75.9	19.2	4.9	3.91
	판매직	(32)	15.6	43.8	34.4	3.1	3.1	59.4	34.4	6.3	3.66
	서비스직	(66)	25.8	45.5	21.2	6.1	1.5	71.2	21.2	7.6	3.88
	생산직	(53)	32.1	41.5	22.6	0.0	3.8	73.6	22.6	3.8	3.98
	주부·학생 등	(213)	26.3	49.3	21.1	2.3	0.9	75.6	21.1	3.3	3.98
	시간제 노동자	(57)	22.8	59.6	14.0	3.5	0.0	82.5	14.0	3.5	4.02
	기타	(33)	18.2	63.6	15.2	3.0	0.0	81.8	15.2	3.0	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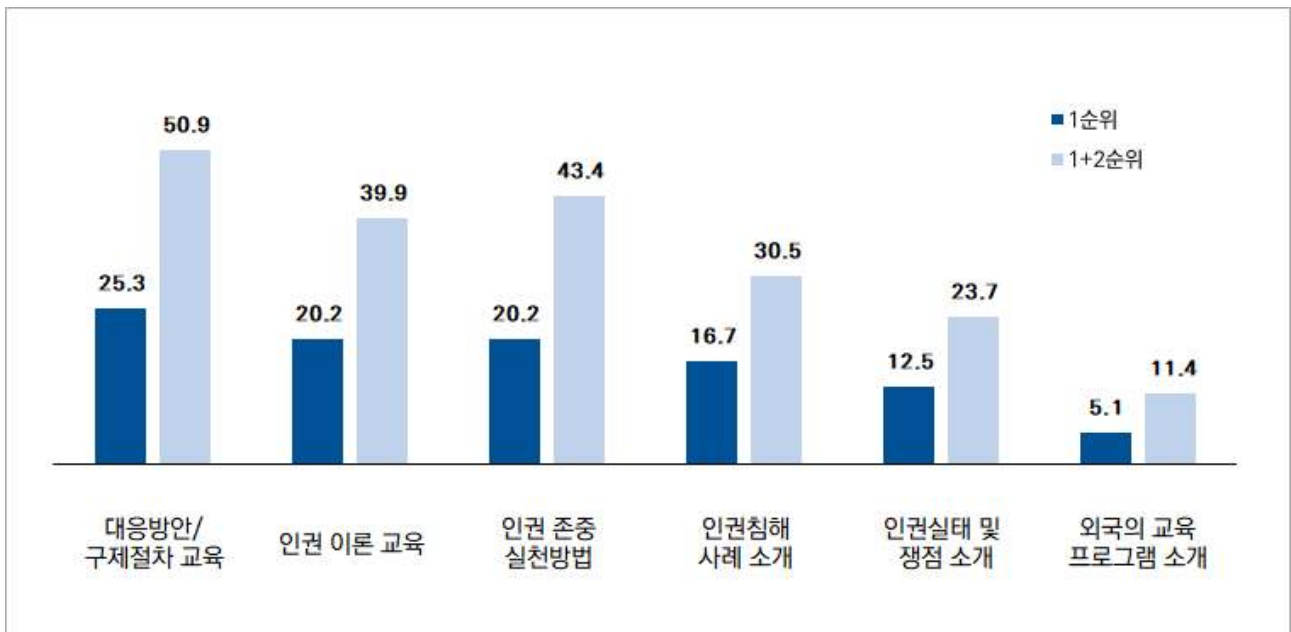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5점척도 질문]

## 4.5. 인권교육 실시 시 중요 내용

### 1) 전체 분석

향후 인천광역시 인권교육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시민들은 ‘인권침해 관련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 교육(25.3%)’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인권 이론 교육(20.2%)’과 ‘인권존중 실천방법(20.2%)’이 동일한 비중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침해 사례 소개(16.7%)’와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12.5%)’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나타났다. 반면, ‘외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에 대한 교육(5.1%)’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19〉 인권교육 시 중요 내용



### 2) 응답자 특성별 비교

인권교육 실시 시 중요 내용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1순위 기준)로 살펴보면, 인권침해 관련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 중요성 평가는 여성 25.8%와 남성 24.8%로 중요

내용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여성(21.1%)은 '인권존중 실천방법'을, 남성(20.9%)은 '인권 이론 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27.1%)는 '인권침해 사례 소개'를 가장 선호하는 반면, 20대(25.7%), 30대(28.2%), 40대(24.3%), 50대(25.0%)는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높게 꼽고 있고, 60대 이상(25.4%)에서는 '인권 이론 교육'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25.0%)의 경우,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권존중 실천방법'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계양구(23.5%)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응답하였다. 부평구(24.0%)는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과 '인권존중 실천방법'을, 연수구(24.6%)는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과 '인권 이론 교육'을, 중·동·강화·옹진(23.1%)은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과 '인권존중 실천방법'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침해 관련 인권교육 실시 시 중요 내용 (1순위)

구분		사례수 (명)	대응방안/ 구제절차 교육	인권 이론 교육	인권존중 실천방법	인권침해 사례 소개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 소개
전 체		(1003)	25.3	20.2	20.2	16.7	12.5	5.1
성별	여성	(563)	25.8	19.7	21.1	17.4	12.1	3.9
	남성	(440)	24.8	20.9	19.1	15.7	13.0	6.6
연령	10대	(59)	22.0	11.9	20.3	27.1	10.2	8.5
	20대	(152)	25.7	18.4	15.1	23.7	10.5	6.6
	30대	(177)	28.2	18.1	18.6	17.5	12.4	5.1
	40대	(202)	24.3	17.3	17.8	16.8	17.3	6.4
	50대	(220)	25.0	23.6	25.0	13.2	11.4	1.8
	60대 이상	(193)	24.9	25.4	22.8	10.9	10.9	5.2
거주 지역	계양구	(98)	22.4	23.5	18.4	18.4	10.2	7.1
	남동구	(164)	28.0	17.7	18.3	15.2	17.1	3.7
	미추홀구	(136)	26.5	22.1	17.6	16.9	14.0	2.9
	부평구	(167)	24.0	15.6	24.0	19.2	10.8	6.6
	서구	(213)	26.3	20.2	21.6	14.1	11.3	6.6
	연수구	(134)	24.6	24.6	17.9	16.4	13.4	3.0
	중·동·강화·옹진	(91)	23.1	20.9	23.1	18.7	8.8	5.5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인권교육 실시 시 중요 내용으로 응답자 특성별(1순위 기준)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 응답자(26.8%)와 비장애인 응답자(25.2%) 모두 인권침해 관련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가장 중요 내용으로 응답하였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에서는 ‘인권 이론 교육’과 ‘인권침해 사례 소개’가 각각 23.1%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자(22.1%)와 대학 졸업자(27.9%)는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인권교육의 중요내용으로 꼽았다. 반면, 대학원 졸업 이상에서는 ‘인권 이론 교육(25.7%)’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석결과, 무직(31.6%), 전문직(28.6%), 사무직(27.4%), 주부·학생(23.5%)은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중요 내용으로 인식하는 반면, 판매직(31.3%) 관리직(29.5%) 생산직(28.3%), 서비스직(25.8%)에서는 ‘인권 이론 교육’을 중요 내용으로 응답하였고, 시간제 노동자(22.8%)는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 ‘인권 이론 교육’, ‘인권존중 실천방법’을 동일한 비율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76〉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교육 실시 시 중요 내용 (1순위)

구분		사례수 (명)	대응방안/ 구제절차 교육	인권 이론 교육	인권존중 실천방법	인권침해 사례 소개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 소개
전 체		(1003)	25.3	20.2	20.2	16.7	12.5	5.1
장애 여부	장애인	(56)	26.8	17.9	17.9	14.3	8.9	14.3
	비장애인	(947)	25.2	20.4	20.4	16.8	12.7	4.5
이주민 여부	예	(18)	11.1	33.3	16.7	11.1	16.7	11.1
	아니오	(985)	25.6	20.0	20.3	16.8	12.4	5.0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21.5	23.1	20.0	23.1	9.2	3.1
	고등학교 졸업	(258)	22.1	20.2	21.3	16.7	12.0	7.8
	대학 졸업	(610)	27.9	19.3	20.0	15.9	13.1	3.8
	대학원 졸업 이상	(70)	18.6	25.7	18.6	17.1	11.4	8.6
직업	무직	(114)	31.6	15.8	14.0	14.0	18.4	6.1
	전문직	(63)	28.6	17.5	22.2	14.3	6.3	11.1
	관리직	(44)	11.4	29.5	27.3	9.1	18.2	4.5
	사무직	(328)	27.4	17.1	19.8	20.7	12.2	2.7
	판매직	(32)	28.1	31.3	18.8	6.3	6.3	9.4
	서비스직	(66)	22.7	25.8	19.7	10.6	10.6	10.6
	생산직	(53)	22.6	28.3	18.9	15.1	9.4	5.7
	주부·학생 등	(213)	23.5	19.7	22.5	16.4	12.7	5.2
	시간제 노동자	(57)	22.8	22.8	22.8	19.3	10.5	1.8
	기타	(33)	18.2	24.2	18.2	21.2	15.2	3.0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1순위]

인권교육 실시 시 중요 내용에 대해 중복응답(1+2순위)으로 분석한 결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 중요성에 대해 여성은 52.6%, 남성은 48.9%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인권존중 실천방법’에 대해 여성 44.0%, 남성 42.5%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인권교육의 중요 내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 비율은 10대 47.5%, 20대 50.7%, 30대 53.1%, 40대 47.0%, 50대 51.8%, 60대 이상 53.4%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중·동·강화·옹진(50.5%)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인권교육의 중요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연수구(48.5%)에서는 ‘인권존중 실천방법’이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과 동일한 비율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77〉 응답자 특성별(①성/연령/지역별) 인권교육 실시 시 중요 내용 (중복)

구분		사례수 (명)	대응방안/ 구제절차 교육	인권 이론 교육	인권존중 실천방법	인권침해 사례 소개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 소개
전 체		(1003)	50.9	43.4	39.9	30.5	23.7	11.4
성별	여성	(563)	52.6	44.0	38.7	30.4	24.5	9.6
	남성	(440)	48.9	42.5	41.4	30.7	22.7	13.6
연령	10대	(59)	47.5	40.7	28.8	42.4	23.7	16.9
	20대	(152)	50.7	36.2	34.9	39.5	23.0	15.8
	30대	(177)	53.1	41.2	35.6	33.9	22.6	13.6
	40대	(202)	47.0	40.1	38.1	29.7	31.7	13.4
	50대	(220)	51.8	50.9	42.7	25.9	21.8	5.9
	60대 이상	(193)	53.4	46.6	49.7	22.8	19.2	8.3
	중·동·강화·옹진	(91)	48.4	50.5	38.5	27.5	20.9	13.2
거주 지역	계양구	(98)	61.2	40.8	33.7	29.6	21.4	13.3
	남동구	(164)	51.2	43.3	40.2	29.3	29.9	6.1
	미추홀구	(136)	49.3	34.6	46.3	34.6	24.3	11.0
	부평구	(167)	52.1	41.9	36.5	34.1	24.6	10.8
	서구	(213)	48.8	45.1	41.3	28.2	21.1	15.5
	연수구	(134)	48.5	48.5	40.3	29.9	22.4	9.7
	중·동·강화·옹진	(91)	48.4	50.5	38.5	27.5	20.9	13.2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인권교육 실시 시 중요 내용에 대해 중복응답(1+2순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장애인 응답자(42.9%)와 비장애인 응답자(51.4%) 모두 인권침해 발생시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중요한 내용으로 응답하였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47.7%)에서는 ‘인권 존중 실천방법’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하는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46.5%)와 대학 졸업자(53.9%) 및 대학원 졸업 이상(45.7%)에서는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인권교육의 중요 내용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대학원 졸업 이상에서는 ‘인권 이론 교육(45.7%)’,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45.7%)’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시간제 노동자(61.4%), 관리직(56.8%), 판매직(53.1%), 무직(52.6%), 사무직(50.9%), 주부·학생(50.7%)에서는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전문직(50.8%)에서는 ‘인권존중 실천방법’을, 생산직(50.9%)은 ‘인권 이론 교육’을 중요 내용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서비스직(45.5%)은 ‘인권존중 실천방법’과 ‘인권 이론 교육’을 동일한 비율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78〉 응답자 특성별(②장애여부/이주민여부/학력/직업) 인권교육 실시 시 중요 내용 (중복)

구분		사례수 (명)	대응방안/ 구제절차 교육	인권 이론 교육	인권존중 실천방법	인권침해 사례 소개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 소개
전 체		(1003)	50.9	43.4	39.9	30.5	23.7	11.4
장애 여부	장애인	(56)	42.9	35.7	48.2	30.4	23.2	19.6
	비장애인	(947)	51.4	43.8	39.4	30.5	23.8	10.9
이주민 여부	예	(18)	22.2	44.4	72.2	22.2	22.2	16.7
	아니오	(985)	51.5	43.4	39.3	30.7	23.8	11.3
최종 학력	중졸이하	(65)	46.2	47.7	36.9	38.5	20.0	10.8
	고등학교 졸업	(258)	46.5	43.0	43.0	30.6	23.3	13.6
	대학 졸업	(610)	53.9	43.6	38.2	29.7	24.3	10.0
	대학원 졸업 이상	(70)	45.7	38.6	45.7	30.0	24.3	15.7
직업	무직	(114)	52.6	39.5	39.5	27.2	26.3	14.0
	전문직	(63)	49.2	50.8	34.9	25.4	19.0	20.6
	관리직	(44)	56.8	40.9	47.7	18.2	27.3	9.1
	사무직	(328)	50.9	41.2	39.3	35.4	24.1	9.1
	판매직	(32)	53.1	46.9	37.5	18.8	18.8	21.9
	서비스직	(66)	42.4	45.5	45.5	18.2	28.8	19.7
	생산직	(53)	41.5	41.5	50.9	34.0	20.8	11.3
	주부·학생 등	(213)	50.7	46.5	37.1	31.9	25.4	8.5
	시간제 노동자	(57)	61.4	50.9	36.8	31.6	12.3	7.0
기타	(33)	54.5	30.3	42.4	39.4	24.2	9.1	

[Base : 전체(1,003명), 단위 : %, 중복(1+2순위)]



## 1. 인천광역시의 인권 기본계획

인천광역시는 2019년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인권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토대를 구축하고, 2020년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2025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수립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25~2029)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시민의 인권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인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참여와 소통으로 모두가 누리는 인권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삼고, 인권의 가치가 단순한 정책 과제의 차원을 넘어 시정 운영 전반의 원리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평등·참여·소통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인권정책을 시민의 일상 속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 수준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크게 ▲시민참여형 인권정책 강화 ▲인권행정 및 제도 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강화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의 4대 전략 목표로 구성되며, 총 13개 정책 분야와 7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이 단일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제도·사회문화·생활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번 계획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진일보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수립체계 강화이다. 실태조사, 공론장 운영, 토론회 및 인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각적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인권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상시적 참여 구조도 포함되었다.

둘째, 인권행정의 제도화를 강화하였다. 인권센터 설치 추진, 인권영향평가 도입, 인권지표 개발, 인권보고서 발간 등이 정례화되며 행정적 지속성이 확보되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

하였다.

셋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 포함되었다. 급속한 고령화, 장애인 이동권 이슈, 이주민 증가, 청소년 안전 문제 등 현실적인 인권 이슈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넷째, 디지털 시대의 인권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다. 온라인 혐오표현,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는 이전 계획에서 다소 부족했던 영역이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독립된 정책과제로 반영되었다.

이처럼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 문제를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이 아닌 도시 운영의 전반적인 원리이자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로 설정한 점에서 정책적 성숙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 2. 주요 조사 결과의 의미

2025년 인천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인천시민은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였으나(73.8%), 인권 제도 및 조례 등 구체적 정책 체계에 대한 인지도(38.1%)는 여전히 낮아 제도 접근성 및 홍보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인권 침해·차별이 발생하는 주요 영역과 사각지대가 응답자 특성별로 뚜렷하게 나타나, 향후 인권정책은 집단별 현실을 세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인권 존중도에 대한 체감은 긍정 응답이 32.4%로 낮으며, 보통 응답비율이 51.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인권 환경이 시민에게 일관되게 긍정적 경험으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 침해·차별이 발생하는 장소는 ‘일상적 접촉 공간’인 복지시설, 직장내부,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 분포하였으며, 복지시설(41.0%), 직장내부(33.0%), 학교(17.4%), 공공기관(14.9%), 기업(13.9%)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노동·행정 환경에서의 인권 취약성 또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 역시 아동·청소년, 고령층, 장애인 등 전통적 취

약계층을 중심으로 응답이 집중되었다. 이는 응답자가 인천 지역의 인권 문제가 단순한 개별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구조적으로 축적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동시에 이주민,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면서, 인천시가 포용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전략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또한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시민의 대처 방식은 소극적 대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도적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 부족이 드러났다. 인권침해 발생 시 ‘그냥 넘어감’(17.8%) 또는 ‘직접 당사자나 해당기관에 문제 제기(40.9%)’하는 대응 방식이었으며, 공식적 신고·구제기관을 활용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시민이 제도적 보호 장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반적으로 본 조사는 인천시가 추진해 온 인권보장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인권 제도 인지도 제고, 직장·공공기관 등에서의 차별 해소,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강화, 실효적 구제체계 확립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이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교육 강화”, “법·제도 개선”, “행정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 점은 향후 정책 수립의 핵심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인천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25~2029)의 전략목표 설정 및 정책과제 구성에 있어 시민 경험 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며,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3. 정책적 시사점

#### (1) 기본적 인권보호 인식 제고 및 제도 접근성 강화

시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으나, 구체적 인권제도·조례·보장체계에 대한 인지는 낮았다. 이는 인권정책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하더라도 시민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면 정책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천시는 조례 및 제도 홍보 체계를 재구

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플랫폼·SNS·지역 커뮤니티·학교·직장 등을 활용한 다채널 홍보전략을 통해 제도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절차·보호체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고령층·장애인·이주민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맞춤형 안내체계 개발이 요구된다. 조사에서도 이들 집단의 조례 인지도는 낮거나 변동폭이 컸으며,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 홍보·안내체계는 다문화 서비스 연계, 고령층 오프라인 안내 채널 확대, 장애 친화적 정보 제공 방식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 각종 복지시설·직장·학교·공공기관 등 주요 생활공간의 인권침해 예방정책 강화 필요

시민이 인권 침해·차별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가장 빈번한 공간은 각종 복지시설과 직장, 학교 그리고 공공기관 등 생활공간이었다. 이는 인천시 인권정책이 개인 간 문제를 넘어 구조적 환경을 다루는 방향으로 심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각종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차별, 그리고 직장 영역에서의 연령·성별·비정규직 여부와 관련된 차별 등이 언론상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행정서비스 과정에서의 태도·절차상 불평등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노동환경 인권정책을 별도 축으로 강화하고, 공공기관 인권 경영 및 친인권 서비스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 기반 고객응대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차별·모욕·불평등을 예방하는 매뉴얼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직장 내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청년층·여성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 대상 인권경영 인증제 확대 등의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

## (3) 취약계층 중심의 인권보장 체계 재편

‘인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 조사에서 고령층,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응답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전통적 취약계층이 여전히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정책적 보호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주민,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 그룹에 대한 우선보장 필요성이 높게 제기됨에 따라, 향후

인천시는 기본계획에서 그룹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경우 돌봄·건강서비스의 인권 친화적 설계를,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시설 접근성 보장 강화를, 아동·청소년에게는 교육권·학교폭력 예방정책 강화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 (4) 인권침해 대응체계 개선 및 실효적 구제절차 확립

조사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해도 공식적 신고나 제도적 구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가장 높은 비중의 대응 방식은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감’ 또는 ‘비공식적 상담’이었으며, 이는 현행 구제제도가 시민에게 실질적 접근성과 신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천시는 인권침해 대처 및 구제절차를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재정비해야 한다. 인권센터의 상담 접근성 강화, 온라인 신고 시스템 고도화, 인권 인권보호관 기능 강화, 긴급보호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구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 (5) 인권교육의 체계적 설계와 실행 필요

인권교육 필요성은 응답자의 대다수가 매우 높게 평가한 영역이었다. 특히 교육 내용으로는 ‘인권침해 시 대응방안 및 구제절차’, ‘사례 중심 교육’, ‘기본적 인권 이론’ 등이 우선순위를 보였다. 이는 시민이 단순한 인식 제고를 넘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갖추는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학교·직장·공공기관 등 생활권 기반의 인권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인권·노동 인권·아동·청소년 인권 등 세부 분야별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6) 5년 전 대비 개선된 인권 환경의 유지와 확장 필요

시민의 다수는 인권상황이 5년 전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개선 폭은 집단별로 상이하였다. 이는 일부 분야에서는 정책이 성과를 보였으나, 취약계층 보호·차별 해소·제도 접근성 강화 등에서는 여전히 정책적 공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천시는 개선

된 분야는 더욱 고도화하고, 문제가 반복되는 영역(예: 공공기관 서비스 경험, 직장 내 차별, 온라인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정책 개입을 실시하여 인권환경 전반의 균형적 개선이 요구된다.

## 인천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설문지

본 조사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결과는 학문적·정책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향후 인천의 더 나은 인권가치 실현과 인권정책 기본방향 및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소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조사 대상 : 인천광역시 시민 15세 이상 남/녀
- ※ 조사 수행 기관 : 키테아랩
- ※ 조사 주관 기관 : 인천광역시

2025년 10월

인천광역시 시민소통담당관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여성  2) 남성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10대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이상

SQ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계양구  2) 남동구  
 3) 미추홀구  4) 부평구  
 5) 서구  6) 연수구  
 7) 중구  8) 동구  
 9) 강화군  10) 용진군  
 11) 기타 지역 (-> 면접중단)

**A. 인권 인식에 관한 질문**

A1.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①	②	③	④

인권행정의 법적·제도적 근거		인지 정도
1)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의 보호 (노동권, 건강권, 이동권, 주거권, 교육권 등)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①--②--③--④
2) (2019년 1월 제정, 시민의 권리와 협력,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인권교육 체계구축 등)		①--②--③--④





**C. 인권 침해·차별에 관한 질문**

**C1. 최근 3년 동안 귀하나 가까운 지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권 침해·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1) 인종/피부색, 출신국가         | <input type="checkbox"/> 2) 성별 (임신, 출산포함)      |
| <input type="checkbox"/> 3) 경제적 지위 (직업, 소득)      | <input type="checkbox"/> 4) 나이                 |
| <input type="checkbox"/> 5) 용모 (외모, 키, 몸무게 등)    | <input type="checkbox"/> 6) 종교                 |
| <input type="checkbox"/> 7) 학력/학벌                | <input type="checkbox"/> 8) 성적지향 (동성애자 등)      |
| <input type="checkbox"/> 9) 장애                   | <input type="checkbox"/> 10) 출신지역              |
| <input type="checkbox"/> 11) 혼인상태 (결혼, 이혼, 비혼 등) | <input type="checkbox"/> 12) 병력 (에이즈, 정신질환자 등) |
| <input type="checkbox"/> 13) 사상 또는 정치적 입장        | <input type="checkbox"/> 14) 구직활동 (면접 등)       |
| <input type="checkbox"/> 15) 기타 ( )              |  |

**C2. 최근 3년 동안 귀하나 가까운 지인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인권 침해·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검찰/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행, 구금, 심문을 당했다.
- 2) 언론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개인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공공기관에 의해 제한 당한 적이 있다.
- 3)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서 사생활이 공개되었다.
- 4)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 5) 자신의 종교나 신앙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거나 신앙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 6)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자유를 제한당한 적이 있다.
- 7) 단체 결성 또는 단체 가입의 자유를 제한당한 적이 있다.
- 8) 군대,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폭행당한 적이 있다.
- 9) 사회복지시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10)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경험이 있다.
- 11) 일방적인 해고통보, 임금체불 등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12) 기타 ( )

**C3. 귀하는 인권 침해·차별과 소득수준과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관계가 있다	대체로 관계가 있다	대체로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①	②	③	④



매우 개선되었다	대체로 개선되었다	대체로 개선되지 않았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DQ.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 특성 질문

마지막으로 응답자 특성 분류용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Q1. 귀하는 장애가 있으십니까?

- 1) 장애인  2) 비장애인

DQ2. 귀하는 의주민이십니까?

- 1) 예  2) 아니오

DQ3. 귀하의 학력별은 무엇입니까?

- 1)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중퇴 포함)  2)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포함)  
 3)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중퇴 포함)  4) 대학 졸업  
 5) 대학원 졸업 이상  6) 무학력

D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무직  2)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사 등)  
 3) 관리직 (기업체 간부, 고위공무원 등)  4) 사무직 (회사원, 은행원)  
 5) 판매직 (영업사원, 회사홍보원 등)  6) 서비스직 (가게주인, 음식점 주인 등)  
 7) 생산직 (공장근로자, 단순 노동자 등)  8) 농업 · 어업 등  
 9) 주부 · 학생 등  10) 시간제 노동자 (프리랜서 등)  
 11) 기타 ( )

\*\*\*\*\* 장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